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5개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尹 澈 守

2018年 2月

#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5개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敬浩

尹澈守

이 論文을 言論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12月

尹澈守의 言論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7年 12月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시기에 나타난 미디어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탄핵사건 관련 담론들은 텍스트 구성에 있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시기별 주요 담론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쟁점이슈 담론 구성에 있어 신문사의 정파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4년 11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이며, 시기별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를 4시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5개 신문이고, ‘1면’ 뉴스, 사설, ‘오피니언’ 지면의 내부칼럼과 외부칼럼 등 총 2,642건을 최종 분석대상 기사자료로 선정했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방법론적인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량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의 흐름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담론구성에 있어 시기별, 신문사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탄핵사건 관련 뉴스담론의 유형(대주제)은 ‘대통령 의혹/책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측근비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립 갈등’, ‘탄핵’, ‘대기업/재벌 책임’, ‘국정수습’, ‘촛불/시국선언’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는 ‘대통령 의혹/책임’과 ‘대기업/재벌 책임’은 진보신문에서, ‘대립 갈등’은 보수신문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탄핵사건 관련 담론의 텍스트 구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최순실 국정개입’이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 ‘대통령 측근에 제기된 의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운

회 문건’, ‘촛불집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제1시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어는 ‘정윤희 문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2시기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촛불집회’ 등의 순이었다. 제3시기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시기에서는 ‘대통령 구속 찬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각 뉴스텍스트에서 나타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부정/비판/반대’ 논조가 54.7%로 가장 많았고, ‘중립적’ 26.7%, ‘공정/옹호/지지’ 18.6%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이 제기되었던 2014년 비선실세 정윤희 국정농단 의혹,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두 케이스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여 이항대립(二項對立) 구도의 담론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정윤희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는 ‘정윤희 문건’을 매개로 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과 ‘짜라시’ 담론이 대립하는 구도가 나타났다. 뉴스담론 텍스트 구성은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진보신문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책임과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보수신문 중 <조선일보>의 경우 ‘정윤희 문건=짜라시’ 및 범죄행위로서 ‘문건 유출’을 강조하는 텍스트 구성 빈도가 높았다.

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보수, 진보신문 구분 없이 비판적 논조를 이어나가며 ‘최순실=대통령 책임’ 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해명 입장 등을 통하여 미르재단 대기업 모금 지원과 관련한 ‘강제 모금’ 담론은 ‘재계 주도’ 담론으로, ‘최순실=대통령’ 담론은 ‘최순실 개인 일탈’ 담론으로 각각 담론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실제 이항대립적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여러 가지 비리 및 특혜 사건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중대성이 크고, ‘촛불’로 상징되는 성난 민심이 이미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어떻게 담론적 실천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접합이론을 통한 담론 변화의 과정을 탐색했다. 이 결과 첫째, 2014년 11월 ‘정윤희 문건’ 파문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짜라시(허위 문건)’ 2개 축의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중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은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불리는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 ‘국정개입’, ‘십상시(十常侍)’를 접합시키고, ‘짜라시’ 담론을 탈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짜라시’ 담론은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을 탈접합 시키고, 대신 ‘문건유출 사건’과 ‘검찰수사’ 담론을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건유출이란 범죄행위로 돌리고 있었다. 둘째,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논란을 불러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논란에서는 ‘문체부 인사 게이트’ 담론과 ‘체육계 적폐’ 담론 2개 축을 중심으로 각각 논리성 강화를 위한 담론요소들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셋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사건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담론과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이 대립하였다. ‘최순실 게이트 담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인데, ‘대기업 강제모금’과 ‘청와대 개입’, ‘전경련 해체’를 접합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반면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은 ‘인식공격성 폭로 및 비방’, ‘대기업 순수 의지’, ‘문화 융성’ 등을 접합시키고, ‘최순실 친분’은 탈접합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네 번째로, 탄핵사건을 둘러싼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담론경쟁 구도 및 정파성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의 3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 사과는 1차 담화에서부터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크게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짓 해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진보언론은 물론 보수언론으로부터도 강력히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정수습 방안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은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의 차이가 확인됐는데, 진보언론은 ‘탄핵 촉구’ 담론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탄핵 당위성의 논리를 더욱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보수 언론은 ‘2선 후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절차 불가피’ 등으로 담론전략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세월호 7시간’ 논란에서는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담론을 편 반면, 보수언론 중 <조선일보>에서는 무분별한 의혹제기 담론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넷째,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관련한 이슈에서는 신

문사의 정파성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모금지원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나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보수언론 대부분이 ‘피해자’ 및 ‘경제위기’ 담론을 통해 재벌 총수들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를 취한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정경유착의 적폐로 규정하면서,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다섯째, 현재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담론에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승복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으나, 검찰의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에서는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진보언론에서는 ‘법과 원칙’, ‘법 앞의 평등’,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의 프레임을 연결하며 구속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는 담론 전략을 펼 반면, 보수언론들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는 담론을 형성시켰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의 대혼란 상황에서 나타난 언론의 뉴스담론 메커니즘을 규명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탄핵사건 관련 뉴스기사의 ‘텍스트 분석’에서부터, 담론의 생성 및 변화 흐름을 탐색하기 위해 홀(Hall)의 접합이론을 접목시켜 분석틀을 마련한 ‘담론적 실천’ 분석, 그리고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해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등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체계화시키고, 담론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담론, 접합이론, 정파성, 담론경쟁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논문의 구성 .....	7
<b>제2장 이론적 논의</b> .....	8
제1절 미디어 담론과 이론적 논의 .....	8
1. 담론의 개념과 유형 .....	8
2. 미디어 담론 .....	12
3. Foucault의 담론 질서 .....	16
제2절 담론경쟁과 정파성 .....	20
1. 담론 경쟁 .....	20
2. 언론의 정파성 .....	23
제3절 비판적 담론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	28
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	28
1) 텍스트 분석 .....	31
2) 담론적 실천 및 접합이론 .....	32
3) 사회문화적 실천 .....	35
2. 선행연구 검토 .....	36
<b>제3장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언론보도</b> .....	43
제1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요지 .....	43
제2절 언론보도를 통해 본 탄핵사건의 배경 .....	48
<b>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b> .....	52
제1절 연구문제 .....	52
제2절 연구방법 .....	54
1. 분석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	54
1) 분석대상 및 기간 .....	54

2) 분석대상 기사의 수집방법 및 선정 .....	56
(1) 분석대상 기사의 유형 .....	56
(2) 자료의 수집절차 및 선정 .....	57
2. 분석방법 .....	59
1) 내용 분석 .....	60
(1) 분석유목의 설정 및 측정 .....	61
① 담론유형의 주제별 속성 .....	61
② 보도 태도 .....	63
(2) 신뢰도 검증 및 자료의 분석 .....	64
2) 비판적 담론 분석 .....	64
<b>제5장 연구결과 .....</b>	<b>68</b>
제1절 탄핵사건 관련 담론의 유형 및 특성 .....	68
1. 분석대상 보도기사의 유형 .....	68
2. 탄핵사건 뉴스담론의 구성과 흐름 .....	71
1) 시기별 담론 유형 비교 .....	72
2) 신문사별 담론 유형 비교 .....	73
제2절 탄핵사건 뉴스담론의 텍스트 분석 .....	77
1. 담론유형별 세부주제 및 노출빈도 .....	77
2. 세부주제에 대한 보도태도 .....	82
3. 담론 텍스트 분석 .....	85
1) ‘정윤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담론 .....	85
(1) 보수언론의 ‘정윤희 문건’ 담론 텍스트 .....	87
(2) 진보언론의 ‘정윤희 문건’ 담론 텍스트 .....	88
2)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담론 .....	90
(1) 보수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담론 텍스트 .....	91
(2) 진보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담론 텍스트 .....	94
제3절 탄핵사건 담론적 실천 분석 .....	100
1. ‘정윤희 문건’ 국정농단 의혹의 담론적 실천 .....	100
1)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 .....	101

2) 찌라시 담론 .....	104
2. 문체부 국·과장 경질 논란의 담론적 실천 .....	106
1) 문체부 인사게이트 담론 .....	107
2) 체육계 적폐 척결 담론 .....	111
3.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의 담론적 실천 .....	113
1) 최순실 게이트 담론 .....	114
2)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 .....	118
제4절 탄핵사건 담론 경쟁 및 정파성 .....	121
1.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현실인식 .....	121
1) 제1차 대국민 담화 .....	122
2) 제2차, 제3차 대국민 담화 .....	126
2. 국정수습 담론전략 .....	129
3. ‘세월호 7시간’ 의혹 .....	138
4.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	143
1) 전경련 및 재벌기업 자금 모금 논란 .....	144
2)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	148
5. 탄핵심판 선고와 대통령 구속 .....	151
1) 승복 프레임과 헌재 결정 입장 .....	151
2) 대통령 구속수사 .....	155
<b>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b>	<b>159</b>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59
제2절 결론 및 함의 .....	17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178
참고 문헌 .....	180
부록 .....	190
Abstract .....	192

## 표 목차

표 1.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의 주요 연구사례 .....	37
표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	44
표 3. ‘최순실’ 등장 기사 빈도 .....	49
표 4. 시기구분 및 주요 사건일지 .....	55
표 5. 탄핵사건 관련 기사담론 유형 및 속성 .....	62
표 6. 시기별 신문사 보도건수 .....	69
표 7. 신문사별 보도유형 .....	70
표 8. 시기별 담론 유형 비교 .....	71
표 9. 신문사별 담론 유형 비교 .....	74
표 10. 뉴스담론의 세부 주제별 빈도 .....	77
표 11. 신문사의 뉴스담론 주제별 빈도 .....	80
표 12. 언론사별 보도태도 .....	82
표 13. 촛불집회 보도태도 .....	84
표 14. 삼성 자금지원 및 이재용 부회장 구속 보도태도 .....	85
표 15. 신문사별 국정수습 담론의 변화 .....	136

## 그림 목차

그림 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틀 재구성 .....	30
그림 2. 본 연구의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흐름도 .....	67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 때로는 매서운 ‘감시견(watchdog)’의 역할을 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을 알려주는 창(窓)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굳이 신문윤리강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언론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sup>1)</sup>과 현직 대통령 탄핵사건은 언론의 역할 및 ‘시대정신’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는 탄핵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 현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헌재 2017. 3. 10 선고 2016헌나 1 결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탄핵사유의 핵심이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헌재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데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비난하고 사실을 은폐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순실의 이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는 사실도 적시하였다. 이를 요약해보면, 대통령

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에 명시된 박 대통령 측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전 이름)의 국정개입 관련 사건들을 총칭하여 쓰기로 한다.

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허용·방조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의 이러한 위헌·위법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하였다<sup>2)</sup>.

이로써 전 국민적 분노와 항거를 불러온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 논란 파국은 결국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역사적 상황을 만들어낸 주역은 국정문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던 ‘촛불 광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윤철수·김경호, 2017).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및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내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29일 처음 시작되어,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10일 제20차 집회까지 누적 170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sup>3)</sup>.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항거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현재의 대통령 파면선고를 끌어낸 ‘성공한 주권자 혁명’이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한겨레, 2017. 10. 27)<sup>4)</sup>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탄핵결정이 내려지자,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촛불항쟁승리 선언문’을 통하여 ‘주권자 승리’를 선언하였다<sup>5)</sup>. 국내 언론들도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한겨레, 2017. 3. 11),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뤄낸 명예혁명”(경향신문, 2017. 3. 11),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중앙일보, 2017. 3. 11), “국민들이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한 것”(동아일보, 2017. 3. 11),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 혁명의 시작”(미디어오늘, 2017. 3. 10) 등의 의미를

2) 현재 탄핵결정 사유에 대한 쟁점내용은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3)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16년 10월29일 3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2차 20만명, 3차 100만명, 4차 96만명, 5차 190만명, 그리고 12월3일 6차 집회에는 232만명이 참여했고, 2017년 3월10일 20차 집회까지 누적 참가인원은 1700만 명에 이른다(비상국민행동, 2017. 05. 31. 홈페이지 <http://www.bisang2016.net> 게재 해산선언문).

4) 한겨레 (2017, 10, 27). <[사설] 촛불 1년,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보루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16403.html>

5) 비상국민행동은 ‘촛불항쟁승리 선언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를 수용한 것일 뿐,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라며 주권자 승리를 선언하였다(2017, 3. 10, <http://www.bisang2016.net>).

부여했다. 현재의 결정이 법리적 판결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란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보여준 ‘촛불 광장’의 주권자 행동은 시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국내 정치사(史)는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 이면에 언론의 주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에서부터, 대통령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의혹, 그리고 대통령의 위헌·위법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언제나 ‘단독 보도’와 같은 특종뉴스, 그리고 기획성 심층취재 같은 뉴스보도가 시발점이 있었다. 최초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정윤희 문건’ 관련 파문 보도였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당시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이 공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sup>7)</sup>. 이 때에는 ‘최순실’의 존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짜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2014. 12. 07)가 있는 후, 2015년 2월 이후 이 사건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다가 1년6개월여 만인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의 ‘청와대, 문화재단 미르에 500억 원 모금 지원 의혹’ 보도가 터져 나왔다<sup>8)</sup>. 이 보도로 최순실이 중심에 있는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의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하여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재단에 조직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미디어에 전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 후였다. <한겨레>는 9월20일 최순실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으며, 그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기획보도를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 등에서도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일명 ‘최

6) 세계일보 (2014, 11, 28). <[단독] 정윤희 ‘국정 개입’은 사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7005381>

7) 당시 <세계일보>는 단독 입수한 청와대 내부 동향보고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며, “속칭 ‘증권가 짜라시’에 떠돌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희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활용해 퍼트린 루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소위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10명이 루머를 퍼트리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8) <TV조선>은 당시 “미르재단은 국가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 문화재단으로, 설립 두 달만에 대기업에서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설립과 모금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순실 게이트'는 최고 관심이슈로 부상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 정도로 인식되던 이 의혹이 메머드급 이슈로 확산된 결정적 계기는 그해 10월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내용 공개 보도였다. 태블릿 PC에 저장된 내용을 통하여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 넘겨받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이처럼 사건의 과정에는 언론의 결정적 보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로 그쳤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심층적 취재 등이 더해지면서 국정농단 및 대통령 위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거대한 촛불 공론장이 급속히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언론보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러한 역할은 원론적 기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책무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단독 보도'를 준비했던 해당 언론사에서 뉴스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슈로 부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뉴스는 기본적으로 보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취사선택', 그리고 어떤 틀로 보도할 것인지를 '프레임(Frame)' 설정, 나아가 어떤 내용 혹은 어떤 논조를 펼 것인지 담론 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다<sup>9)</sup>. 이러한 메커니즘의 과정에서는 보도기사로 채택하는 취사선택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영철, 2013). 대통령이나 권력실세, 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등이 연관된 의혹제기 내용이라면 취사선택의 단계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기사로 채택할 것인지, 채택한다

---

9) 프레임은 본질적으로 공중의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는 속성이 전제되어 있다(이서현·고영철, 2013). 또한 언론이 설정한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들의 이해와 인식의 프레임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경호, 2011). 이러한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것이 바로 '담론'이다. 프레임이 형식이나 내용적 '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담론은 논점 내지 논조에 관한 것이다. 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담론은 프레임 구성을 통해 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면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고, 논조 등의 내용적 전략은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사실상 언론사 내부의 보도방침이 이 단계에서 모두 결정된다. 이 보도방침 결정 과정에서는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 즉 정파성을 비롯해, 권언유착의 정도, 취재원과의 관계, 광고주의 압력 등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기사 채택에서 배제될 수 있고, 채택되더라도 축소 보도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경쟁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슈 확산을 차단하거나 축소시킬 목적 등으로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방법의 전략적 대응도 나타날 수 있다<sup>10)</sup>.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는 담론의 설정(논조의 결정) 또한 수용자 인식 및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여론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처럼 뉴스가 완성되어 수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복잡한 메커니즘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을 전후한 시기의 언론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체계적인 담론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 신문은 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뉴스담론을 생성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론분석의 결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긴박하게 펼쳐진 탄핵정국의 혼돈 상황 속에서 언론의 편집보도 방향 또한 혼란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고, ‘논조 변화’가 적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논조 변경은 담론경쟁 내지 담론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 언론사 내부적 편집방향 내지 보도방침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쏠풍 공론장의 성난 민심 및 여론 향방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국내 주요 신문사에서 생성한 시기별 담론은 무엇이고, 담론 내용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탄핵정국 전반의 미디어 담론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행적 절차라 할 수 있다.

10) 언론이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소위 ‘무(無)보도’를 뉴스프레임 구성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이를테면 김수정과 정연구(2010, 2011)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기무사 민간 사찰’ 관련 보도프레임 연구에서는 신문사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언론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반면, 보수적 언론에서는 ‘보도 회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연구는 그동안 뉴스프레임 분석에서 ‘무보도’에 대한 영향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보도된 뉴스’ 못지않게 무보도 역시 영향성이 적지 않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셋째, 앞의 ‘논조 변화’ 논의와 연계해,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 즉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에 대한 세부적 분석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신문들은 보수적, 진보적 언론으로 나뉘며 정파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왔고<sup>11)</sup>, 권력형 비위 사건이나 정치현안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양분되어 대립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에서는 주요 신문들의 담론 전략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태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탄핵사건의 최종 종착 시점에서는 각 언론사의 거시적 담론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형성되면서, 신문사 간 담론경쟁의 대척점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양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탄핵정국 관련 미디어 담론 연구에서는 담론경쟁 과정에서 정파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 정리해 본다면, 본 연구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한 최초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에서부터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수감에 이르는 과정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내 주요 일간신문들은 어떤 담론을 생성해 왔고, 시기별 어떤 담론전략을 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나타난 미디어 담론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담론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방법론적인 분석틀을 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분석틀에 따라 미디어 담론은 시기별 어떤 흐름과 특성을 보였는지, 신문사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이들 담론들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쟁점 이슈 관련 신문사의 담론전략을 살펴보면서, 이를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연계해 논의를 이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론이 국정농단 및 헌정질서 문란, 촛불 공론장의 국민적 저항이라는 상황 변수 속에서 구사한 담론전략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의 대혼란 상황에서 작동되는 언론의 뉴스담론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담론이론 정립 및 방법론적 논의를 확장시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1) 정파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제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제2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 언론학 분야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짚으면서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제기와 더불어 연구 필요성,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미디어 담론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 및 담론분석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에서는 담론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함께 담론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어 미디어 담론 및 푸코(Foucault)의 담론 질서에 관해 이론적 논의를 하겠다. 제2절에서는 기존문헌 고찰 등을 통하여 ‘담론 경쟁’과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 제3절에서는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방법론, 그리고 선행연구를 고찰함 속에서 본 연구에서 차용할 분석 방법론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쟁점과 현재 선고(결정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이 초래된 배경 및 전개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겠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분석방법, 분석유형의 개념 정의, 자료 분석 방법, 신뢰도 검증 등 세부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 연구결과는 제5장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계 및 제언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이나 후속연구 방향을 제시하겠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미디어 담론과 이론적 논의

#### 1. 담론의 개념과 유형

담론(談論, Discourse)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말이나 글, 또는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을 뜻한다. 담화(談話)나 언술(言述), 또는 언설(言說)이라는 말과도 혼재되어 사용하기도 한다(윤철수·김경호, 2017).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개념적 정의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측면이 있다. 미디어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물론이고, 기호학이나 언어학, 사회학 등에서 담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학문분야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거나 명료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느슨하게 정의되는 문제가 있다(백선기, 2015; 이기형, 2006). 인문학 영역에서는 언어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사회학 분야에서는 이데올로기나 권력이 개입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고, 학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담론의 용어 정의가 복잡한 방식들로 이론화되어 제시되는가 하면,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면서 특정화된 단일 의미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sup>12)</sup>.

이러한 논의 속에서도, 담론 개념에서는 공통적으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이나 이야기”라는 점이 강조된다(Said, 2003; 류용재, 2010; 류희림, 2013; 박옥규, 2015; 박현식·김성해, 2014; 백선기·이경락, 2009; 설양환, 2017; 이기형, 2006; 정재철, 2002; 최낙진, 2015; 최종환·김성해, 2014). 사이드(Said, 2003)는 “담론이란 직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개념작용과 논리적 판단을 거친 질서 있는 표현의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라고 정의했다. 반 다이크(van Dijk, 1988)는 담론은

12) 국내에서 ‘discourse’라는 개념은 번역되는 과정에서 ‘담화’ 또는 ‘담론’으로 명명되고 있는데, 보통 언어 연구에서는 담화로 번역되어 왔고, 후기 구조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 및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담론이라는 표현이 선호되고 있다(최윤선, 2014).

발화(發話), 즉 이야기를 전하는 주체와 대상, 문맥 및 맥락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담론을 “논증적인 언어체계”임과 동시에, “언표(statement)들의 집합”으로 설명했다(Foucault, 1971/2012). 언표란 언설이나 담화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說) 기호들의 집합(言), 즉 ‘언설’과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된다.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5/2004)는 담론이란 “세상을 행위자가 의미 짓는 대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통해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스투어트 홀(Hall, 1985)은 “담론이란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담론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논의를 보면, 담론을 “특정한 권력질서 내부에서 꾸준히 축적되어온 논리덩어리”(최종환·김성혜, 2014, 154쪽),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와 규칙의 자기 집합체”(설양화, 2017, 8쪽)<sup>13)</sup>, “발화되거나 문자로 쓰인 진술로, 특정 지식이나 사회적 실천 분야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어휘들의 집합체”(방희경·유수미, 2015, 41쪽), “과학적 언설을 통해 구성된 지식”(박현식·김성혜, 2014, 81쪽)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담론을 “특정 경향을 대변하는 언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재하는 것”(류희림, 2013, 28쪽), “사고와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적인 과정과 그 종국적 결과를 아우르는 의미들을 만들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백선기·김소라, 1998, 81쪽)이라는 내재적 특성을 강조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담론은 빙산 구조로서 가장 밑바닥 층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가정(presupposition)으로 조합된 세계관(world view) 또는 입장(position)이 위치한다. 그 위층에는 집약적 의미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가치(core values)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 프레임이 놓이게 되고, 몇 단어로 집약되어 나타나는 ‘구호(slogan)’와 이미지 집합체인 ‘상징(symbol)’이 담론의 꼭대

13) 설양화(2017)는 ‘언표’란 “언명(言明)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담론의 형성 가능성에 관한 기본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론은 일련의 말들로 구성되고, 문어에서는 한 문장보다는 일련의 문장들로서 통합된 의미 속에서 등장하며, 문법적·음운적·의미론적 규칙성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기 부분에 자리 잡는다(김성해·강희민·이진, 2007; 박현식·김성해, 2014; 서덕희, 2003). 담론의 형태나 모습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position)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Macdonell, 1987/2008). 담론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구조, 행위자와 제도, 이데올로기와 매개자 등이 복잡다단하게 얽힌 층위에서 사회적 사건과 실재를 형성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담론은 “이야기적이고, 문화적 요소로 구성되는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나 재현, 주장”(이기형, 2006, 109쪽) 등으로 정의된다<sup>14)</sup>. 사물에 의미부여를 결정짓는 방식으로서 담론은 서사, 이야기, 대화, 신화,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단어들과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정재철, 2012). 담론을 상황이나 지식의 대상, 또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관계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류용재, 2010). 푸코 역시 담론이 “다양하게 얽힌 층위에서 사회적 실재와 사건들을 형성한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담론은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양상을 띠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Foucault, 1971/2012). 이때 ‘구성적(constitutive)’라는 개념은 담론이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류용재, 2010).

언어학적으로 담론은 발화되거나 문자화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론적 요소로, “한 문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의미를 이루고 있는 집합체(textual unit)”로 정의된다(Crossley, 2005). 언어중심주의적 담론이론은 소쉬르(Saussure)의 언어모델의 원리를 확장시켜 사회이론에 적용한 담론이론으로, 소쉬르에 의하면 의미작용은 기표에 기의를 더하는 것이며, 말하고 쓰는 모든 발화(utterance)의 밑바닥에는 소리와 의미의 공통된 약호(code)나 일반체계가 깔려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의미란 언어에 앞서 존재하지 않고,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강진숙, 2006; 정재철, 2002)<sup>15)</sup>. 그러나 미디어 분야 연구에서 이러한 언어학적 접근은 한계에

14) 이기형(2006)은 “담론은 사물에 대한 인식, 사물을 파악하고 해독하는 방식을 구조화하며, 발화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지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제시함으로써 사회와 세계에 대한 강력한 해석의 틀과 체계를 제공한다”고 했다.

15) 언어중심주의적 담론은 힌디스와 허스트(Hindess & Hirst),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 Mouffe)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소쉬르의 언어모델 원리를 확장시켜 담론의 영역을 끊임없는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에 의해 관통되는 접합 과정으로 규정했다(정재철, 2002).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담론을 의미의 연쇄로만 파악하면서 실제 대상의 사회적, 제도적 과정의 맥락을 짚어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은·김성민, 2008; 정재철, 2002). 이러한 배경에서 미디어 담론 논의에 있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 푸코(Foucault)와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이론이다. 이들은 담론을 기호들의 체계 내지 언어구조적 차원이 아니라 사물을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푸코는 시대 변천과정에서 담론들이 어떤 조건들을 바탕으로 변환되었는지에 주목하였는데, 담론의 의미형성 과정에서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배제’의 절차를 거쳐 담론의 질서가 구축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Foucault, 1971/2012). 페어클라우는 사회적 권력 관계가 언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담론의 생성과정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방법을 제시하였다(Fairclough, 1971/2012, 1989/2011)<sup>16)</sup>.

한편,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정보들이 말과 글로 남겨지게 되면, 그것들이 모여서 특정주제의 담론으로 형성된다. 또한 하위 주제를 가진 담론들이 합해지면서 거대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지배담론으로 고착화되기도 한다(김영옥·함승경, 2014; 백선기·김소라, 1998; 이정민·이상기, 2014; 함승경·김영옥, 2014). 우세한 지배담론은 저항담론 또는 대항담론의 생성과 새로운 경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담론은 거시담론과 미시담론, 지배담론과 하위담론 등의 층위를 가지며, 사회적으로 순환되는 주장이나 입장, 시각들 속에 공공적 소통의 기능을 수행한다(이기형, 2006). 또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현실 맥락을 재구성함으로써 제도변화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강국진, 2016).

담론은 또한 성격에 따라 정치담론, 사회담론, 정책담론, 미디어 담론, 문화담론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누가 담론을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생산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담론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책담론(policy discourse), 학술담론(research discourse), 기업담론(business discourse)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소비자 기준으로 담론대상에 따라서는 공공담론(public discourse), 전문가담론(special discourse), 대중담론(mass discourse)으로

16) 푸코와 페어클라우의 이론에 대해서는 제2장 제1절 3과 제3절 1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구분이 가능하다(박현식·김성해, 2014).

담론의 유형 또한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테면 기사와 사설을 포함한 뉴스 메시지를 비롯해 평론과 기고문, 공인의 발언이나 연설문, 법원 판결문, 정부발행 문서, 전문가의 진단서나 소견서, 미디어나 온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여러 시각적 기호와 이미지 등도 모두 담론의 유형으로 설명된다(박옥규, 2015; 이기형, 2006; 이서현·김성해, 2017). 말과 언어 못지않게 영상을 통한 표현도 주요한 담론이 될 수 있다(Foucault, 1971/2012; 최낙진, 2015; 황인성, 2011)<sup>17)</sup>.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는 담론 유형들은 논리적인 설명력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2. 미디어 담론

다양한 유형의 담론 중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은 언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교육학 등 학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연구 분야로 꼽힌다. 이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텍스트와 영상, 광고 등을 통해 생성되는 담론이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담론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전파되는 매체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중심적 담론이 텍스트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적(靜的)’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미디어 담론은 시대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중의 의제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적(動的)’ 성격이 강하다.

갨슨(Gamson)은 공공담론의 공적 영역을 회의, 연설, 공청회, 도서, 잡지,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중 미디어 담론은 사회현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Gamson, 1996; 김원용·이동훈, 2005, 167쪽 재인용). 담론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의성 및 다원성으로 인해 미디어 담론은 언어적, 비언어적 텍스트 장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언론과 연관해서 는 뉴스 담론의 의미로 사용된다(Hartey, 1982; 김원용·이동훈, 2005, 169쪽 재인용). 미디어 담론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언어’의 규칙과 상징적 전달매

17) 푸코의 논의를 보면, 영상문화도 담론의 한 유형으로, 어떤 영상이미지를 보이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차별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체의 형식을 지닌 담론은 수용자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기서 생산된 담론은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김해연·강진숙, 2016). 미디어 담론은 보통 사회적으로 순환되는 주장이나 입장 등이 공공적으로 소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거나 해석 및 논쟁점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되거나 투사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박옥규, 2015). 이를테면 전정보도에서는 특정 담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미디어를 통해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이봉현·김성욱, 2011).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조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뉴스담론이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반영한 포괄적 재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원용·이동훈, 2005)<sup>18</sup>).

반 다이크(van Dijk)는 기사담론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언론과 이데올로기, 독자 등의 관계를 파악한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뉴스 보도 자체를 미디어 담론의 유형으로 설명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뉴스담론의 의미론적 거시구조 분석은 헤드라인(headline)과 리드(lead)가 어떻게 기술되고 뉴스 보도의 원래 텍스트 소스들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요약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헤드라인은 리드 문장과 함께 전략적으로 본문의 요약형태를 띠면서 담론의 상황을 정의한다<sup>19</sup>. 즉, 텍스트의 요약적 서술(abstract description)을 통해 의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van Dijk, 1988). 이는 미디어 담론이 결국 뉴스 프레임(Frame) 구성을 통해 표출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레임이란 언론이 뉴스보도를 함에 있어 특정방향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틀을 말한다. 프레임 구성의 궁극적 목적은 수용자로 하여금 언론이 전하는 방향대로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사 내부에서 게이тки핑(Gate keeping)을 통하여 기사를 취사선택하거나, 뉴스정보의 내용에 대한

18) 김원용과 이동훈(2005)은 하틀리(Hartey, 1982)와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5/2004) 등 여러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미디어 담론의 속성을 정리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첫째, 미디어 담론은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다는 점이고, 둘째,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는 생성과 해석과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셋째, 미디어 담론의 텍스트는 공공담론과 구조적 등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19) 역사서 담론이나 소설담론이 보통 시간 순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기사담론은 중요도와 관련성(relevance)에 따라 관련 정보들을 재구성하는 특징을 보인다(송용희, 2007).

관점을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등 조정과 편집 일련의 행위가 모두 ‘틀 짓기’ 과정에 해당된다(윤철수·김경호, 2017). 고프만(Goffman, 1974)은 뉴스 프레임을 언론수용자가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해석의 틀’로 설명했다. 터크만(Tuchman, 1978)은 프레임이란 “뉴스를 통하여 수용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틀”이라고 했다. 기틀린(Gitlin, 1980)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 그리고 선택과 강조, 배제 등의 패턴화를 통해 담론을 조직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갠슨과 래시(Gamson & Modigliani, 1987)는 뉴스 프레임을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프레임은 이슈가 무엇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해석적 역할을 한다고 했다. 엔트만(Entman, 1991)은 뉴스 프레임의 주요 특성으로 선택(selection)과 현저성(salience)을 제시하면서, 언론이 사건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특정 요소를 선택·강조하거나 배제해 보도하면 수용자들은 선택·강조된 요소에 집중해 현실을 해석하게 된다고 했다. 동일한 주제의 뉴스보도라 하더라도 매체에 따라 전혀 상반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프레임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효성, 2016)<sup>20)</sup>. 이러한 맥락에서 뉴스담론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만드는 틀”로 규정하기도 하고(류희림, 2013)<sup>21)</sup>,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고영철, 2012)<sup>22)</sup>.

한편 뉴스는 현실을 구성하고, 사회적 권력관계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이봉현·김성욱, 2011). 뉴스를 대중 담론의 대표적 유형으로, 언론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거나 대중의 관심이나 무관심 형성에 개입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를 뉴스를 통한 ‘담론정치(Politics of discourse)’라

20) 각 기사에서도 제목, 사진, 표, 그래프, 삽화 등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는 방식의 뉴스의 틀(frame) 만들기가 이뤄지면서 독자들은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다르게 인지하고 생각하게 된다(고영철, 2012).

21) 이 논의에 덧붙여, 류희림(2013)은 “뉴스는 현실의 재구성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극본에 따라 연출되는 가공된 현실”이라고 했다. 설양환(2017)은 “신문 기사는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을 이해하도록 하는 일정한 틀(frame)을 제공하는데, 신문이 만들어낸 담론에는 특정사안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담겨 있다”고 했다.

22) 프레임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이준웅(2000)은 내용분석만을 고집할 경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내용분석 결과는 어떤 프레임 집합을 확인할 뿐, 그러한 텍스트 프레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나 검증이 없다면 이는 프레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작동하는 과정이 빠진 불충분한 연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 한다(이서현·김성해, 2017). 담론정치란 “지배집단은 자신들의 이해를 정당화하고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과 가치, 의미체계를 생산하고, 대항적 세력이나 집단들은 이에 저항적 응전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3). 언론의 담론정치의 방식으로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또는 의제설정기능(Agenda Setting)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언론은 대중들에게 공론장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여론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이다(이서현·김성해, 2017). 때문에 언론이 담론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sup>23)</sup>.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디어 담론은 사회적 맥락을 갖고서 사회에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다양한 담론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현실이 재구성된다(최은희, 2014). 즉, 미디어 담론 자체가 사회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세계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사회적 삶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고 표현되는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시자(presenter)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Bell & Garrett, 1998/2004). 또한 미디어는 사회적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재현과정에서 지배담론을 선택하여 제시한다(Hall, 1986/1996). 결국 담론은 언어나 기호의 단순한 집합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일정한 양태로서 이뤄지며, 사회적 문맥과 함의를 공유함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백선기, 1997).

주목되는 부분은 기틀린(Gitlin, 1980)의 논의이다. 그는 프레임(frame)을 ‘현실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로 설명하며, 언론은 프레임 구성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 등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패턴화 하여 담론을 조직한다고 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언론에서 만들어낸 담론은 대체로 정치·경제적인 지배구조와 이데올로기의 경계선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언론과 권력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언론이 만들어내는 담론이 지배체제 범주 안에서 용인되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 논의와 연관하여, 헬린(Hallin)은 언론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일탈의 영역(sphere of deviance)’, ‘법적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일치의 영역(sphere

23) 정재철(2011)은 복지정책 관련 미디어 담론연구에서 복지 포퓰리즘 담론을 한국 사회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에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담론정치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

of consensus)’으로 구분하여 기사화되는 주제와 그렇지 않고 무시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주류 언론의 자율성이란 정치·경제적 체제를 존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결국 현 상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에 가깝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Hallin, 1986; 허윤철·강승화·박효주·채백, 2012, 131쪽 재인용).

뉴스담론은 진공상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주체인 해당 미디어의 성향, 언론의 독립정도, 언론 자유 정도,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그 사회의 문화와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물로 바라보며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최은희, 2014). 또한 단일 특정사건에 관한 담론은 하나의 동일한 요소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맥락들이 그 사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뉴스 담론의 흐름 분석이나 궁극적인 함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여러 사회적 맥락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백선기, 2006). 같은 텍스트 또는 기호라 하더라도 발화하는 주체들이 누구이고, 그들의 정체성 내지 의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상이한 의미를 생성하기도 한다(김광우, 20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미디어 담론은 단순한 텍스트 구조 내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의 의제설정 및 사회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생성되는 뉴스담론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담론정치’와 연계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담론의 의미구조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뉴스 메시지의 상위 지배담론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그리고 해당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조 및 주변 사회적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3. Foucault의 담론 질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담론 분석의 인식론적 토대를 구축한 대표적 사상가로 꼽힌다(김해연·강진숙, 2016; 백선기, 2015). 그는 언어의 사용이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인식론적으로 접근하며, “담론이

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는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게 언어를 제공하는 일련의 진술들이며 이는 곧 사람들의 지식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고 하였다(Foucault, 1971/2012). 그의 논의에 따르면 담론은 일상 언어와는 성격이 다르며, 전문 지식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 제도 영역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언어 양식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담론의 규칙성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Foucault, 1966/2012)

푸코는 <담론의 질서>를 비롯한 여러 저서들을 통해 담론의 기본적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담론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차원으로 설명했다(Foucault, 1971/2012).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담론분석이 자리를 잡게 된 데에는 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김영은·김성민, 2008; 류용재, 2010; 이기형, 2006; 이정민·이상기, 2014; 설양환, 2017). 그는 각종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지식과 담론들이 만들어지는 조건들도 밝혀냈다. 시대적 담론들이 어떤 조건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또 이 담론들이 시대 변천에 따라 어떤 조건들을 바탕으로 변환되었는지에 주목하며, 사회적 여건에 따른 의미의 변형과정을 추적하면서 담론분석 논의를 체계화시켰다. 담론의 형성(formation)과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권력과 지식체계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했다(Foucault, 1971/2012). 이는 담론 형성 및 변환을 가능하게 해준 가능성의 조건들을 탐구하는 철학이라 할 수 있다(류용재, 2010; 백선기, 2015; 최은희, 2014).

푸코는 또한 담론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층위의 사회적 실재와 사건들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담론이 주체와 자아, 지식과 사회관계의 체계를 형성하는 방법이나 과정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김영은·김성민, 2008; 박옥규, 2015; 이기형, 2006). 이를 통해 담론이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푸코는 담론의 의미형성 과정에 권력의 힘이 작용하고, 담론의 실천적인 요소는 권력이 작용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Foucault, 1971/2012). 또한 권력을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설명했다(Foucault, 1975/2016)<sup>24</sup>. 그의 논의를 보면, 지배적인 권력이 발화하는 담론에 질서를 부여

24) 푸코는 “권력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일한 힘의 행태가 아니라 온갖 작전과 장치, 기능과 기술로 작동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의 형태”로 정의했다.

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하는 질서가 구축된다. 미디어 텍스트의 담론 구조는 지배적인 권력이 미디어 텍스트 내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다양한 배제의 절차를 거쳐 그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푸코는 어떤 사회이든지 담론이 생성됨과 동시에 통제되고 선별되는 등의 과정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결국 담론의 질서는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배제(exclusion)’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했다(Foucault, 1971/2012).

푸코의 관점에서 뉴스담론의 프레임은 담론 외부적 요소인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에 의한 ‘배제’의 다양한 기제를 통해 뉴스보도라는 내부적 담론구조가 질서를 잡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sup>25)</sup>. 담론분석 또한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을 구축하고 대변하기 위해 담론에서 일정한 프레임이 배제되고 선택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Foucault, 1966/2012, 1971/2012). 담론 질서는 지배적인 권력을 대변하는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의 다른 프레임이 배제되고 있다고 본다.

푸코는 담론질서를 구축하는 외부적 요인의 배제 과정을 금지, 분할 또는 배척, 그리고 진위의 대립방식 3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지’는 그 사회에서 말하면 안 되는 어떤 것, 그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상황적으로 관례화된 것, 그리고 발화 주체가 갖는 특권적이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두 번째 ‘분할’ 또는 ‘배척’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과 규율에 적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담론권력을 제거하는 방식을 말한다. ‘진위의 대립’은 참된 담론과 거짓된 담론의 대립으로 설명했다. 이 세 가지 금지사항은 유동적이고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해서 서로 교차하고, 강화하며 상호적으로 작용한다(Foucault, 1993; 최은희, 2014, 151쪽 재인용).

이러한 외부적 배제의 속성과 더불어, 담론 내부에서 스스로 통제를 하는 내부적 과정들로 ‘주석(Kommentar)’, ‘저자(Autor)’ 그리고 ‘과목(Disziplin)’을 제시했다. ‘주석’은 마치 발화된 담론이 새로운 것인 양 여기게 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저자’는 텍스트의 통일

25) 재구성된 미디어의 현실은 지배계급이 원하는 상징과 이미지를 내포하는 기호들이 담론구성과 정이나 발화과정에서 더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미디어 담론에서 선택과 배제가 일어나게 된다(최은희, 2014).

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과목’은 어떤 명제의 진위를 식별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을 내세워 명제를 과목 안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Foucault, 1971/2012).

푸코의 논의는 담론이 투명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며, 담론에 욕망이 숨겨져 있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론 자체가 욕망의 대상이며 권력을 대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담론에 사용되는 기호가 사회적 제 관계를 상징하는 순간 담론 공간은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공간이며 권력의 공간이 된다는 입장이다(Foucault, 1966/2012, 1971/2012). 이를 종합해 보면 그의 담론이론은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역사적 조건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담론의 물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론 텍스트 자체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언어중심 담론이론과는 달리, 푸코는 담론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권력과 지식체계 간의 유착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강진숙, 2006).

한편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 연구에 집중한 푸코의 이론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언어학 내의 담론분석이 보여주는 세밀한 분석방법을 결여해 언어가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 분석할 수 없다”는 방법론적 한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강진숙, 2006; 서덕희, 2003). 또한 푸코의 지식-권력 담론연구에서는 담론이 각각의 입장들을 통해 ‘대립적’으로 표출되는 투쟁의 장이란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Said, 1983; 강진숙, 2006, 14쪽 재인용). 푸코의 담론이론이 지배 권력의 발화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지배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세력의 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푸코의 관점이 매우 의미 있게 평가되는 반면, 그의 이론적 관점을 담론분석의 도구로 사용된 연구사례가 극히 드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그럼에도 푸코의 담론이론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고, 그의 담론분석 논의는 페어클라우(Fairclough)에서 비판적으로 계승되면서 담론분석 방법론 체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푸코의 이론적 논의를 담론분석 틀로 적용해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리비아전쟁과 관련하여 카다피 악마화 과정에 관한 미디어 담론 분석을 수행한 이봉현과 김성욱(2011) 연구가 눈에 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카다피와 리비아 정부군이 어떤 담론과정을 통해 배제되어야 할 ‘타자(他者)’로 구성됐는지, 그리고 이런 담론구성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을 유도하고 정당화했는지에 맞춰졌다.

## 제2절 담론경쟁과 정파성

### 1. 담론경쟁

미디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맥스웰 매콤스(Maxwell E. McCombs)와 도널드 쇼(Donald L. Shaw)가 발표한 ‘의제설정(Agenda Setting)’ 기능이다. 언론이 어떤 특정 이슈를 중요하게 보도하거나 반복 또는 강조하여 보도할 경우 대중들도 그것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은 공중으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이슈를 부각시키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른 미디어의 중요한 기능은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활발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공론의 장’ 역할이다. 언론이 사회적 기능 중 집단이나 조직간에 마찰이나 갈등, 그리고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구성들의 사회적 컨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해내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박경숙, 2002). 공론장에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공중들이 참여하면서 의견대립과 충돌 등의 현상도 나타나는데, 언론은 사회적 담론 경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공론의 장이다(김영욱·임유진, 2009; 백선기, 2015; 송용희, 2007;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sup>27)</sup>. 앞의 의제설정 기능에서는 미디어가 공중의제를 결정하는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뒤의 공론의 장 기능에서는 프레임(frame) 구성을 통한 언론의 담론전략과 더불어, ‘공중의 선택’이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디어 프레임은 미디어 담론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의미를 창출하는 대표적 담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Goffman, 1974). 담론 전략 차원의 미디어 프레임들은 공적인 문제들을 정의하거나 진단하고 평가나 정책 제안을 포함하면서, 담론들에 담겨있는 사회적 관심들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Entman, 1991). 언론이 같은 사건에 대한 뉴스일지라도 관점과 결과에 대한 함의를 달리하여 보도를 하게 되면 수용자들

27) 언론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여론의 향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담론이 경쟁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담론들은 언론이라는 대표적인 공론장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쟁해 나가게 된다(박현식·김성해, 2014).

은 상이한 프레임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수용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소윤·김희정, 2012). 프레임은 또한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공공담론을 반영하는 해석적 틀”(Gamson & Modigliani, 1987)로도 설명되는데, “현실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로써 선택, 강조, 배제 등의 과정을 통해 담론을 체계화”하는 패턴을 보인다(Gitlin, 1980).

공론장에 참여한 공중은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와 담론들에 대한 판단과정을 거쳐 중요 이슈나 담론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각기 상이한 시각과 관점을 기반으로 한 담론들은 언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이형민 외, 2015). 이것이 바로 ‘담론 경쟁’이다. 담론 경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요 사회적 이슈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문제해결 접근방법의 차이 및 입장차 등으로 인해 하나의 이슈에 있어서도 여러 담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28)</sup>. 담론은 생명체처럼 태어나고, 다른 담론과 경쟁하며, 지배적 담론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강화되거나 소멸하는 생명주기(life cycle)를 갖는다(김성해, 2013). 또한 담론은 본연의 논리와 구성력을 가지고 투쟁과 협상에 참여하며, 패배한 담론은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경쟁에서 승리한 담론은 사회적으로 ‘진리효과(truth effect)’를 얻게 된다(방희경·유수미, 2015)

담론경쟁의 장은 직접적인 이슈의 장이 아니라 그 논쟁이 벌어지는 맥락을 정의 내리는 지점을 말한다(이기형, 2006). 다이안 맥도넬(Macdonell, 1986)은 “담론은 그 특성상 하나의 어떤 특정 담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른 담론들과 갈등 또는 대립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고 했다<sup>29)</sup>. 즉,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대립 경쟁 속에서 존재가치를 지니며 동시에 의미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정 담론은 지배계급이나 정부 혹은 엘리트 집단에 의해 주도되긴 하지만 그에 대한 저항담론이 출현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담론들 사이의 경쟁과 투쟁은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욱·함승경, 2014; 이기형, 2006). 지배적 담

28) 박옥규(2015)는 “어떤 공공정책을 놓고 서로 담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논리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시하기 위한 행위로서 일종의 ‘담론 투쟁(discursive struggle)’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29) 정재철(2012)은 “언어 사용의 한 특정분야인 담론의 화자 입장은 홀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대립되는 다른 담론과의 관계를 통하여 취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 하에서 적극적인 대항담론의 형성은 우세한 담론적 실천에 저항하는 하나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백선기·김소라, 1998).

담론 경쟁에 대해 학자들마다 조금씩 설명을 달리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지지를 받기 위해”라는 목적성을 강조한다. 담론경쟁을 “이슈가 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각 주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복수의 담론들이 존재하는데, 지배적 담론과 이에 대항하는 담론들이 공론의 장에서 정당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 또는 “담론경쟁은 진실을 구성해가는 과정”으로도 정의한다(김영욱, 2012). “담론들이 서로 대립하거나 맞물리면서 대항 담론을 생성하거나 지배 담론에 도전하면서 힘겨루기를 해 나가는 과정”(김영욱·함승경, 2014), “사회문화적인 실천 방법을 놓고 텍스트와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의미해석의 우세함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오수민·이하나·장기선·김영욱, 2012)으로 설명한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국민적 이슈현안 및 사건, 정책 등을 주제로 해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생성 및 경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이를테면 김영욱과 함승경(2015)의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담론분석 연구에서는 ‘사고 담론(국가책임 제외) vs 참사 담론(국가책임)’, ‘해경무능 담론 vs 공동체 속죄 담론’, ‘진상규명 담론 vs 보상 담론’, ‘기억 담론 vs 피로감 담론’ 등 경쟁하는 담론들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분석이 진행됐다. 함승경과 김영욱(2014)은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론의 틀을 이용해 밀양 송전탑 건설관련 갈등문제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 이슈에 있어서는 ‘주민반대 담론 vs 주민희생 담론’, ‘전자파 무해 담론 vs 전자파 유해 담론’, ‘지중화 불가 담론 vs 지중화 담론’ 등의 담론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강국진(2016)의 조세담론 연구에서는 증세 등의 이슈에서 세금폭탄 담론, 감세 담론, 증세 담론 등 3개 담론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욱과 함승경(2014)의 금연과 흡연의 담론경쟁 연구에서는 가격 인상과 재정 확충, 금연구역 확대와 권리 침해 등의 담론이 사회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공론장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해연과 강진숙(2016)의 아동학대 ‘원영이 사건’ 담론분석 연구에서는 언론보도가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및 혐오 담론, 아동학대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담론이 나타났으며 아동인권 담론과 친권 및 양육권 담론 및 부모교육 담론과

아동학대 정책담론 설정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담론경쟁에서는 의미와 해석의 공유 및 확산의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지지를 받게 되는 지배적 담론이 여론권력을 얻게 된다(김영옥, 2012; 함승경·김영옥, 2014)<sup>30)</sup>.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담론의 사회문화적인 맥락, 즉 공중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공론의 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담론은 사회문화적인 구성요소들과 결합하면서 담론 참가자들의 가치와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김영옥, 2012). 담론경쟁의 결과로 특정 담론이 우세하게 되어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었다면, 이러한 경우를 담론의 전이 혹은 담론의 이주(colonization)라고 한다(Motion & Leitch, 1996; 김영옥, 2010, 357쪽 재인용)<sup>31)</sup>.

## 2.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 담론 연구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정파성(partisanship)’이다. 정파성은 정치적 무리의 과별을 뜻하는 정파(政派) 또는 당파(黨派)와도 비슷한 의미이나, 보통 언론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이 뉴스 프레임이나 담론을 통해 과도하게 표출되는 부정적 측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학계의 논의를 보면 정파성을 “정당에 대한 정서, 인식 및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송현주, 2015a, 177쪽)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언론이 특정한 정치세력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 또는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관점, 가치, 기억 등을 편파적으로 전달하는 성향”(박현식·김성해, 2014, 80쪽), “언론이 특정한 정치세력 및 집단을 일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것”(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80쪽)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30) 반 다이크(van Dijk, 1993)는 “담론은 언어화된 상징적 매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서 사회적 실천의 형태이며, 담론을 통해 얻어지는 권력은 실질적 이해관계와 지배, 담론의 생산, 유포, 변형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의 불균등한 분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31) 김영옥(2012)은 “담론의 전이 또는 이주(colonization)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차원에서 담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내부적인 담론 자체 경쟁력, 둘째, 담론 간 경쟁력, 셋째, 외부 맥락과의 경쟁력이다. 즉 담론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다른 담론들과 경쟁력을 가지면서, 외부 맥락 차원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파성은 우리나라 언론사의 보도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김영욱, 2011; 채영길, 2012). 즉,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라 뉴스프레임 구성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파성은 방송 보다는 사설이나 칼럼, 해설보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신문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sup>32)</sup>. 특히 신문 사설이나 칼럼의 경우 신문사 입장 또는 글쓴이의 주관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 특성으로 인해 정파성 논란이 나타날 개연성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언론의 정파성은 이슈와 정치적 사건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보나 단서를 제공하는, 일종의 준거집단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송현주, 2015b).

언론사에서 정파성이 형성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 시각들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언론매체가 탄생할 때 이미 정파성의 방향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신문을 창간하면서 창간이념이나 편집방향, 보도규약 등을 정하여 게이트키퍼(Gate keeping)을 하는 순간 정파성도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창간이념이나 편집규약 등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를 놓고 입장을 달리하며 정파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소속된 개별 기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신문사 전체의 성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강화된 이유는 기성체제의 핵심영역과 그로부터 소외된 엘리트 집단 간 권력이동에 따른 헤게모니 투쟁, 그리고 한국사회가 아직 민주화 이후 복합적인 사회 갈등을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기제가 마련되지 못한 점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김영욱, 2011). 언론사 간의 정파적 대립을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배블록의 헤게모니 위기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강명구, 2004).

기존 연구에서 정파성 논의는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판적 입장과, 기계적 공정성에 대해 비판하며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비판적 입장에서 정파성의 가장 큰 문제는 총체적 진실은 외면한 채 특정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왜곡된 사실의 조합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된다는 점이다(최종환·김성해, 2014). 또한 이 같은 관행적 폐단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준웅(2005)은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 관련 논의에서, “더

32) 이정민과 이상기(2014)는 “신문은 칼럼이나 사설 등을 통해 정파성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담론형성의 요소 또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언론이 이제는 ‘당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sup>33)</sup>. 과도한 정파성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 하락 내지 위기를 초래한 점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김영옥, 2011; 박영흠·김균, 2016). 언론계에서도 정파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독자들은 지면을 펼칠 때마다 묻어나는 ‘뻘한 뉴스’에 피로감을 느낀다. 우리 신문이 정치적 정파성이나 자사이기주의 등에 덧씌워진 ‘상업주의’에 매몰돼 있기 때문인데 자사만이 보여줄 가치나 철학은 물론 나아가야 할 지향점마저 퇴색돼,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략- 신문의 정파성은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싸잡아 비난만 할 수 없다 -중략-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자들은 지면에서 떠났고, 기자들은 취재 현장에서 진보 혹은 보수신문이란 꼬리표 때문에 문전박대받기 일쑤였다.” (기자협회보, 2015. 01. 14)<sup>34)</sup>

“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비판하면 ‘야당 편향’이라는 단순논리로 이 문제를 볼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파주의’로 보는 이들이 많기에 조선일보와 같은 해괴한 주장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조중동은 죄다 악, 한경은 노상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조중동’과 ‘한경’을 동일선에 놓고 ‘정파주의 언론’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중립’적 양비론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미디어오늘, 2014. 11. 12)<sup>35)</sup>

반면 정파성의 수용자 영향성과 관련해 긍정적 시각도 이어진다. 노현주와 윤영철(2016)은 “언론이 어떤 이슈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의견을 다루는 것은 다양한 수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고, 다양한 관점에 노출된 수용자일수록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이정훈과 이상기(2016)도 “언론사가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 자체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저마다 정치적 입장을 갖고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이

33) 이준웅(2005)은 “2004년 총선 직전의 탄핵정국의 갈등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상대 정파에 속한 정당이나 언론에 대해 불리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문제 삼고 상대에게 유리한 일이라면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34) 기자협회보 (2015, 01, 14). <도 넘은 정파성에 떠나는 독자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469>

35) 미디어오늘 (2014, 11, 12). <손석춘 칼럼 : 정파주의 저널리즘의 정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26>

라고 했다. 이들은 “정파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파성이 시민들에게 관철되는 방식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6)</sup>.

한편, 대척점에 있는 신문들 간 정파성에 따른 논조 및 담론전략 등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이 결과 정파성에 따른 담론 구성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관련 보도에서는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각각 진보적 이념성과 보수적 이념성을 강하게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노현주·윤영철, 2016). 16대 대선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정파성을 드러내며 보수와 진보로 극명히 대립하면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후보를 비판하는 방법으로 지지하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한 사실도 확인됐다(최진호·한동섭, 2012).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언론의 담론도 정파성에 따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과 책임소재를 달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박현식·김성해, 2014).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신문사설 담론 분석에서는 신문사별 이념적 정파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문철수, 2009).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에 대해 보수·진보 신문간 뉴스분석에서도 정파성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송은지·이건호, 2014). 특정한 사건을 뉴스화 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사와 기자의 이념이 반영되거나 주관적 프레임이 나타날 수 있고, 지나친 정파성으로 인해 온전한 진실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서현·김성해, 2017; 최종환·김성해, 2014).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언론사의 정파성 인식과 수용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 매체지각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립적 내용의 신문사설에 대해서도 정치성향이 보수 또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중도적 성향의 사람에 비해 보다 적대적으로 혹은 우호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송인덕, 2014). <조선일보>와 <한겨레> 뉴스에 대한 이념담론 분석 연구에서는 두 신문은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대립되는 담론 구성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좌파/우파, 보수/진보, ‘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적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36) 박영흠과 김균(2016)은 서구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언론의 정파성이 한국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이 갖는 고유한 성격 때문으로,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이념과 노선보다는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저널리즘에서 정파성이 표출되는 형태는 논리적 근거에 기초한 이성적 비판이나 논쟁 보다는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 공격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정재철, 2002). <TV조선>과 <채널A> 두 종편채널을 대상으로 한 정파성 연구에서는 두 방송이 반대 정파로 삼고 있는 대상들은 야당, 야권의 정치인, 그리고 중북 세력이었고, 반대 정파를 묘사하는 방식은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이정훈·이상기, 2016).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간통죄 위헌심판 관련 신문사 간 뉴스프레임 비교분석을 한 결과 통진당 심판의 경우 ‘정파적 프레임 경쟁 구도’를 보인 반면, 간통죄 관련 프레임은 위헌에 대해 본질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 간통죄 위헌에 우호적인 ‘상호 지지적인 프레임 협력 구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용민, 2016). 미디어비평 저널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선거보도에서 특정 후보를 대변하는 정파적 보도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미디어오늘, 2015. 01. 21)<sup>37)</sup>. 이러한 가운데, 손석춘(2017)은 “진영 논리는 어떤 미디어의 보도와 논평이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면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으로 단정적으로 구분 짓는 방식의 ‘보수·진보 프레임’ 접근법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언론의 정파성은 이념적 이슈와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대결의 장은 물론, 대통령 측근비리를 비롯한 정치권력 관련 이슈 등의 보도에서 크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사별 담론지형은 정파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봄에 있어 정파성 변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37) 미디어오늘 (2015, 01, 21). <조선일보·한겨레, 20년간 보수·진보 정파보도 늘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22>

### 제3절 비판적 담론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 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담론분석은 인간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언어적 또는 언어적 의미를 갖는 비언어적 산물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심리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5/2004)는 담론을 의미 속에서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의미작용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담론분석을 “텍스트를 분석하고, 텍스트의 생산 및 소비, 그리고 분배과정의 분석, 담화 사례의 사회적 분석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담론분석은 또한 대중문화나 미디어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변형된 형태의 텍스트 분석, 또는 이데올로기 비판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역사적 사건이나 근대적 제도의 출현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메타분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이기형, 2006). 이러한 논의들을 묶어서 생각해본다면, 담론분석이란 결국 “담론과 실제 사이의 관계 내지 관련성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류용재·최진호, 2016; 이봉현·김성욱, 2011).

담론 분석적 접근은 누가, 어떤 시기에, 무엇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으로 무엇을 주장하였는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박옥규, 2015). 반 다이크는 담론분석은 음운 혹은 언어적인 면의 담론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생산되는 사회적 맥락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van Dijk, 1988, 1993). 담론분석 방법론의 체계는 알튀세르(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을 담론이론으로 발전 계승한 페쇠(Pêcheux), 그리고 푸코(Foucault)의 담론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페어클라우, 담론분석의 체계화를 꾀한 반 다이크의 담론이론을 대표적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강진숙, 2006). 담론 분석방법 중에서도 미디어 담론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방법론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이다. 이 분석방법은 영국과 호주의 비판언어학자들과 담론 분석가인 페어클라우,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자인 반 다이크의 접근법 등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이오현, 2017;

이정민·이상기, 2014)<sup>38</sup>). 담론에 내재하는 사회적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데 용이한 분석방법으로 평가되는 비판적 담론 분석은 권력관계(power relation)가 담론을 통해 매개되며 담론은 사회와 문화를 재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김성해, 2013; 이기형, 2006; 이선민·이상길, 2015; 함승경·김영옥, 2017). 또한 이 분석방법은 언어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이 서로를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사회적 권력 관계가 언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Fairclough, 2010)<sup>39</sup>). 사회적 관계, 이데올로기, 사회제도와 사회조직, 사회적 정체성을 포함한 사회적 삶의 요소와 담론 사이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Fairclough, I., & Fairclough, N., 2012/2015).

반 다이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중요한 전제는 사회적 권력과 지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sup>40</sup>). 그런 맥락에서 이 분석방법은 담론을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하고 담론을 통해 재현된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비판하면서 담론 분석의 영역을 확장했다고 평했다(Dijk, 1993). 그의 논의에서 제시됐던 것처럼, 비판적 담론분석은 미시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인 언어 사용의 상호작용이 아닌 거시적인 중요성이 있는 사회 정치적 담론에 관심을 두며, 사회적 실천으로서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이데올로기를 일상화시키는 담론 전략에 관심을 두면서 담론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김영옥·함승경·김영지, 2017; 이오현, 2017)<sup>41</sup>).

38) 비판적 담론분석은 1991년 1월 암스테르담 대학이 주최한 한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논의가 본격화 되었는데, 당시 심포지엄에 참석한 반 다이크(van Dijk), 페어클라우(Norman Fairclough), 크레스(Gunther Kress), 류웬(Theo van Leeuwen), 보닥(Ruth Wodak) 등이 현재 비판적 담론 분석 분야의 대표적 학자들이라 할 수 있다(조종혁, 2011).

39) 페어클라우는 담론이 사회 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기도 하며 이데올로기를 통해 헤게모니를 형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Fairclough, 1995/2004). 헤게모니란 그람시(Gramsci)가 발전시킨 개념으로서, “일반 민중이 지배 집단의 지적 지도력에 의해 자발적,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동의하는 이념체계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정재철, 2011).

40) 반 다이크는 미디어 담론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 그는 담론이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담론 분석을 방법론적 요소가 강한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백선기·이경락, 2009). 그는 또한 뉴스담론 구조를 거시구조(macro-structure)와 미시구조(micro-structure)로 구분하고,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전반적 형태, 즉 텍스트의 도식(schematic) 구조로 살펴보고자 했고, 미시구조 분석은 본래 단어, 구, 절, 문장형식 등의 표면적인 구조에서 문체적 특성과 의미론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41) 비판적 담론분석이 기존 다른 담론이론과 확실한 차이점을 갖는 것은 면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넘어서 보다 거시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함승경·김영옥, 2014).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대표적 틀은 텍스트(text) 분석,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 분석 등 3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Fairclough, 1989/2011, 1992). 이 방법론은 담론이 텍스트의 일부임과 동시에 담론적 실천이자 사회문화적 실천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텍스트와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담론에 사용되는 텍스트를 살펴보는 차원을 넘어 담론의 생성과정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오수민 외, 2012).

한편 페어클라우가 제시한 분석 틀의 세 가지 층위의 내용은 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3가지 분석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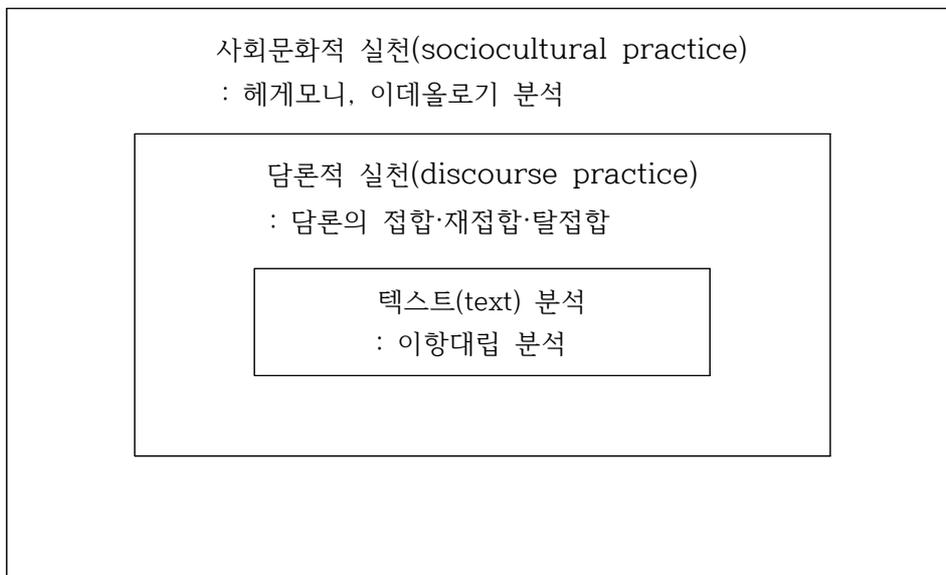


그림 1.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틀 재구성

### 1) 텍스트 분석

첫 번째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의 언어적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에서 내포하는 의미와 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언어로서 텍스트는 단순히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 및 신념, 사회적 관계, 정체성이 내포되어 나타난다. 페어클라우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시각이나 입장에서 담론들이 재현된다고 했다(Fairclough, 1995/2004). 또한 담론 텍스트 분석은 어휘(vocabulary), 문법(grammar), 결속성(cohesion), 텍스트 구조(text structure) 등의 영역에서 이뤄진다(Fairclough, 1992). 그의 논의에 따르면 특정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해당 단어가 상징하는 영역으로 담론을 고정시키게 되는데,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그리고 텍스트의 은유적 표현을 분석하는 것은 행위자가 생산담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 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된다. 또한 텍스트 구조의 해석은 전체 텍스트가 어떻게 일관되게 밀착되어 있는지를 풀어나가는 일이며, 텍스트 전체 일관성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Fairclough, 2001/2011).

텍스트 분석에서는 이항대립(二項對立, binary opposition) 구도분석을 통한 담론 추출방법이 자주 사용된다. 이항대립은 모든 텍스트 심층구조의 기본을 이루며, 텍스트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숨어있는 대립적 개념들을 찾아내어 공시적(synchronic)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김경용, 1994; ; 김영옥·함승경, 2014)<sup>42)</sup>.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항대립은 의미를 생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과 텍스트의 주요 주장들을 연결시켜, 이 주장들의 의미를 포괄하는 담론을 도출하게 된다. 이항대립 구도는 대립적 갈등을 빚는 이슈에 있어서는 찬반 형태 또는 대립적 논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주요 이슈의 담론 텍스트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복잡한 의미구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분석 방법론에 있어 언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기별 어떤 담론이 생성되고, 그 담론 속에 내재된 속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담론의 변화과정이나 이항대립 요소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42) 공시적(共時的, synchronic)이란 언어학자 소쉬르(Saussure)의 언어체계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구분법으로(김경용, 1994), 특정시기의 텍스트 표출양상을 횡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난 여러 텍스트들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언어 양상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전개양상 등을 살펴보는 ‘통시적(diachronic)’ 방식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담론적 실천 및 접합이론

비판적 담론 분석들에서 텍스트담론 분석이 언어적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두 번째 ‘담론적 실천’ 분석은 텍스트들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개별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되거나, 또는 텍스트들이 서로 결합하여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의 본질을 밝혀낸다는 것이다(이오현, 2017; 함승경·김영옥, 2014). 텍스트들은 담론적 실천 과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결합함으로써 의미의 중요성을 획득한다(김영옥, 2012). 또한 ‘텍스트 분석’과 ‘사회적 실천 분석’ 사이에서 두 요소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김해연·강진숙, 2016).

페어클라우(1992)는 이러한 과정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s) 개념으로 설명했다<sup>43)</sup>. 상호텍스트성이란 특정 텍스트 내에 다른 텍스트의 요소나 의미가 상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신진욱, 2011; 이오현, 2017). 이는 텍스트 간에 상호 참조나 상호 침투가 이뤄지거나, 다른 텍스트 의미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의 축적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류용재, 2010; 이오현, 2017). 상호텍스트성은 다양한 장르와 담론들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영옥·함승경, 2014).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와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하고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의미란 접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한 스투어트 홀(Hall, 1985)의 접합(Articulation) 이론과 일치한다(오수민 외, 2012). 접합이론은 비판적 담론분석의 ‘담론적 실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틀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접합이론의 틀을 차용해 담론적 실천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김영옥·함승경, 2014; 김영옥 외, 2017; 오수민 외, 2012; 정재철, 2001, 2002, 2011, 2012; 함승경·김영옥, 2014 등)가 다수 있다. 접합이론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접합(articulation)과 재접합(rearticulation), 그리고 탈접합(disarticulation)으로 제시된다.

43) 페어클라우(1992)는 담론적 실천분석 논의에서 상호텍스트성과 더불어 발화의 영향력(force of utterances), 텍스트의 일관성(coherence of texts)이란 세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이중 상호텍스트성이 발생하는 방식으로는 전제(presupposition), 부정(negation), 메타담론(metadiscourse), 아이러니(irony) 등이 제시됐다. 이들 요소 중에서 분석에 자주 이용되는 ‘전제’는 어떤 명백한 상호 텍스트적 단서 없이 독자의 과거의 축적된 텍스트 경험에 의해 텍스트의 담론을 당연한 것 또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오현, 2017).

홀에 의하면 접합이란 특정한 조건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담론 요소들에 연결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해내며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담론요소들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합 또는 재접합 되며 전략적으로 탈접합 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담론적 통일성(unity)을 갖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게 된다(Hall, 1986/1996). 통일성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담론 요소들은 서로 아무런 필연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으며, 이 통일성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접합함으로써 생겨난 연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Grossberg, 1986; 정재철, 2002, 321쪽 재인용)44). 접합은 또한 텍스트를 기존의 생각이나 태도와 선택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김영옥, 2012; 함승경·김영옥, 2014).

접합이론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담론은 ‘접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담론이란 것이 결국은 어떤 목적 또는 의도를 갖고 작위적인 과정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이다. 홀은 담론을 “정치·경제·사회적 행위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동일한 언어체계임에도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Hall, 1985). 담론 발화자 내지 논쟁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마다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합이론의 틀 속에서 담론을 정의한다면 “사물에 의미부여를 결정짓는 방식”, 또는 “동일한 언어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정재철, 2011).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접합이론의 틀을 차용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특정 이슈나 갈등현안에 있어 담론의 구조가 접합이론의 틀 속에서 접합되거나 탈접합되는 등의 형태로 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양 송전탑 갈등문제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담론적 실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찬성 측에서는 전자파 무해, 보상 확대, 지중화 불가, 직무유기 담론 등을 결합시키며 송전탑 추진의 당

44) 김영옥(2012)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대립적 상황을 예로 들며 설명한다. 수출입 담론과 축산업 보호 담론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축산업 보호 담론이 사회적 약자의 피해심리와 결합하여 우세한 담론이 되었다면 이는 효과적인 접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접합의 담론적 실천이 결국은 FTA를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태도와 가치에 변화를 가져왔다면 담론의 전이(轉移)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접합을 통한 담론적 실천은 담론 경쟁을 통하여 결국 담론의 전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위성 논리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 측은 주민 희생, 밀어붙이기, 전자파 유해, 재산권 침해, 보상 거부, 지중화 필요, 직무유기 전가 담론 등을 결합시키며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성을 강화시켰다(함승경·김영옥, 2014).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에서는 반대 측의 경우 정치적 의도 담론, 재정낭비 담론, 망국적 결과 담론 등을 접합시키며 무상급식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포퓰리즘이자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위기를 몰고 온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다. 반면, 찬성 측은 교육적 의도 담론, 평등·공동체 담론, 보편적 복지 담론, 시민성 훼손 담론 등을 결합시키며 무상급식은 빈부세습을 막는 기회균등과 복지분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강화시켰다(오수민 외, 2012).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확대 담론에서는 가격인상 담론은 탈접합 시키고 대신 간접피해 담론을 접합시키는 방식으로 흡연을 감소담론의 논리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함승경, 2014). 세월호 침몰사건에 있어서도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이 담론적 실천 방향에 있어 대립각이 세워졌는데, 보수신문의 정부의 책임을 탈접합 시킨 ‘사회적 책임’ 담론, ‘원인 조사’ 내지 ‘진상 규명’을 탈접합 시킨 ‘인양’ 담론 등이 선보였다. 반면 진보신문에서는 ‘정부 책임’, ‘진상규명’, ‘참사’ 등을 접합시킨 대항 담론을 형성시키며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비판하는 보도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외, 2017).

정리해 보면, 접합이론의 틀은 결국 담론적 실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설명한다면 담론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단순한 언술구조가 아니라, 발화자나 행위자가 다양한 담론 요소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접합 시키거나 탈접합시키는 작위적 행위를 통해 형성된 ‘접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페어클라우 관점에서 담론적 실천은 각종 이데올로기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접합, 재접합, 탈접합을 통하여 상식을 구성하는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 속에 있다(Fairclough, 1995/2004). 접합은 담론에 대한 연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틀을 제안하고, 또한 담론 연구를 수행하는 전략으로서 분석 대상을 맥락화시키는 방식을 제공한다(Slack, 1998; 정재철, 2011, 381쪽 재인용). 이런 점에서 볼 때 접합이론은 담론을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의 유용성이 크다고 하겠다.

### 3) 사회문화적 실천

세 번째 ‘사회문화적 실천’은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사회구조나 사회 권력, 또는 사회적 투쟁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다(이오현, 2017). 페어클라우는 담론 속에 내재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담론의 연결을 통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Fairclough, 1995/2004). 이 단계의 핵심은 미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진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서덕희, 2003; 오수민 외, 2012; 함승경·김영옥, 2014; 홍성현·류용재, 2013). 사회문화적 실천의 분석단계는 사회 각 영역의 권력관계 구도 및 권력의 작동방식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김헌태, 2011)<sup>45)</sup>.

사회문화적 실천에서는 담론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영옥, 2012). 담론 참가자들은 사회문화적 실천 방법을 놓고 의미 해석의 우월함을 얻기 위해 담론 경쟁을 벌인다(함승경·김영옥, 2014). 이러한 가운데 비판적으로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직접적 맥락과 넓은 차원의 제도적 관행과 사회문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오수민 외, 2012).

한편 비판적 담론분석은 공통된 방법적 규칙이나 기술, 원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방법론 또한 아직까지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신진욱, 2011; 이봉현·김성옥, 2011; 이오현, 2017)<sup>46)</sup>. 언어 행위 이면에 존재하는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틀이지만, 방법론적인 엄밀성을 통해 경험적 분석과 이론 간의 간극이 좁혀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이기형, 2006). 또한 방법론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통일된 절차와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따르기보

45) 이오현(2017) 논의에 따르면 페어클라우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전용한다. 페어클라우의 관점에서 언어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으며 담론적 실천은 대부분의 경우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재구조화 하는 데에 기여하는 의미 작용들을 통합하는 이데올로기적 성질을 지닌다.

46) 이 논의와 관련하여 신진욱(2011)은 “비판적 담론 분석은 지배관계를 치밀하게 폭로하기보다는 규범적 판단을 선언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언어적 전략과 장치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의 작동양식에 대한 분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담론의 지배기능과 헤게모니 효과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여 담론의 적대성과 균열, 담론투쟁의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다는 탄력적이고 독창적으로 연구설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김선기,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론 내용분석에 있어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틀을 차용하되, 이를 도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담론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는 매우 드물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점차 활발해지는 흐름을 보인다. 담론의 다양한 유형 중 ‘미디어 담론’은 언론학 외의 다른 학계에서도 관심 있는 연구 분야로 꼽힌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담론분석 논문들을 살펴보면, 미디어 담론 연구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뤘던 뉴스의 텍스트를 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밀양 송전탑 갈등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대통령 측근비리,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동학대 사건 등 갈등현안 문제와 대형 참사,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다. 또 복지정책 포퓰리즘 논쟁, 국가보안법 개폐, 무상급식 논쟁, 다문화정책, 금연정책, 조세정책, 김영란법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주제의 담론분석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매체 유형에서는 방송뉴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 ‘신문 뉴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sup>47)</sup>. 이처럼 미디어 담론 분석연구의 대상이 신문 뉴스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분석의 용이성 때문이다. 신문은 매체 특성상 텍스트의 ‘다시 읽기’(재독)가 용이하여 특정한 의제와 함께 담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특징을 보인다(이정민·이상기, 2014). 신문은 또한 스트레이트 기사나 해설, 초점, 인터뷰 등 다양한 형태로 보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각의 뉴스를 보도함

47) 예를 들면 ‘교육위기 담론’ 연구(강진숙, 2006)와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담론전략’ 연구(송용희, 2007)에서는 <한겨레>와 <조선일보>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민생담론’ 연구(이정민·이상기, 2014)에서는 10개 일간신문의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개혁 담론’ 연구(이오현, 2017)에서는 4개 일간신문의 사설과 내부 칼럼에서 나타난 담론을 분석하였고, ‘아동학대 담론’ 연구(김해연·강진숙, 2016)에서는 4개 일간신문 뉴스분석을 통해 담론형성 방식과 사회적 실천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나타난 국가담론’ 연구(이선민·이상길, 2015)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뉴스의 담론을 분석하고 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연구(허윤철 외, 2012)에서는 <동아일보> 사설에서 나타난 담론을 분석했다.

에 있어 제목의 선정이나 내용의 구성, 기사의 배치 등을 통해 프레임을 설정하고 있어 담론분석에 적합한 점이 있다. 결국 미디어 담론 분석연구는 프레임 분석과는 차원을 달라하기는 하나, 담론이나 프레임 모두 뉴스텍스트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중첩될 수밖에 없다(박옥규, 2015).

미디어 담론 분석에 있어 방법론으로는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비롯하여 뉴스텍스트 내용의 질적분석, 페쉬(Pêcheux)와 푸코(Foucault)의 담론 이론을 준용한 사례, 벨(Bell)의 뉴스 텍스트 담론구조 분석 등이 있다. 이중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을 차용하여 연구한 사례들이 다른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김영옥·함승경, 2014, 2015, 2017; 김해연·강진숙, 2016; 김현태, 2011; 류용재·최진호, 2016; 방희경·유수미, 2015; 서덕희, 2003; 오수민 외, 2012; 이선민·이상길, 2015; 이오현, 2017; 이정민·이상기, 2014; 최은희, 2014; 홍성현·류용재, 2013). 이는 미디어 담론 연구에 적용되는 정형화된 분석틀이 없는 상황에서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이 그나마 뉴스텍스트에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의 주요 연구사례

연구자	연구 주제	분석 대상	담론 분석방법
김영옥·함승경·김영지(2017)	세월호 침몰사건 미디어 담론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등 5개 신문 기사	•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 • 비판적담론 분석(텍스트, 담론실천, 사회적실천)
김해연·강진숙(2016)	아동학대 뉴스담론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4개신문 기사	비판적담론 분석(담론텍스트, 사회적 의미 형성방식, 실천적 함의)
김현태(2011)	위키리크스 관련 뉴스 담론	KBS 2TV '지구촌뉴스' 영상물 텍스트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담론, 담론실천, 실천적 함의)
류용재·최진호(2016)	교황 방한 관련 미디어 담론	조선, 동아, 경향, 한겨레 4개 신문 기사	비판적 담론분석 틀 차용(텍스트담론, 담론적·사회적실천과의 접합)
박천용(2013)	다문화담론	정부, 생활세계, 지역사회 영역의 법률, 영화, 뉴스텍스트	혼종적 담론비판분석 : 기든스의 사회 구조 이론과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 틀 차용
방희경·유수미(2015)	언론의 세대론 담론	조선일보, 경향신문 2개 언론 기사	비판적 담론분석(1단계 미시적 차원 텍스트 의미 파악, 2단계 거시적 차

			원 담론생산 주체 파악 및 청년세대론 사회정치적 맥락)
서덕희(2003)	공교육 위기담론	조선일보 뉴스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담론, 담론실천, 실천적 함의)
설양환(2017)	영재교육 담론	조선일보, 경향신문 2개 신문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코이론 차용한 담론분석</li> <li>• 페어클라우 비판적 담론분석</li> </ul>
오수민·이하나·장기선·김영옥(2012)	무상급식 담론경쟁	TV토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담론, 담론실천, 실천적 함의)</li> <li>• 흄의 접합이론 연결</li> </ul>
이선민·이상길(2015)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국가담론'	조선일보, 한겨레 2개 신문 의견기사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담론,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이오현(2017)	대학 개혁 담론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4개신문 사설, 내부칼럼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담론,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최은희(2014)	후쿠시마 원전사고 담론	한국과 독일의 방송뉴스	비판적 담론분석(푸코의 담론 질서의 관점을 이론적인 분석틀로 차용)
함승경·김영옥(2014)	밀양 송전탑 갈등 담론	송전선로 건설 추진기관, 반대단체 발표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li> <li>• 이항대립, 접합이론, 담론경쟁</li> </ul>
홍성현·류용재(2013)	글로벌 인재담론	카인즈 검색(전국 종합일간지) 사설	비판적 담론분석(텍스트담론,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

국내에서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을 차용해 연구를 진행한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면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페어클라우가 제시한 담론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등 3가지 층위 모형을 갖고 연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천웅(2013)은 기든스(Giddens)의 '사회구조화 이론'<sup>48)</sup> 및 비판적 담론분석 틀을 차용해 재구성한 '혼종적 담론비판분석' 방법을 통하여 다문화담론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다문화담론에 영향을 주는 상위지배담론은 '국가경쟁력'으로 나타났다. 류용재와 최진호(2016)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 분석에서 비판적 담론분석 틀을 차용하되, 선행연구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 유연하게 변형시켜 담론분석을 하였다. 스포츠선수 '박지성'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48) 기든스의 '사회구조화 이론'은 사회관계가 구조의 이중성이 작용한 결과로 시간과 공간 속에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박천웅, 2013).

미디어 담론을 분석한 양은경(2014) 등은 비판적 담론 분석 틀에서 미시적 측면에서의 텍스트 층위가 거시적 측면에서의 담론적 실천이나 사회문화적 차원과 어떻게 접합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오수민 등(2012)의 무상급식 담론경쟁 연구에서는 2011년 방송된 방송 토론 프로그램 ‘시사토론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후, 비판적 담론분석과 진행하며 홀의 접합이론을 접목시켜 분석을 진행했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3개 층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개 층위로 압축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례들도 있다. 이를테면 언론의 ‘세대론’ 담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방희경과 유수미(2015)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비판적 담론 분석틀의 3개 층위 중 담론적 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을 하나의 거시적 차원으로 통합해 2단계 층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텍스트 의미 파악이 이뤄졌고, 2단계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담론생산 주체 파악 및 청년세대론에 대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결과 의미 있는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옥과 함승경, 김영지(2017)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미디어 담론 연구에서는 3개 층위의 비판적 담론분석틀을 차용하되, 분석데이터 양이 방대하여 1단계로는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보도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그 단어의 영향력을 파악해 메시지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보수신문에서 담론적 실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한 담론은 ‘정부·사회적 책임’과 ‘원인조사’ 담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신문에서는 ‘정부 책임’과 ‘진상규명’ 담론이 두드러졌다.

이오현(2017)은 대학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진행했는데, 분석결과 신문사들 간 담론구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해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을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덕희(2003)는 ‘교실붕괴’라는 공교육 위기담론을 분석함에 있어, 비판적 담론분석 접근법의 틀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 ‘교실붕괴’ 뉴스담론은

공교육의 위기를 담보로 교육을 ‘시장화’하고 그것을 일상의 교육담론으로 유포하는 사회적 실천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함승경과 김영옥(2014)은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으로 밀양 송전탑 갈등 담론을 분석하였다. 텍스트분석에서는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거대담론과 미시담론 등 이항대립 분석을 통하여 텍스트에 숨어있는 대립적 개념들을 찾아냈다. 담론적 실천에서는 홀의 접합이론, 사회적 실천에서는 담론경쟁으로 이데올로기 및 헤게모니 재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론의 흐름과 특성을 밝혀냈다.

홍성현과 류용재(2013)는 글로벌 인재담론 연구에서 역대 전·현직 대통령의 취임사 및 신년사에 관한 신문사설을 비판적 담론분석의 3가지 층위의 틀을 차용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는 국정 담론은 글로벌 경영의 기업 담론이나 글로벌 인재양성의 교육 담론과 접합하는 형태로 해 시장주의적 가치를 확산시켜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해연과 강진숙(2016)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국내 4개 일간지 기사의 담론형성 방식과 사회적 실천의 함의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언론사의 주요 담론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비난 및 혐오담론, 아동학대를 야기하는 가정폭력담론, 아동인권담론과 친권 및 양육권 담론, 부모교육담론, 아동학대정책담론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이정민과 이상기(2014)는 비판적 담론분석 3개 층위 적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10개 중앙일간지 사설에 나타난 ‘민생담론’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핵심적 주제어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2차적으로는 비판적 담론분석 틀을 차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 국내 신문사설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서의 ‘국민생활’ 그 자체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럼에도 분석결과 논의에서는 3개 층위 중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된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편 국내에서 담론분석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 외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테면 푸코의 담론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최은희(2014)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은희는 “뉴스 보도에 일정한 프레임이 설정되는 과정에 사회 내적, 외부적 요인들이 작동하여 뉴스 담론이 구성 된다”는 관점의 담론질서를 제시한 푸코 이론을 분석틀로 차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한

국과 독일의 방송뉴스 담론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한국 방송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노출 방사능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배제적 프레임’과 ‘선긋기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것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대비책으로 원전포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미디어 담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미디어 담론에서는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프레임은 배제되고 금기시되는 담론질서가 확인되었다.

미셸 페쇠의 담론이론을 적용한 연구사례들도 눈에 띈다. 김영은과 김성민(2008)은 KBS 사장 해임사태 뉴스담론 연구를 진행하면서 방법론으로 페쇠의 담론이론을 채택하였다. 페쇠의 담론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담론의 외적 개입요소인 선구성 기제, 담론의 내적 개입 요소인 절합 기제, 그리고 호명을 통한 주제 구성 방식으로 담론의 지형을 파악하였다. 강진숙(2006)도 <조선일보>와 <한겨레> 뉴스에 나타난 교육위기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페쇠의 담론이론을 적용하였다<sup>49)</sup>.

강국진(2016)은 조세담론 관련연구에서 1차적으로는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해 전반적 담론지형을 확인한 후, 2차적으로 ‘담론구조(프레임)’, ‘담론전략(틀짓기)’, ‘담론정치’, ‘담론효과’ 등의 담론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재철(2001, 2011)은 언론개혁 뉴스담론 및 복지정책 포퓰리즘 담론 연구의 분석 방법론으로 홀의 접합이론을 채택했다. 이철한(2013)은 서울시장 선거 정치담론 연구의 방법론으로 베노이트의 정치담론의 기능적 분석이론을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sup>50)</sup>. 허윤철과 박홍원(2010)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세계화 담론 연구에서 1차적으로는 보도태도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고, 2차적으로는 발전담론, 종속담론, 혼성담론으로 분류하

49) 페쇠는 담론연구에서 단순하게 담론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 뿐만 아니라 의미의 대립적 성격까지 살펴보면서 담론과 계급적 위치들을 관련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김영은·김성민, 2008). 강진숙(2006)의 이 연구에서는 페쇠의 담론이론에서 제시한 언어체계의 선택과 조합방식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50) 이철한(2013)의 논의를 보면, 베노이트의 정치담론 기능이론은 투표자는 자신에게 가장 두드러진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칭찬, 즉 후보자의 선출직위에 합당함을 향상시키는 언급, 공격, 즉 상대방 후보가 선출직위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담론, 그리고 방어, 즉 상대방 후보의 공격진술을 반박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여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봉현과 김성욱(2011)은 리비아전쟁과 관련한 뉴스 담론 분석에서 1차적으로는 전체적 보도성향과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계량적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는 텍스트 담론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박선미(2008)는 다음(Daum) 아고라 토론방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촛불집회에 대한 온라인 담론을 분석했다. 헤게모니와 대항헤게모니, 집단지성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석은 이뤄졌다<sup>51)</sup>.

미국·이라크 전쟁 보도 담론구조 연구(백선기, 2006)와 경제위기 관련 뉴스담론 연구(류희림, 2013)에서는 방법론으로 벨(Bell)의 뉴스 텍스트 담론구조분석틀이 차용됐다. 백선기와 이경락(2009)의 UCC의 정치 활용 미디어 담론 연구는 기호학적 분석방법으로 진행됐다.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담론 전략연구(송용희, 2007)에서는 양적 내용분석과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해설기사의 담론구조 분석이 이뤄졌다. 박현식과 김성해(2014)의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연구에서는 미디어 담론지형을 살펴보기 위해 내용분석이 실시되었고, 이형민 등(2015)의 원자력 이슈에 대한 담론경쟁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의 실증조사가 진행되었다. 미국신문에 나타난 방송설립 초기의 방송개혁 운동에 대한 유승관(2010)은 담론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의 혼합형태의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최종환과 김성해(2014)의 노조 파업에 대한 정치담론 연구에서는 프레임 중심의 담론분석이 이뤄졌고, 이서현과 김성해(2017)의 ‘김영란법’ 관련 담론정치 연구는 프레임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미디어 담론 분석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차원의 방법론이 모색되고 있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법론에서는 아직 정형화 된 분석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독자적인 설계 필요성과 함께, 방법론적인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다(김선기, 2016; 신진옥, 2011; 이기형, 2006; 이봉현·김성욱, 2011; 이오현, 2017).

---

51) 온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담론분석은 정형화된 6하 원칙으로 작성된 신문 기사와 달리, 온라인에서 표출되는 메시지의 담론은 비정형성에서 출발하면서 분석자체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박선미, 2008).

## 제3장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언론보도

### 제1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요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현재 탄핵심판을 통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다.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것은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2016. 12. 10)한 지 92일 만이었다(<표 2> 참조). 이 기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열렸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간 증인신청 및 쟁점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심리에서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8천여 쪽에 달하고 현재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자료도 40박스 분량에 이른 것으로 기록되었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13개의 탄핵소추사유<sup>52)</sup>에 대하여 1)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 권한 남용 3)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4)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5)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정리하며 본 심리를 진행했다. 석 달 가까이 진행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간 치열한 대립공방 끝에, 마침내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

52) 국회 탄핵소추안에서는 헌법 위배 행위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등이 적시되었다.

또한 법률 위배행위로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1)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을 적시하였다.

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기밀자료 유출 등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 표 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2016년)

- 12. 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에 접수
- 12. 11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 22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
- 12. 24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 27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
- 12. 30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

(2017)

- 1. 3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 5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 10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 1. 12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 1. 16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 1. 17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 1. 19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 1. 23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 1. 25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 1. 31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 2. 1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 7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 2. 9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 2. 10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 14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 2. 16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 2. 18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 20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 2. 22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 2. 23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2. 26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 27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탄핵심판 최종변론)
- 3. 8 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 3. 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탄핵심판 결정문의 내용은 크게 위헌·위법 행위 부분과 헌법 수호 의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하여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 행위 및 투명하지 못한 공무수행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한 비위 등을 은폐하고 비호하면서 국회나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헌재는 또한 대통령의 법률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사건을 은폐 또는 비호하면서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 김○○, 정○○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두 번째,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문제와 관련하여, 헌재는 대통령의 행동이나 처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는 극히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진상규명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검찰수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 등이 결정적이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

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헌재는 결국 이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시하며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탄핵심판 과정의 주요 쟁점사항 중 최순실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열거되며 대부분 탄핵사유에 포함되었다. 헌재가 적시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였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한 사실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지게 된 발단이었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주도해 왔다는 점도 적시되었다.

“피청구인은 안○○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결정문에서는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 운영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지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반면 이번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희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 압력과 관련된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등의 쟁점은 탄핵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쟁점 중 ‘세월호 7시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동안 미용 및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로 열거되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헌재가 이 부분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진위는 가려지지 못하게 됐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대상에서는 제외하면서도,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보충의견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성실히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 제2절 언론보도를 통해 본 탄핵사건의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사유는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결정적 배경 내지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측근 비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제로 하여, 그동안 퐁퐁 숨겨왔던 대통령 귀책사유에 관한 내용들과 금기시 되어온 관저에서 있었던 일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먼저 최순실 사건에 관한 언론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16년 7월26일 <TV조선>이 문화재단 미르에 500억 원 모금 지원 의혹을 보도<sup>53)</sup>한 것을 기점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해 9월 <한겨레><sup>54)</sup>와 <경향신문>이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하면서 세간에 크게 회자되었다.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이 담긴 태블릿PC 내용을 공개한 <JTBC>의 보도(2016. 10. 24)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각계인사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범국민적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5개 일간신문에서 ‘최순실’ 이름이 포함된 뉴스를 조사해 본 결과 2001년 1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총 기사건수는 2만 9,52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up>55)</sup>(<표 3> 참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기사는 2016년 10월 이후에 갑작스럽게 폭주한 것으로, 200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16년간 5개 일간신문에 실린 최순실 이름이 포함된 기사 총 건수는 86건에 불과했다.

53) TV조선 (2016, 7, 26). <청와대, 문화재단 미르에 500억원 모금 지원 의혹>.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54) 한겨레 (2016, 9, 20). <‘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희가 아니라 최순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2.html)

55) 보도량은 각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최순실’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추출, 집계했다.

표 3. ‘최순실’ 등장 기사 빈도

단위: 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계
2001년 1월 ~ 2016년 7월	12	16	6	30	22	86
2016년 / 8월	2	0	0	1	0	3
/ 9월	17	29	11	127	67	251
/10월 <sup>56)</sup>	719(567)	563(432)	557(407)	514(318)	747(480)	3,100(2,204)
/11월	1,980	1,642	1,339	1,192	1,592	7,745
/12월	1,725	1,760	1,085	798	1,521	6,889
2017년 / 1월	932	1,971	822	509	834	5,068
/ 2월	507	1,377	555	381	663	3,843
/ 3월	443	1,126	492	337	500	2,898
<b>계</b>	<b>6,337</b>	<b>8,484</b>	<b>4,867</b>	<b>3,889</b>	<b>5,946</b>	<b>29,523</b>

2013년과 2014년 국정개입 의혹을 받은 정윤희씨의 전 부인으로 소개되거나, 실제 ‘비선실세’일 수 있다는 의혹 기사, 부동산 재력가 등으로 소개된 기사 등이 대부분이었다. 2016년 8월의 최순실 이름 등장 기사는 3건(한겨레 1건, 조선일보 2건)뿐이었다. 그러나 그해 9월부터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최순실에 대한 의혹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비선실세로 이름이 크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최순실 이름 등장기사는 그해 9월 251건, 그리고 10월에는 3,100건으로 급격히 많아졌다. 이어 논란이 정점에 이른 11월 7,745건, 12월 6,889건, 2017년 1월 5,068건, 2월 3,843건, 3월 2,898건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관련 의혹은 탄핵정국이 초래되기 2년 전인 2014년에도 언론을 통하여 크게 회자됐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받던 그녀의 전 남편과 관련된 일명 ‘정윤희 문건’<sup>57)</sup>이 일어났을 때이다. 이 사건은 “정윤희 국정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56) 괄호 안의 건수는 <JTBC>가 태블릿PC 청와대 문건 유출의혹을 보도한 10월24일부터 31일까지의 보도건수임. 전체적으로 볼 때 2016년 10월24일부터 관련뉴스가 폭주했음을 알 수 있다.

57) 이 사건은 정윤희가 공식 직위가 없는 비선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자주 만나

<세계일보>의 단독보도(2014. 11. 28)로 촉발되었다.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정윤회’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최순실’의 존재도 알렸다<sup>58)</sup>. 당시 이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대부분 언론이 이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라는 인물의 등장, 청와대 핵심권력 내부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제기 뉴스들은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의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한두 달 만에 대부분 신문에서 이 이슈가 사라졌다. 새롭게 등장한 이슈에 밀려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짜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며 직접 진화에 나서자 보수언론들이 소극적 보도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 잠깐 언급했던 ‘무(無) 보도 프레임’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구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윤회 문건’ 초기에 자주 언급되었던 ‘최순실’ 이름도 2015년 1월 이후에는 언론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최순실’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때문이었다. <TV조선>은 미르재단이 설립된 지 두 달 만에 대기업들로부터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금 받았고,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하였다(2016. 7. 26). 그러나 관련 보도가 3회 연이어 나간 후에도, 공중의 강력한 의제로 부상하지는 못했다<sup>59)</sup>. 관련 내용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비선실세로서 최순실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9월20일 전후한 시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 비선실세가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최순실 게이트’를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 등에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문제를 비롯한 최순실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 태블릿

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이 유출되어 큰 파문이 일었던 사건을 말한다.

58) 세계일보 (2014, 11, 30). <베일 가려진 정윤회씨 실체는...>.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3003090>

59) 2016년 7~8월 각 일간신문들은 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대통령 측근의 비리의혹 제기 및 수사촉구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PC 내용을 공개하게 된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명명되었고, 파문은 크게 확산되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동안 관련 의혹을 철저히 부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강력한 퇴진요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이때부터는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사례 및 각종 비리의혹을 앞 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는 거대한 촛불민심을 보수언론도 거스르지 못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야 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으로 가결 처리했다. 그리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첫 탄핵인용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 박 대통령은 한차례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뒤 3월31일 구속 수감되었다. 이처럼 최초 ‘정윤희 문건’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및 구속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이 초래된 일련의 과정 이면에는 언론의 주요한 보도가 자리하고 있었고, 각 시기마다 언론은 정치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담론전략을 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을 정치적 상황과 배경,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접근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 제4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제1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은 어떤 흐름과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의 텍스트 구성은 시기별, 신문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은 담론적 실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쟁점이슈 담론구성에 있어 신문사의 정파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1>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초 발단 배경에서부터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디어 담론의 흐름과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분석의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도뉴스의 유형 및 담론주제에 대한 계량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구성의 특징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는 페어클라우의 비관적 담론 분석의 방법론 중 ‘담론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흐름 및 보도태도 등을 고찰하고 주요 시점별 담론 텍스트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페어클라우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홀(Hall, 1985)의 접합이론을 차용해 주요 이슈에 있어 담론 간 접합, 재접합 및 탈접합 되어 이루어지는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탐색할 것이다.

<연구문제 4>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페어클라우에 따르면 담론의 사회적 실천 분석은 헤게모니와 담론 간의 관계, 그리고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를 일상화시킨 담론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실천의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방법론으로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한 시기별 주요 쟁점이슈에서 신문사별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제시되고, 담론경쟁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종합해보면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는 ‘담론 경쟁’ 구도와 연결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 언론의 정파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 1) 분석대상 및 기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국내 5개 일간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신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매체별 이념적 성향이 비교적 뚜렷하여, 논조와 담론 구성 등에 있어 정파성(보수적/진보적)과 연계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sup>60)</sup>. 기존 많은 연구에서는 보수적/진보적 성향을 띠는 이들 신문들의 정파성에 따라 논조 및 담론전략 등의 차이가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곽정래·이준웅, 2009; 김영욱·임유진, 2009; 김영지, 2008; 노현주·윤영철, 2016; 문철수, 2009; 박현식·김성해, 2014; 송은지·이건호, 2014; 정재철, 2002; 최진호·한동섭, 2012).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통령 탄핵사건 내용이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권력세력과 연관된 의혹사건에서 출발하고, 대립갈등이 치열하게 나타났던 점을 감안하면 언론의 관련 보도에서도 정파성이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sup>61)</sup>. 따라서 이들 5개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미디어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이들 신문들이 우리나라 일간신문의 보도경향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이유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5개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존 정파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준용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보수성향 신문으로,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성향으로 분류하여 담론분석 논의를 진행했다.

60)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사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과 소유구조에 따라 보수와 진보, 중도로 구분하는데(최낙진, 2015, 255쪽),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적 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적 신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61)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신문의 이념적 성향과 특정 정권과의 친소관계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미디어의 보도태도, 프레임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고영신, 2007).

분석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이다. 2014년 11월1일을 분석기간의 시작점으로 설정한 것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었던 세계일보 사장 해임과 연관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소위 ‘정윤희 문건’ 파문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서 처음 보도(세계일보, 2014. 11. 28)되었던 시점을 감안한 것이다. 분석기간의 종료 시점은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일(2017. 3. 10)과 대통령의 구속수감일(2017. 3. 31)을 감안하여 설정하였다.

표 4. 시기구분 및 주요 사건 일지

구분	기 간	주요 사건 일지
제1시기	2014. 11. 01 ~2016.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 11. 28.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 단독보도</li> <li>• 12. 07. 박근혜 대통령 ‘정윤희 문건’ 입장, “짜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의 내용은 허위”</li> <li>• 2015. 01. 05. 서울중앙지검 중간수사발표, “정윤희 문건,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li> <li>• 2016. 07. 26. (TV조선) ‘청와대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 단독보도</li> <li>• 09. 03.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 독일 출국</li> <li>• 09. 20. (한겨레)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 관련 집중보도 시작</li> <li>• 09. 29. (투기자본감시센터) 미르·K재단 관련 최순실 등 고발</li> </ul>
제2시기	2016. 10. 24 ~12.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0. 24. (JTBC)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담긴 최순실 태블릿 PC 공개</li> <li>• 10. 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li> <li>• 10. 29. 대규모 촛불집회 시작</li> <li>• 10. 30. 최순실 귀국(11월3일 구속)</li> <li>• 12. 09.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li> </ul>
제3시기	2016. 12. 10 ~2017. 0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12. 22.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돌입</li> <li>• 2017. 01. 03.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li> <li>• 01. 16.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1차) (01. 19. 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li> <li>• 02. 13.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2차) (02. 17. 법원, 구속영장 발부)</li> <li>• 02. 27.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li> <li>• 03. 10. 헌재 탄핵심판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li> </ul>
제4시기	2017. 03.11 ~0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03. 21.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li> <li>• 03. 31.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li> </ul>

분석기간은 다시 4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제1시기는 2014년 11월1일부터 2016년 10월23일까지, 제2시기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 처리한 12월 9일까지, 제3시기는 12월 10일부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일인 2017년 3월 10일까지, 제4시기는 3월 11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일인 3월31일까지로 각각 설정하였다.

## 2) 분석대상 기사의 수집방법 및 선정

### (1) 분석대상 기사의 유형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는 ‘1면’, ‘오피니언’, ‘사설’ 지면에 게재된 탄핵사건 관련 기사이다. 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1면 종합뉴스, 사설, 오피니언 지면의 내부칼럼 및 외부칼럼 등과 같은 기사 유형이 담론정치의 성격이 가장 잘 표출되는 보도양태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디어 담론의 대표적 유형으로 꼽히는 사설은 신문사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입장을 대외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주장이나 논평, 논설 등과 같은 성격의 의견 기사를 말한다(윤철수·김경호, 2017). 신문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글로, 일반 기사에 비해 강한 정파성과 논조를 드러내는 특성을 보인다(강국진, 2016; 문철수, 2009; 이선민·이상길, 2015; 이정민·이상기, 2014; 이진규, 2012). 담론의 특성들을 잘 담아내며, 그 어떤 기사들보다 체계화된 언술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특정의 시각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최낙진, 2015). 논설위원 개인이 집필하지만, 신문사의 사시(社示)나 창간이념, 편집방향(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면서 신문사의 공식 입장 보도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은 칼럼이나 기고와 같은 글이 실리는 의견기사 지면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생활, 건강, 의학 등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하면서 글의 구조가 에세이와 같은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칼럼은 크게 신문사 조직 내부의 데스크 또는 논설위원, 기자들이 쓰는 ‘내부 칼럼’과, 신문사로부터 위촉된 외부 필진이나 자유 투고가 등이 작성한 ‘외부 칼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중을 설득하고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

적성이 강하다는 점은 사실과 비슷한 부분이나, 사실은 신문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글인 반면, 칼럼은 글쓴이 의견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내부 칼럼’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 작성한 글이라는 점에서 신문사 입장 내지 편집방향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고, ‘외부 칼럼’도 필진이 사전에 위촉되는 경우가 많고 칼럼원고도 결국은 데스크에서 취사선택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점을 보면 신문사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1면’에 실린 뉴스도 정치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 1면은 각 신문의 대표성을 띤 지면으로, 신문사 내부의 취사선택 과정(Gate-Keeping)을 통하여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선정된 기사들이 배치되는 공간이다<sup>62)</sup>. 본 연구의 분석대상 유형 중 사실과 칼럼이 ‘의견기사’ 영역이라면, 1면 뉴스는 스트레이트 기사형태가 주를 이루는 ‘사실 기사’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비가 된다. 그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문제들 중에 뉴스 밸류가 가장 높다고 평가된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고영철, 2012), 1면 보도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각 신문의 특성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이건호, 2008; 이건호·정완규, 2008). 이러한 논의 속에 본 연구의 기사자료 분석대상은 ‘1면 종합’ 기사, 사실, 내부 칼럼과 외부 칼럼 등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sup>63)</sup>.

## (2) 자료의 수집절차 및 선정

본 연구의 자료의 수집 및 선정은 다음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이뤄졌다. 우선 1단계는 검색어 적용을 통하여 연관성 있는 기사 전부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주요 언론사의 기사 원문을 제공하는 ‘아이서퍼(<http://www.eyesurfer.com>)’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대상 5개 신문사의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sup>64)</sup>. 기사자료의 1차 추출은 연관성 있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하

62) 보통 국내 일간신문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뉴스의 경우 1면에 압축적으로 종합기사가 게재되고, 2면이나, 3면, 4면 등에는 관련기사들이 연계되어 게재되고 있다.

63) 기사유형에서 ‘1면 종합’으로 명명한 것은 1면에 게재되는 기사 중 사실이나 칼럼을 제외한 일반적 보도기사를 총칭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사실이나 오피니언은 보통 섹션 지면에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거나 국가적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1면에 게재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면에 게재된 사실은 ‘1면’ 유형이 아닌 ‘사실’ 유형에 포함시켰고, 1면에 게재된 칼럼도 마찬가지로 오피니언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분석기간이 길고, 매 시기 많은 이슈가 부상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검색어는 시기별 다양한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제1시기에서는 ‘정윤희’, ‘최순실’,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4개 검색어가 적용되었다. 제2시기부터 제4시기까지는 ‘박근혜’, ‘최순실’, ‘정윤희’,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탄핵’, ‘촛불’, ‘헌법재판소’, ‘국정농단’, ‘비선실세’, ‘시국선언’, ‘하야’, ‘태극기집회’, ‘이재용’ 등 14개의 검색어가 사용되었다<sup>65)</sup>.

이러한 키워드 검색 방법으로 중복된 기사자료를 걸러내며 추출작업을 진행한 결과 <조선일보> 4,679건, <동아일보> 5,109건, <중앙일보> 4,274건, <한겨레> 5,258건, <경향신문> 5,368건 등 총 2만 4,688건의 기사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유형인 ‘1면(종합)’, ‘오피니언(내부칼럼, 외부칼럼)’, ‘사설’ 등 3개 유형의 기사자료를 선별적으로 추려내는 작업이 진행되었다<sup>66)</sup>. 이 결과 ‘1면 종합’ 1,878건(24.25%), ‘오피니언’ 3,789건(48.92%), ‘사설’ 2,077건(26.82%) 등 총 7,744건이 선정되었다.

마지막 3단계 과정은 앞의 2단계 과정을 거쳐 압축된 자료의 개별기사 내용을 탐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내용 탐독과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기사자료를 1차적으로 제외시키는 작업이 이뤄졌다<sup>67)</sup>. 또한 내용은 탄핵사건과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신 뉴스이거나,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sup>68)</sup>. 이 과정을 통하여 기사유형은 최종 ‘1면 종합’, ‘사설’,

64) 아이서퍼는 국내 주요 신문과 잡지, 다양한 뉴스 정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합 검색하여 관심 있는 뉴스정보를 손쉽게 모아서 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뉴스검색 및 스크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색된 기사들에 대해 신문지면에 보도되었던 이미지가 제공되면 서 탐독 및 스크랩이 용이한 점이 있다.

65) 다수의 검색어를 통하여 기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누락되는 연관 기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방법은 동일한 기사가 중복적으로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와 ‘탄핵’이란 검색어를 각각 적용할 경우 동일한 기사의 중복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수집과정에서는 ‘아이서퍼’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복성을 체크하고 중복자료를 제거하는 필터링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66) 2단계 작업에서는 ‘오피니언’을 하나의 유형으로 추출하였다. 기사자료의 제목과 내용만으로는 세부 유형분류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니언을 ‘내부 칼럼’과 ‘외부 칼럼’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3 단계 탐독과정을 통하여 이뤄졌다.

67) 예를 들어 기사자료의 내용에 ‘탄핵’이나 ‘파면’, ‘국정농단’, ‘촛불’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논지의 1차적 방향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되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 실물경제에 관한 뉴스인데, ‘촛불’이나 ‘탄핵정국’이란 표현이 문장 중간에 서술된 수준은 제외하였다. 반면에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제가 불안하다는 취지의 기사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오피니언(내부칼럼)’, ‘오피니언(외부칼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69)</sup>.

이 결과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527건, <동아일보> 548건, <중앙일보> 502건, <한겨레> 503건, <경향신문> 562건 등 총 2,642건이 선정되었다. 이를 기사 유형별로 보면 ‘1면 종합’ 기사가 876건(33.1%), ‘사설’ 1069건(40.4%), ‘오피니언(내부칼럼)’ 350건(13.2%), ‘오피니언(외부칼럼)’ 347건(13.1%)이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앞의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방법은 사회구조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디어 뉴스 메시지에 내재된 담론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sup>70)</sup>. 다만, 담론분석 방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가 분석 내용 자료들을 주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기, 2016; 이봉현·김성욱, 2011). 이러한 비판에 대응함과 동시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과 담론분석을 병행하는 연구 사례(강국진, 2016; 김성해 외, 2007; 김영욱·임유진, 2009; 류희림, 2013; 유승관, 2010; 이봉현·김성욱, 2011, 이서현·김성해, 2017; 정재철, 2001; 허운철·박홍원, 2010)가 많아지고 있다<sup>71)</sup>. 본 연구에서도 질적 담론

68) 사건 연루자의 “○○○ 검찰출석 예정” 등의 유형이나 단순히 국회 정치일정을 알리는 정도의 기사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69) 오피니언에서 ‘내부 칼럼’과 ‘외부 칼럼’ 분류는 각 신문사의 주요 칼럼 코너 명칭 및 필자의 신문사 소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기고’와 같은 자유형식의 글은 ‘외부 칼럼’ 목록에 포함시켰다. 신문사별로 오피니언 유형의 분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내부칼럼=‘여적’, ‘경향의 눈’, ‘아침을 열며’, ‘편집국에서’, ‘기자칼럼’ 등 ▷외부칼럼=‘세상읽기’, ‘시론’, ‘정동에서’/‘정동칼럼’ 등. ◇한겨레 ▷내부칼럼=‘편집국에서’, ‘한겨레 프리즘’, ‘아침햇발’ 등 ▷외부칼럼=‘세상읽기’, ‘시론’, ‘기고’, 기타 기명 칼럼 등 ◇동아일보 ▷내부칼럼=‘오늘과 내일’, ‘뉴스룸’, ‘횡설수설’, ‘광화문에서’, ‘이슈&트렌드’ 등 ▷외부칼럼=‘동아광장’, ‘시론’, 기타 기명 칼럼 등 ◇조선일보 ▷내부칼럼=‘데스크에서’, ‘만물상’ 등 ▷외부칼럼=‘朝鮮칼럼’, ‘시론’, ‘기고’ 등 ◇중앙일보 ▷내부칼럼=‘세상읽기’, ‘시시각각’, ‘시선2035’, ‘분수대’ ▷외부칼럼=‘중앙시평’, ‘시론’, ‘중앙칼럼’ 등.

70) 김영욱과 함승경(2015) 논의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회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일상의 한 순간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소개한다.

분석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량적 내용분석 방법을 부분적으로 차용, 2단계 과정의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텍스트 담론의 주제별 유형을 정리하고 전반적 담론 논의의 지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사 유형, 뉴스담론 유형, 뉴스담론 세부 주제, 보도태도 등의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탄핵사건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질적 담론분석을 진행하였다.

## 1) 내용 분석

본 연구의 1단계 분석방법으로 설정한 내용분석은 <연구문제 1>의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미디어 담론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비판적 담론분석’의 3가지 층위 중 ‘텍스트 담론’ 분석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을 통해 시기별, 신문사별 보도뉴스의 유형 및 담론 주제를 도출하고 담론 텍스트 논의를 심화시켜 나아가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의 분석대상 기사로 선정된 자료를 대상으로 보도시점 및 기사 유형별로 분류하는 한편, 수집된 각 보도내용을 탐독하는 방법으로 기사담론의 유형(대주제) 및 속성항목(세부 주제)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각 뉴스 텍스트에서 핵심적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반복되거나 유사한 주제들을 통합해서 개별 프레임 유형을 만드는 기존 프레임 연구(고영신, 2007; 양정혜, 2001 등)에서 보였던 방법과도 유사한 것이다. 대주제 및 세부주제의 추출은 프레임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방법론 중 기존의 정형화된 프레임을 차용하는 연역적 방법 보다는 연구주제 특성에 맞춰 핵심프레임을 추출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세멧코 등(Semetko & Valkenburg, 2000)이 제시한 귀납적 방법을 채택한 것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특수한 상황의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가급적 분석대상 기사의 주제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때문이다.

---

71) 이봉현과 김성욱(2011) 논의를 보면, 내용분석은 전체적인 보도의 성향과 윤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담론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사가 갖는 의미와 기사의 이념적 작용을 밝히는 데 유용하다.

## (1) 분석유목의 설정 및 측정

### ① 담론 유형의 주제별 속성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각 개별 뉴스자료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주제를 추출하고, 전체 기사의 쟁점과 주제들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의 담론 유형을 설정하였다.

기사 한 개에 두 개 이상의 주제가 있을 경우 선행연구(윤재홍·방윤현·장경수, 2009)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내용을 다시 탐독하는 방법을 통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1개를 선정,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 △대통령 의혹/책임 △측근 비리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정수습 △탄핵 △촛불 △대립갈등 △대기업/재벌 책임 △위기 극복 등 최종 9개 유형의 대주제가 설정되었다. 또한 각 담론 유형별 세부 속성항목(세부 주제)이 동시에 설정되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었던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관련 보도 △‘정윤희 문건’ 파문과 연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압력 관련 언론자유 침해,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남용 △대통령의 입장 및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 등 6개 차원의 속성으로 구성되었다.

‘측근 비리’ 담론은 △미르·K스포츠재단 금품모금 의혹을 비롯해 △최순실 딸 승마 관련 특혜,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최순실이 직접 연관된 특혜나 이권개입 등의 비리사건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에 제기된 의혹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촉구 등 4개 항목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은 2014년 ‘정윤희 문건’ 파동의 정윤희 국정개입과 2016년 태블릿PC 연설문 작성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 2개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비선실세의 직접적 국정개입에 관한 내용만을 속성항목으로 설정하면서, 앞의 ‘측근비리’ 유형과는 배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수습’ 담론은 최순실 국정농단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난 후 대통령의 퇴진요구가 크게 확산될 즈음인 2016년 11~12월 분출

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국정수습 방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즉각 퇴진론 / 탄핵 추진 △질서 있는 퇴진론/ 2선 후퇴/ 4월 퇴진론 △거국내각 구성 / 영수회담/ 총리후보 지명 △‘개헌’ △‘조기 대선’ 등 4가지 차원으로 제시된다.

‘탄핵’ 담론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및 상정,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2가지 차원의 내용이다. 이 담론의 속성은 국회 탄핵소추안과 현재 탄핵심판 진행상황과 관련한 내용 및 논쟁 등으로 한정하여 다른 담론유형과 구분이 되도록 했다.

‘촛불’ 담론은 촛불집회 및 시국선언과 관련한 내용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대립 갈등’ 담론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대립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 △대통령 구속 찬반 갈등 △보수정당 분열/ 보수진영 책임론 △야당 책임/ 야권 대선 주자 등 비판 4가지 차원으로 제시된다.

‘대기업/재벌 책임’ 담론은 △삼성의 최순실 관련 자금지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전경련의 모금지원 관련 논란 △대기업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 및 자금지원 조사 등 3가지 차원을 속성으로 한다.

‘위기 극복’ 담론은 △분열극복, 혼란 수습, 촛불정신 계승 등 사회통합 촉구관련 △탄핵정국 혼란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강조 △탄핵상황으로 인한 안보 위기 강조 등 3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탄핵사건의 담론유형은 <표 5>와 같이 총 9개 차원의 담론유형 및 31개 속성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5. 탄핵사건 관련 기사담론 유형 및 속성

유형	속성(세부 주제)
1. 대통령 의혹/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7시간</li> <li>• 청와대 관저 의료·미용행위</li> <li>•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li> <li>• 위헌/위법 행위</li> <li>• 언론자유 침해 /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li> <li>• 대통령 현실인식</li> </ul>
2. 측근 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르·K스포츠재단</li> <li>•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딸 승마/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이권개입 등)</li> <li>•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에 제기된 의혹</li> <li>• 검찰 수사결과, 특검 수사 등</li> </ul>

3. 비선실세 국정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윤희 문건</li> <li>• 최순실 국정개입(태블릿PC 연결문 작성 등)</li> </ul>
4. 국정수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각 퇴진론 / 탄핵 추진</li> <li>• 질서 있는 퇴진론 / 2선 후퇴 / 4월 퇴진론</li> <li>• 거국내각 구성 / 영수회담 / 총리 지명</li> <li>• 개헌</li> <li>• 조기 대선</li> </ul>
5.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 탄핵소추</li> <li>• 헌법재판소 탄핵심판</li> </ul>
6. 촛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촛불집회</li> <li>• 시국선언</li> </ul>
7. 대립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극기 vs 촛불</li> <li>• 대통령 구속 찬반</li> <li>• 보수정당 분열 / 보수진영 책임론</li> <li>• 야당 책임 / 야권 대선주자 등 비판</li> </ul>
8. 대기업/재벌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 자금 지원 / 이재용 부회장 구속</li> <li>• 전경련 모금 지원</li> <li>• 대기업 조사</li> </ul>
9. 위기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분열극복, 혼란수습, 촛불정신 계승 등)</li> <li>• 경제 위기</li> <li>• 안보 위기</li> </ul>

## ② 보도 태도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주요 이슈에 대한 신문사의 논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도태도를 분석유목으로 설정하고 ① 긍정/옹호/지지 ② 중립적 ③ 부정/비판/반대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1면 종합’ 기사의 보도태도는 제목(headline)과 리드(lead)문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여 판별하였다. 이는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제목과 리드문장에서 기사의 전체적 방향이나 태도가 집약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이다(고영철, 2012)<sup>72)</sup>.

한 기사의 내용에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어느 쪽이 보다 우세한지를 판단하였다.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의 기자회견이나 입장을 담은 기사의 경우 팩트(fact)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당사자 인물의 발언에 대해 옹호나 비판 등의 평이나 해석을 곁들였는가에 따라 ‘중립’ 또는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였다. ‘사실’의 경우에도 1면 종합기사의 판별방식과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사실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논조가 보다 분명하게 드

72) 이 논의와 관련하여, 반다이크(van Dijk, 1988)는 기사의 제목은 도입부분인 리드문장과 함께 전략적으로 본문 전체글의 요약형태를 띠고 있으며, 담론의 상황을 정의한다고 하였다.

러나면서 보도태도의 판별이 용이한 점이 있다. 반면 ‘오피니언’의 내부 칼럼과 외부 칼럼은 제목이나 서두 부분만으로는 논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문 전체를 숙독해 보도태도를 판별하였다.

## (2) 신뢰도 검증 및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한 코딩은 연구자와 박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공동으로 하였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내용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담론 유형 및 세부 주제별로 평가를 한 후 이를 교환하여 다시 평가하는 방식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실질적 코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형 분류 판별이 다소 난해한 기사자료가 나타날 경우 연구자와 코더가 의견을 교환하고 담론유형의 세부 주제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거나 가장 근접한 유형을 결정하였다. 홀스티(Holsti, 1969)의 검증공식<sup>73)</sup>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측정된 결과 항목별 신뢰도 계수는 ① 기사유형 0.98 ② 담론 유형 0.83 ③ 세부주제 유형 0.81 ④ 보도태도 0.82로 나타났다. 데이터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2) 비판적 담론 분석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판적 담론분석’의 분석틀은 ‘담론 텍스트 분석’, 텍스트 간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맞춘 ‘담론적 실천 분석’, 그리고 텍스트담론의 사회적 의미를 말하는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등 3가지 층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3개 층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류용재, 2010). 때문에 3개 층위 간 경계가 명확한 분석적 틀이라기보다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담론을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확장시켜 기술하고 해석하는 개념적 구조로 보는 시각도 많다(김영욱·함승경, 2015). 또한 실제적 담론 분석에서는 3개 층위 중에서 ‘담론적 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경계를 구분하

73) 신뢰도 계수(CR)=2M / (N1+N2)

(M: 2명의 코더간의 일치한 코딩개수, N1: 코더 1이 코딩한 수, N2: 코더 2가 코딩한 수)

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영옥·함승경, 2014; 류용재·최진호 2016; 이오현, 2017; 이정민·이상기, 2014; 함승경·김영옥, 2014).

결국 비판적 담론분석은 방법론에서 공통된 방법적 규칙이나 기술, 원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아직까지는 방법론이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이봉현·김성욱, 2011; 이오현, 2017 등).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준용하되, 본 연구목적에 맞게 분석 틀을 재구성해 사용하기로 한다. ‘담론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문화적 실천’ 3개 층위의 세부적 분석방법은 기존 연구(함승경·김영옥, 2014 등)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재설정하였다. 분석방법을 연구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담론 텍스트’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언어 중심적 분석 보다는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담론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시적 접근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통령 탄핵사건 뉴스담론 자체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복잡한 의미구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언어 중심적 접근방식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론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텍스트의 구조 자체가 아니라, 특정 텍스트를 생산하는 권력관계, 즉 사회정치적 맥락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방희경·유수미, 2015). 따라서 <연구문제 2>의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담론분석을 위해 우선 계량적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된 9개 담론유형(대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주제인 31개 항목의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텍스트 구성의 특징 등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텍스트 내용에서 이항대립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거시적 측면에서 논의를 확장하기로 한다.

둘째,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담론들이 접합과 탈접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담론적 실천은 개별 텍스트들이 생산, 분배, 소비 등의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결합하여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밝혀내는 분석단계라고 할 수 있다(이오현, 2017; 함승경·김영옥, 2014). 페어클라우는 이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 개념으로 명명하고 있다.

상호텍스트성의 담론적 실천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은 홀(Hall,

1985)의 접합이론이다. 접합은 서로 다른 담론의 요소들에 연결성을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형성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즉, 각각의 담론 요소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Hall, 1986/1996). 접합을 이용한 담론전략에는 접합(articulation) 또는 재접합(rearticulation), 탈접합(disarticulation)이 있다. 이 접근방식은 서로 다른 담론요소를 하나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기존의 것을 분리시켜 내기도 한다.

담론적 실천 분석방법으로 접합이론의 틀을 채택하는 이유는 뉴스담론의 텍스트를 맥락화 시킴과 동시에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측면의 유용성 때문이다. 담론의 단순한 언술구조 분석 차원을 넘어서, 특정담론이 생성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함은 물론 발화자나 행위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담론을 자신의 목적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바라본 홀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담론분석에서 접합이론의 틀이 적용된다면 발화자나 행위자의 담론전략이나 ‘목적성’ 내지 의도하는 바를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전체적 흐름 속에서 각 행위자 내지 발화자의 담론전략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3>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담론적 변화과정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접합이론의 틀을 차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은 텍스트가 사회구조나 사회권력 등의 거시적 차원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담론적 실천을 통해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 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서덕희, 2003; 오수민 외, 2012; 함승경·김영옥, 2014; 홍성현·류용재,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실천’을 ‘담론 경쟁구도’ 및 ‘정파성’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sup>74)</sup>. <연구문제 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쟁점이슈 담론구성에 있어 신문사간 담론경쟁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부적으로는 탄핵사건 주요 시

74) ‘정파성’에 관해서는 텍스트 분석이나 담론적 실천을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쟁점 이슈를 둘러싼 담론경쟁에서 가장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문제 4>에 상정한 것이다. 정파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결과는 제5장 결론 및 함의를 통해 담아내도록 하겠다.

기별 쟁점이슈를 둘러싼 신문사 간 담론경쟁의 구도 및 담론전략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테면 ‘정윤희 문건’, ‘세월호 7시간’, ‘관저 성형·미용 의혹’, ‘대기업 모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이 쟁점이슈로 상정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문제 접근모형을 구상해 본다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연구 흐름도를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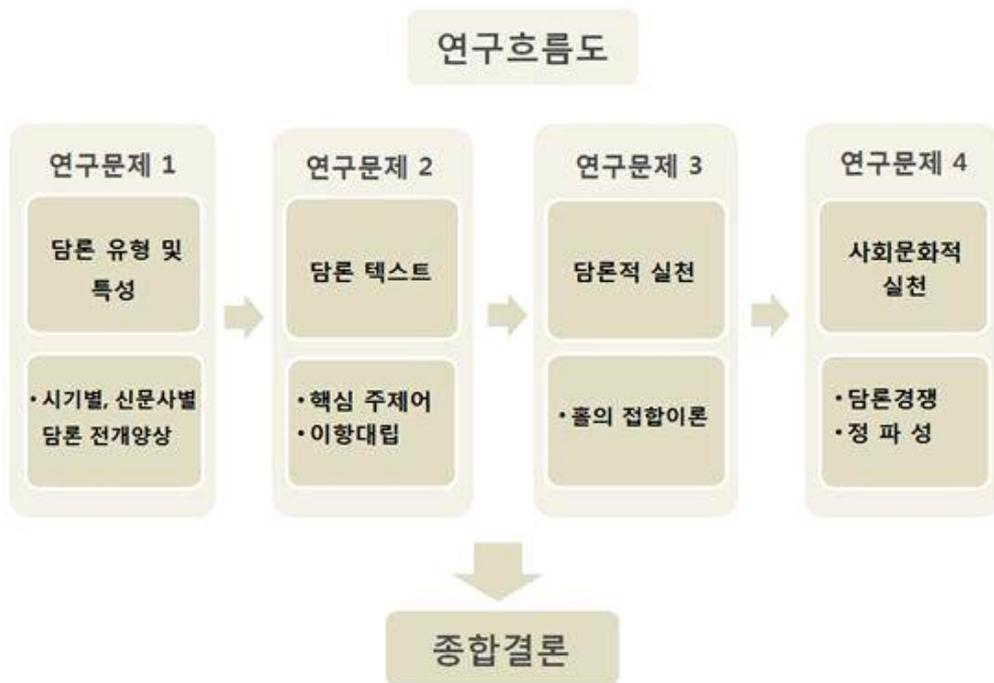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흐름도

## 제5장 연구 결과

### 제1절 탄핵사건 관련 담론의 유형 및 특성

#### 1. 분석대상 보도기사의 유형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탄핵사건 관련 5개 일간신문의 ‘1면 종합’ 기사와 ‘오피니언(내부칼럼, 외부칼럼)’, ‘사설’의 기사자료는 조선일보 527건, 동아일보 548건, 중앙일보 502건, 한겨레 503건, 경향신문 562건 등 총 2,642건이다.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표 6>과 같이 제1시기 458건(17.3%), 제2시기 1,060건(40.1%), 제3시기 942건(35.7%), 제4시기 182건(6.9%)으로, 제2시기와 제3시기 비중이 가장 높았다<sup>75)</sup>.

월 단위로 세분화해 보면 △2014년 11월 12건(0.5%) △12월 152건(5.8%) △2015년 1월 54건(2.0%) △2015년 2월~2016년 6월 14건(0.5%) △2016년 7월 26건(1.0%) △8월 41건(1.6%) △9월 33건(1.2%) △10월 302건(11.4%) △11월 681건(25.8%) △12월 503건(19.0%) △2017년 1월 294건(11.1%) △2월 266건(10.1%) △3월 264건(10.0%)이다<sup>76)</sup>.

---

75) 이 보도 건수는 ‘1면 종합’, ‘사설’, ‘오피니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및 탄핵사건 관련 보도기사를 선별한 것으로, 보통 1면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는 2면, 3면 4면, 5면 등을 통해 관련보도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만 보더라도 탄핵사건 관련 뉴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설’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2016년 11월 중에는 각 신문사의 사설이 거의 매일같이 사설 지면에 할당된 3쪽지 중 2쪽지 이상이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3쪽지 모두 연속하여 탄핵관련 사설이 게재되는 사례도 있었다.

76) 월 단위 분류 중 2015년 2월~2016년 6월 사이 기사건수가 14건(0.5%)에 불과해, 이 기간의 기사는 한 단위로 묶었다.

표 6. 시기별 신문사 보도건수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구 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계
제1시기 (2014. 11. 01 ~2016. 10. 23)	83(15.7)	101(18.4)	66(13.1)	91(18.1)	117(20.8)	458(17.3)
제2시기 (2016. 10. 24 ~12. 09)	218(41.4)	214(39.1)	229(45.6)	188(37.4)	211(37.5)	1,060(40.1)
제3시기 (2016. 12. 10 ~2017. 03. 10)	189(35.9)	203(37.0)	168(33.5)	188(37.4)	194(34.5)	942(35.7)
제4시기 (2017. 03. 11 ~03. 31)	37(7.0)	30(5.5)	39(7.8)	36(7.2)	40(7.1)	182(6.9)
<b>전체</b>	<b>527(100)</b>	<b>548(100)</b>	<b>502(100)</b>	<b>503(100)</b>	<b>562(100)</b>	<b>2,642(100)</b>

이러한 시기별 보도건수 추이를 정리해 보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은 최초 ‘정윤희 문건’이 보도된 직후인 2014년 12월에 크게 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듬해인 2015년 1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면과 사설, 칼럼에서 국정개입 논란 관련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비리의혹이 집중 제기됐고, 뒤이어 청와대의 미르재단 500억원 모금 지원의혹이 보도된 후에는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뉴스는 다시 쏟아져 나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하야 촉구 및 촛불집회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었던 2016년 11월(25.8%)에 가장 많았고,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되어 헌법 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2016년 12월이 19.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태블릿PC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 최순실 국정개입 실체가 드러난 2016년 10월(11.4%), 그리고 2017년 1월(11.1%)과 2월(10.1%), 3월(10.0%) 순으로 보도량이 많았다.

기사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표 7>과 같이 ‘1면 종합’ 876건(33.1%), ‘오피니언(내부칼럼)’ 350건(13.2%), ‘오피니언(외부칼럼)’ 347건(13.1%), ‘사설’ 1,069건

(40.4%)이다. ‘1면 종합’ 기사의 신문사별 건수는 <경향신문> 216건(24.7%), <한겨레> 187건(21.3%), <조선일보> 168건(19.2%), <동아일보> 163건(18.6%), <중앙일보> 142건(16.2%)으로 집계됐다. ‘사설’은 <동아일보> 226건(21.1%), <조선일보> 223건(20.9%), <한겨레> 222건(20.8%), <경향신문> 212건(19.8%), <중앙일보> 186건(17.4%) 순으로 나타났다<sup>77)</sup>. 오피니언 중 ‘내부칼럼’은 <중앙일보> 107건(30.6%), <동아일보> 100건(28.6%), <경향신문> 57건(16.3%), <한겨레> 43건(12.3%), <조선일보> 43건(12.3%) 순으로 많았다. ‘외부칼럼’은 <조선일보> 93건(26.8%), <경향신문> 77건(22.2%), <중앙일보> 67건(19.3%), <동아일보> 59건(17.0%), <한겨레> 51건(14.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피니언’에서 내부 칼럼(350건)과 더불어 외부 칼럼(347건)을 통해서도 탄핵사건과 관련한 의견기사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7. 신문사별 보도유형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구분	시기	1면 종합	사설	오피니언 (내부칼럼)	오피니언 (외부칼럼)	계
조선일보	1시기	29(3.3)	39(3.6)	5(1.4)	10(2.9)	83(3.1)
	2시기	81(9.2)	87(8.1)	19(5.4)	31(8.9)	218(8.3)
	3시기	53(6.1)	80(7.5)	15(4.3)	41(11.8)	189(7.2)
	4시기	5(0.6)	17(1.6)	4(1.1)	11(3.2)	37(1.4)
	소계	168(19.2)	223(20.9)	43(12.3)	93(26.8)	527(19.9)
동아일보	1시기	192(2.2)	56(5.2)	11(3.1)	15(4.3)	101(3.8)
	2시기	71(8.1)	82(7.7)	44(12.6)	17(4.9)	214(8.1)
	3시기	66(7.5)	76(7.1)	37(10.6)	24(6.9)	203(7.7)
	4시기	7(0.8)	12(1.1)	8(2.3)	3(0.9)	30(1.1)
	소계	163(18.6)	226(21.1)	100(28.6)	59(17.0)	548(20.7)
중앙일보	1시기	19(2.2)	27(2.5)	12(3.4)	8(2.3)	66(2.5)
	2시기	67(7.6)	78(7.3)	54(15.4)	30(8.6)	229(8.7)

77) ‘사설’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추출한 기사 전체 데이터 중 2단계 압축이 이뤄진 시점에서 <한겨레> 365건, <동아일보> 347건, <경향신문> 301건, <조선일보> 293건, <중앙일보> 296건 순을 보였다. 그러나 사설의 경우에도 ‘1면 종합’의 기사자료 수집 선별기준과 동일하게, 1차적 논지가 ‘탄핵사건’이 아닌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신문사별 사설 게재량 분포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핵심주제어가 ‘역사교과서’나 ‘사드 갈등’, ‘대선후보’, ‘황교안 권한대행’, ‘반기문 총장’ 등의 기사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3시기	50(5.7)	66(6.2)	33(9.4)	19(5.5)	168(6.4)
	4시기	6(0.7)	15(1.4)	8(2.3)	10(2.9)	39(1.5)
	소 계	142(16.2)	186(17.4)	107(30.6)	67(19.3)	502(19.0)
한겨레	1시기	37(4.2)	40(3.7)	11(3.1)	3(0.9)	91(3.4)
	2시기	76(8.7)	85(8.0)	13(3.7)	14(4.0)	188(7.1)
	3시기	66(7.5)	80(7.5)	15(4.3)	27(7.8)	188(7.1)
	4시기	8(0.9)	17(1.6)	4(1.1)	7(2.0)	36(1.4)
	소 계	187(21.3)	222(20.8)	43(12.3)	51(14.7)	503(19.0)
경향신문	1시기	45(5.1)	57(5.3)	9(2.6)	6(1.7)	117(4.4)
	2시기	72(8.2)	78(7.3)	27(7.7)	34(9.8)	211(8.0)
	3시기	85(9.7)	62(5.8)	12(3.4)	35(10.1)	194(7.3)
	4시기	14(1.6)	15(1.4)	9(2.6)	2(0.6)	40(1.5)
	소 계	216(24.7)	212(19.8)	57(16.3)	77(22.2)	562(21.3)
전체		876(100)	1,069(100)	350(100)	347(100)	2,642(100)

## 2. 탄핵사건 뉴스담론의 구성과 흐름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된 일간신문의 '1면 종합' 및 '오피니언', '사설' 보도에서 사용된 담론 구성의 내용적 유형(대주제)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 유형별 비중은 '대통령 의혹/책임'(2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8> 참조). 이어 '측근비리'(17.6%)와 '비선실세 국정농단'(17.6%), '대립 갈등'(9.9%), '탄핵'(9.3%), '대기업/재벌 책임'(7.7%), '국정수습'(7.0%), '촛불/시국선언'(5.7%), '위기 극복'(4.3%)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시기별 담론 유형 비교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담론 유형	보도시기				합계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	제4시기	
대통령 의혹/책임	80(17.5)	242(22.8)	192(20.4)	41(22.5)	555(21.0)
측근비리	164(35.8)	161(15.2)	130(13.8)	9(4.9)	464(17.6)
비선실세 국정농단	174(38.0)	184(17.4)	103(10.9)	3(1.6)	464(17.6)

국정수습	3(0.7)	150(14.2)	27(2.9)	5(2.7)	185(7.0)
탄핵	0(0.0)	76(7.2)	143(15.2)	27(14.8)	246(9.3)
촛불/시국선언	0(0.0)	84(7.9)	62(6.6)	4(2.2)	150(5.7)
대립갈등	5(1.1)	77(7.3)	127(13.5)	53(29.1)	262(9.9)
대기업/재벌책임	31(6.8)	50(4.7)	113(12.0)	9(4.9)	203(7.7)
위기관리	1(0.2)	36(3.4)	45(4.8)	31(17.0)	113(4.3)
<b>전체</b>	<b>458(100)</b>	<b>1060(100)</b>	<b>942(100)</b>	<b>182(100)</b>	<b>2,642(100)</b>

$\chi^2 = 788.352, df = 24, p = .000$

### 1) 시기별 담론 유형 비교

시기별 담론구성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제1시기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38.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측근비리’(35.8%) 관련 담론이 그 뒤를 이었고, ‘대통령 의혹/책임’(17.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sup>78)</sup>. 이는 제1시기의 첫 쟁점 사건인 ‘정윤희 문건’ 파문 당시 언론이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담론의 구성 보다는 ‘비선실세 정윤희’를 중심으로 한 의혹제기 담론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반면 제2시기부터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나 측근비리 보다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보도가 급격히 많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제2시기의 담론 유형을 보면 ‘대통령 의혹/책임’이 2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17.4%, ‘측근비리’ 15.2%, ‘국정수습’ 14.2% 순으로 나타났다. ‘촛불/시국선언’(7.9%)과 ‘탄핵’(7.2%) 담론은 제2시기 후반부에 첫 등장하였으나 보도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제3시기에서도 ‘대통령 의혹/책임’(20.4%)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탄핵’(15.2%), ‘측근비리’(13.8%), ‘대립갈등’(13.5%), ‘대기업/재벌책임’(12.0%), ‘비선실세 국정농단’(10.9%) 순으로 보도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sup>79)</sup>. 3시기

78) 제1시기의 ‘측근비리’ 관련 내용은 2016년 7월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된 청와대 우○○ 민정수석 등 측근들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및 수사촉구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79) 제3시기의 ‘촛불/시국선언’ 담론유형은 6.6%에 불과하나, 실제 지면에서 ‘촛불’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촛불집회’와 관련한 내용이 기사의 1차적 논지가 아니라 매개적 소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촛불/시국선언’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비율이 낮게 나왔다.

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상정되어 가결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였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립 갈등’ 뉴스도 크게 늘었는데, 이 시기 새로운 측근비리 의혹제기 및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책임론 관련 뉴스들도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파면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해당하는 제4시기에서는 ‘대립 갈등’ 담론이 29.1%로 가장 많았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및 박 대통령 구속수감일을 전후해 소위 ‘태극기 집회’의 격한 항의시위가 이어지면서 찬반대립 프레임의 보도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대통령 의혹/책임’ 22.5%, ‘위기극복’ 17.0%, ‘탄핵’ 14.8% 순을 보였다. ‘위기 극복’은 대통령 탄핵 및 구속수감에 따른 사회통합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다.

## 2) 신문사별 담론 유형 비교

신문사별로 담론구성의 유형을 비교 분석해 보면, 보수성향의 신문(조선, 동아, 중앙)과 진보성향의 신문(한겨레, 경향) 간에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은 보수신문 보다는 진보신문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55건 중 <경향신문> 149건(26.8%), <한겨레> 128건(23.0%)으로 두 신문의 보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보수신문에서는 <중앙일보> 17.6%(98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각 16.2%(90건)의 비율을 보였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포함한 ‘대기업/재벌 책임’ 담론(203건)에 있어서도 진보신문(한겨레 58건, 경향신문 42건)의 보도비율이 보수신문(조선 39건, 동아 34건, 중앙 30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의 대립 등을 포함하는 ‘대립 갈등’ 담론(262건)에서는 보수신문(조선 86건, 동아 62건, 중앙 46건)이 진보신문(한겨레 31건, 경향신문 37건)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담론 유형별 빈도 차이를 갖고 정파성 논의로 확장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대통령 의혹/책임’과 ‘대기업/재벌 책임’은 진보신문에서, ‘대립 갈등’은 보수신문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sup>80)</sup>.

80) 이 담론유형은 긍정과 부정, 찬성과 반대 논조여부에 상관없이 담론의 주제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재벌 책임’에서는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철저한 수사를

표 9. 신문사별 담론 유형 비교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담론 유형	신문사					총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대통령의혹/ 책임	90(17.1)	90(16.4)	98(19.5)	128(25.4)	149(26.5)	555(21.0)
측근비리	79(15.0)	123(22.4)	69(13.7)	85(16.9)	108(19.2)	464(17.6)
비선실세 국정농단	73(13.9)	116(21.2)	112(22.3)	67(13.3)	96(17.1)	464(17.6)
국정수습	51(9.7)	42(7.7)	39(7.8)	24(4.8)	29(5.2)	185(7.0)
탄핵	54(10.2)	44(8.0)	49(9.8)	50(9.9)	49(8.7)	246(9.3)
촛불/시국선언	18(3.4)	17(3.1)	31(6.2)	47(9.3)	37(6.6)	150(5.7)
대립갈등	86(16.3)	62(11.3)	46(9.2)	31(6.2)	37(6.6)	262(9.9)
대기업/ 재벌책임	39(7.4)	34(6.2)	30(6.0)	58(11.5)	42(7.5)	203(7.7)
위기극복	37(7.0)	20(3.6)	28(5.6)	13(2.6)	15(2.7)	113(4.3)
<b>전체</b>	<b>527(100)</b>	<b>548(100)</b>	<b>502(100)</b>	<b>503(100)</b>	<b>562(100)</b>	<b>2,642(100)</b>

$\chi^2 = 164.067, df = 32, p = .000$

다음으로 신문사별로 어떤 유형의 담론을 많이 구사했는지를 살펴보면, 보수 신문에서는 3개 신문 모두 1순위에 있어 차이가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의혹/책임’(17.1%), ‘대립 갈등’(16.2%), ‘측근비리’(15.0%), ‘비선실세 국정농단’(13.9%), ‘탄핵’(10.2%), ‘국정 수습’(9.7%), ‘대기업/재벌책임’(7.4%), ‘위기 극복’(7.0%)의 순으로 보도빈도가 높았다. <동아일보>에서는 ‘측근비리’(22.4%)에 관한 보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21.2%), ‘대통령 의혹/책임’(16.4%), ‘대립 갈등’(11.3%), ‘탄핵’(8.0%), ‘국정 수습’(7.7%), ‘대기업/재벌 책임’(6.2%) 순의 빈도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22.3%) 담론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 의혹/책임’(19.5%), ‘측근비리’(13.7%), ‘탄핵’(9.8%), ‘대립갈등’(9.2%), ‘국정수습’(7.8%) 등의 순이다.

반면 진보신문의 담론빈도는 상위 순위의 추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겨

촉구하는 보도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들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청문회 출석이나 검찰수사를 무리하게 해석하는 옹호 기사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 자체만을 갖고 정파성에 따른 논조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례>는 ‘대통령 의혹/책임’(25.4%)와 ‘측근비리’(16.9%)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비선실세 국정농단’(13.3%), ‘대기업/재벌 책임’(11.5%), ‘탄핵’(9.9%), ‘촛불/시국선언’(9.3%)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도 ‘대통령 의혹/책임’(26.5%)와 ‘측근비리’(19.2%)가 가장 많았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17.1%), ‘탄핵’(8.7%), ‘대기업/재벌 책임’(7.5%), ‘촛불/시국선언’(6.6%) 순의 분포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 탄핵사건 관련 담론 전개 흐름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실세 국정개입’ 관련 이슈는 최초 ‘정윤희 문건’이 보도된 직후인 2014년 12월에 크게 분출되었으나, 두 달 만인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해 보도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이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은 2년 가까이 휴면 상태에 있다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폭발적 이슈로 부상한다. ‘정윤희 문건’ 사태 때에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이슈가 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해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갖게 한다. 이 부분은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 <연구문제 4> 논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5개 일간신문의 ‘1면 종합’ 기사와 ‘오피니언(내부칼럼, 외부칼럼)’, ‘사설’의 보도기사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고 대통령 하야촉구 촛불집회가 크게 확산됐던 제2시기에서 보도 기사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는 2016년 11월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유형에서는 ‘1면 종합’이나 ‘사설’, ‘오피니언(내부칼럼)’은 물론 ‘오피니언(외부칼럼)’의 의견기사의 보도량도 많았다.

셋째, 일간신문의 탄핵사건 관련 보도에서 사용된 담론 구성의 내용적 유형에서는 ‘대통령 의혹/책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측근비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순으로 나타났다. 제1시기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가장 많은 반면 ‘대통령 의혹/책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됐다. 이 시기 쟁점인 ‘정윤희 문건’의 파문에 대해 언론이 대통령 책임 보다는 ‘정윤희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의 일탈에 더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제2시기에 도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책임 담론 구성이

급격히 많아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된 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된 제3시기에서도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이 가장 많았는데, 탄핵결정이 이뤄지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제4시기에는 ‘대립 갈등’ 담론이 크게 늘었다.

넷째, 신문사별 담론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확인됐는데, ‘대통령 의혹/책임’과 ‘대기업/재벌 책임’은 진보신문에서, ‘대립 갈등’은 보수신문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보면, 보수신문에서는 3개 신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담론 유형이 모두 달랐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의혹/책임’, <동아일보>는 ‘측근비리’, <중앙일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각각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모두 ‘대통령 의혹/책임’과 ‘측근비리’, ‘비선실세 국정농단’ 3개 담론유형을 나란히 1, 2, 3순위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절 탄핵사건 뉴스담론의 텍스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첫 단계인 ‘텍스트 분석’을 위하여 제1절에서 살펴본 탄핵사건 관련 담론 유형(대주제)을 31개의 세부주제로 분류하여 유목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 생성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주제에 대한 신문사별 논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봄 속에서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담론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1. 담론유형별 세부주제 및 노출빈도

우선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사 2,642건을 대상으로 담론유형별 세부주제를 분류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는 ‘최순실 국정개입(태블릿 PC 연설문 작성 등)’(315건)과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290건)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는 탄핵사건 관련 뉴스 텍스트에서 ‘최순실’과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sup>81)</sup>.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에 제기된 의혹’(174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157건), ‘정윤희 문건’(149건), ‘촛불집회’(148건) 등의 순으로 노출빈도가 높았다.

표 10. 뉴스담론의 세부 주제별 빈도

담론 유형	세부 주제	건수	비율(%)
대통령 의혹/책임	1-1 세월호 7시간	42	1.6
	1-2 청와대 관저 의료·미용행위	32	1.2
	1-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50	1.9
	1-4 위헌/위법 행위	125	4.7
	1-5 언론자유 침해 /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	16	0.6
	1-6 대통령 현실인식	290	11.0
	소계	555	21.0

81)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분석기간 중 ‘최순실’ 이름이 등장한 기사는 총 2만 9000여건에 달했다. 2016년 8월까지의 빈도가 극히 적었으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및 국정개입 의혹이 본격 제기된 2016년 9월 127건을 시작으로, 10월 3,100건, 11월 7,745건, 12월 6,889건, 2017년 1월 5,068건, 2월 3,843건, 3월 2,898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측근 비리	2-1 미르·K스포츠재단	63	2.4
	2-2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 (딸 승마/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이권개입 등)	97	3.7
	2-3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에 제기된 의혹	174	6.6
	2-4 검찰 수사결과, 특검 수사 등	130	4.9
	소계	464	17.6
비선실세 국정농단	3-1 정윤희 문건	149	5.6
	3-2 최순실 국정개입(태블릿PC 연설문 작성 등)	315	11.9
	소계	464	17.5
국정수습	4-1 즉각 퇴진론	34	1.3
	4-2 질서있는 퇴진론(4월 퇴진론) / 2선 후퇴	52	2.0
	4-3 거국내각 구성 / 영수회담 / 총리 지명	46	1.7
	4-4 개헌	34	1.3
	4-5 조기 대선	19	0.7
	소계	185	7
탄핵	5-1 국회 탄핵소추	89	3.4
	5-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7	5.9
	소계	246	9.3
촛불	6-1 촛불집회	148	5.6
	6-2 시국선언	2	0.1
	소계	150	5.7
대립갈등	7-1 태극기 vs 촛불	62	2.3
	7-2 대통령 구속 찬반	38	1.4
	7-3 보수정당 분열 / 보수진영 책임론	99	3.7
	7-4 야당 책임 / 야권 대선주자 등 비판	63	2.4
	소계	262	9.8
대기업/재벌 책임	8-1 삼성 자금 지원 / 이재용 부회장 구속	111	4.2
	8-2 전경련 모금 지원	48	1.8
	8-3 대기업 조사	44	1.7
	소계	203	7.7
위기 극복	9-1 사회통합(분열극복, 혼란수습, 촛불정신 계승 등)	67	2.5
	9-2 경제 위기	36	1.4
	9-3 안보 위기	10	0.4
	소계	113	4.3
계		2,642	100

담론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 유형에서는 ‘대통령 현실인식/책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125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50건), ‘세월호 7시간’(42건), ‘청와대 관저 의료·미용행위’(32건), ‘언론자유 침해/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측근 비리’ 담론유형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의혹’ 주제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찰 수사결과/ 특검 수사’(130건),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딸 승마/ 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이권개입 등)’(97건), ‘미르·K스포츠재단’(63건) 순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유형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주제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정윤희 문건’의 빈도도 다른 주제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정 수습’ 담론유형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이전 시기 정치권에서 제시했던 혼란수습 방법의 내용들인데, ‘질서 있는 퇴진론/ 2선 후퇴/ 4월 퇴진론’(52건), ‘거국내각 구성/ 영수회담/ 총리지명’(46건), ‘즉각 퇴진론’(34건), ‘개헌’(34건), ‘조기 대선’(19건)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sup>82)</sup>.

‘탄핵’ 담론유형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제의 기사빈도가 높았고, ‘국회 탄핵소추’(89건) 주제어도 자리를 하고 있다. ‘촛불’ 담론 유형에서는 노출빈도가 높은 ‘촛불집회’와 함께, ‘시국선언’ 주제어가 추출됐으나 건수는 많지 않았다. ‘대립 갈등’ 담론 유형에서는 ‘삼성 자금지원 /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경련 모금지원’(48건), ‘대기업 조사’(44건) 순이다. ‘위기극복’ 담론유형에서는 ‘사회통합(분열극복, 혼란수습, 촛불정신 계승 등)’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 위기’(36건), ‘안보 위기’(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탄핵사건 관련 보도의 주제를 보면, 제1시기에서는 ‘정윤희 문건’(32.1%), ‘청와대 측근 의혹’(14.4%), ‘대통령 현실인식/책임’(11.1%), ‘미르·K스포츠재단’(8.5%), ‘최순실 국정개입’(5.9%),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5.2%), ‘전경련 모금지원’(4.8%), ‘언론자유 침해/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3.3%) 순으로 주제어 빈도가 높았다. 제1시기는 최순실 태블릿PC 공개가 이뤄지기 전이었던 만큼 국정개입 담론유형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보다는 ‘정윤희 문건’ 주제어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2시기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17.4%) 주제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 현실인식/책임’(12.6%), ‘촛불집회’(7.7%), ‘국회 탄핵소추’(6.6%), ‘대통령 위헌·위법행위’(6.3%), ‘청와대 측근 의혹’(5.8%), ‘질서있는 퇴진론(4월 퇴진론) / 2선후퇴’(4.9%), ‘검찰 수사’(4.7%)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제3시기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13.5%) 주제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순실 국정개입’(10.7%),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12.6%), ‘삼성 자금지원 / 이재용 부회장 구

82) ‘국정수습’ 유형의 ‘질서 있는 퇴진론 / 2선 후퇴 / 4월 퇴진론’에서 ‘질서 있는 퇴진’과 ‘4월 퇴진론’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언론에서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였기에 하나의 주제로 묶되, 내용을 그대로 나열 제시한 것이다.

속’(9.2%), ‘촛불집회’(6.6%), ‘태극기 vs 촛불 대립’(5.7%), ‘보수정당 분열/보수진영 책임론’(5.3%), ‘청와대 측근 의혹’(4.6%), 검찰수사’(4.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4.2%),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4.1%),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4.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시기였던 만큼 현재 관련 기사나 찬반 대립갈등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제4시기에서는 ‘대통령 구속 찬반’(19.8%), ‘사회 통합’(15.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13.2%),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12.1%), ‘대통령 위헌·위법행위’(6.6%), ‘태극기 vs 촛불 대립’(4.4%), ‘대기업 조사’(3.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1. 신문사의 뉴스담론 주제별 빈도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담론 주제	언론사					총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월호 7시간	10(1.9)	6(1.1)	5(1.0)	10(2.0)	11(2.0)	42(1.6)
청와대 관저 의료·미용행위	5(0.9)	9(1.6)	1(0.2)	7(1.4)	10(1.8)	32(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6(1.1)	13(2.4)	7(1.4)	11(2.2)	13(2.3)	50(1.9)
위헌/위법행위	17(3.2)	14(2.6)	30(6.0)	40(8.0)	24(4.3)	125(4.7)
언론자유침해	1(0.2)	3(0.5)	1(0.2)	7(1.4)	4(0.7)	16(0.6)
대통령 현실 인식	51(9.7)	45(8.2)	54(10.8)	53(10.5)	87(15.5)	290(11.0)
미르·K스포츠재단	10(1.9)	17(3.1)	5(1.0)	18(3.6)	13(2.3)	63(2.4)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	10(1.9)	24(4.4)	16(3.2)	17(3.4)	30(5.3)	97(3.7)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의혹	37(7.0)	53(9.7)	25(5.0)	28(5.6)	31(5.5)	174(6.6)
검찰 수사 관련	22(4.2)	29(5.3)	23(4.6)	22(4.4)	34(6.0)	130(4.9)
정윤희 문건	31(5.9)	38(6.9)	32(6.4)	17(3.4)	31(5.5)	149(5.6)
최순실 국정개입	42(8.0)	78(14.2)	80(15.9)	50(9.9)	65(11.6)	315(11.9)
즉각 퇴진론	2(0.4)	3(0.5)	2(0.4)	10(2.0)	17(3.0)	34(1.3)
질서있는 퇴진론 등	16(3.0)	10(1.8)	19(3.8)	3(0.6)	4(0.7)	52(2.0)
거국내각구성/총리지명 등	15(2.8)	15(2.7)	8(1.6)	6(1.2)	2(0.4)	46(1.7)
개헌	13(2.5)	5(0.9)	7(1.4)	5(1.0)	4(0.7)	34(1.3)

조기대선	5(0.9)	9(1.6)	3(0.6)	0(0.0)	2(0.4)	19(0.7)
국회탄핵소추	19(3.6)	13(2.4)	21(4.2)	16(3.2)	20(3.6)	89(3.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5(6.6)	31(5.7)	28(5.6)	34(6.8)	29(5.2)	157(5.9)
촛불집회	18(3.4)	16(2.9)	31(6.2)	47(9.3)	36(6.4)	148(5.6)
시국선언	0(0.0)	1(0.2)	0(0.0)	0(0.0)	1(0.2)	2(0.1)
태극기 vs 촛불	23(4.4)	9(1.6)	13(2.6)	6(1.2)	11(2.0)	62(2.3)
대통령 구속 찬반	6(1.1)	6(1.1)	12(2.4)	6(1.2)	8(1.4)	38(1.4)
보수정당 분열/ 보수진영 책임	31(5.9)	28(5.1)	12(2.4)	14(2.8)	14(2.5)	99(3.7)
야당책임/ 대선주자 비판	26(4.9)	19(3.5)	9(1.8)	5(1.0)	4(0.7)	63(2.4)
삼성 자금지원/ 이재용 구속	26(4.9)	19(3.5)	15(3.0)	29(5.8)	22(3.9)	111(4.2)
전경련 모금지원	3(0.6)	6(1.1)	5(1.0)	24(4.8)	10(1.8)	48(1.8)
대기업 조사	10(1.9)	9(1.6)	10(2.0)	5(1.0)	10(1.8)	44(1.7)
사회통합	20(3.8)	10(1.8)	15(3.0)	10(2.0)	12(2.1)	67(2.5)
경제위기	10(1.9)	10(1.8)	10(2.0)	3(0.6)	3(0.5)	36(1.4)
안보위기	7(1.3)	0(0.0)	3(0.6)	0(0.0)	0(0.0)	10(0.4)
<b>전체</b>	<b>527(100)</b>	<b>548(100)</b>	<b>502(100)</b>	<b>503(100)</b>	<b>562(100)</b>	<b>2,642(100)</b>

이러한 각 신문사의 탄핵사건 관련 보도의 주제별 빈도(<표 11> 참조)를 보면, <조선일보>는 ‘대통령 현실인식/책임’(9.7%), ‘최순실 국정개입’(8.0%),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의혹’(7.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6.6%), ‘정윤희 문건’(5.9%), ‘보수정당 분열/ 보수진영 책임론’(5.9%), ‘삼성 자금지원/이재용 부회장 구속’(4.9%), ‘야당 책임론’(4.9%), ‘태극기 vs 촛불 대립’(4.4%) 순으로 관련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최순실 국정개입’(14.2%),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의혹’(9.7%), ‘대통령 현실인식/책임’(8.2%), ‘정윤희 문건’(6.9%), ‘헌법재판소 탄핵심판’(5.7%), ‘보수정당 분열/보수진영 책임론’(5.1%), ‘최순실 연관 비리 사건’(4.4%) 순으로 많았다. <중앙일보>는 ‘최순실 국정개입’(15.9%),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10.8%), ‘정윤희 문건’(6.4%), ‘촛불집회’(6.2%), ‘대통령 위헌·위법’(6.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5.6%),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 의혹’(5.0%), ‘검찰 수사’(4.6%) 순으로 보도빈도가 높았다.

<한겨레>는 ‘대통령 현실인식/책임’(10.5%), ‘최순실 국정개입’(9.9%), ‘촛불집회’(9.3%), ‘대통령 위헌·위법행위’(8.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6.8%), ‘청와대 측근 의혹’(5.6%), ‘삼성 자금지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5.8%), ‘검찰수사’(4.4%)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현실인식’(15.5%), ‘촛불집회’(6.4%), ‘검찰 수사’(6.0%), ‘정윤희 문건’(5.5%), ‘청와대 측근 의혹’(5.5%), ‘최순실 연관비리’(5.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5.2%) 순으로 빈도횟수가 많았다.

## 2. 세부주제에 대한 보도태도

분석대상 기사 2,642건의 텍스트 내용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논조에서는 ‘부정/비판/반대’가 1445건(54.7%)으로 많았고, ‘중립적’ 706건(26.7%), ‘긍정/옹호/지지’ 491건(18.6%)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보면, <조선일보>는 ‘긍정/옹호/지지’ 121건(23.0%), ‘중립적’ 143건(27.1%), ‘부정/비판/반대’ 263건(49.9%)으로 비판적 기사빈도가 많았다. <동아일보>는 ‘긍정/옹호/지지’ 56건(10.2%), ‘중립적’ 147건(26.8%), ‘부정/비판/반대’ 345건(63.0%)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긍정/옹호/지지’ 131건(26.1%), ‘중립적’ 136건(27.1%), ‘부정/비판/반대’ 235건(46.8%)이다. <한겨레>는 ‘긍정/옹호/지지’ 81건(16.1%), ‘중립적’ 130건(25.8%), ‘부정/비판/반대’ 292건(58.1%)이다. <경향신문>은 ‘긍정/옹호/지지’ 102건(18.1%), ‘중립적’ 150건(26.7%), ‘부정/비판/반대’ 310건(55.2%)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개 신문 모두 탄핵사건 관련 보도에서는 ‘부정/비판/반대’ 논조가 두드러지게 많았다(<표 12> 참조).

표 12. 언론사별 보도태도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태도	언론사					총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긍정/옹호/지지	121(23.0)	56(10.2)	131(26.1)	81(16.1)	102(18.1)	491(18.6)
중립적	143(27.1)	147(26.8)	136(27.10)	130(25.8)	150(26.7)	706(26.7)

부정/비판/반대	263(49.9)	345(63.0)	235(46.8)	292(58.1)	310(55.2)	1,445(54.7)
전체	527(100)	548(100)	502(100)	503(100)	562(100)	2,642(100)

$\chi^2 = 59.044, df = 8, p = .000$

그러나 각 주요 담론 주제별로 보면 보수적 성향 신문과 진보적 성향 신문 간에 논조의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다. 우선 최초 국정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정윤희 문건’ 과문 관련 기사에서는 신문사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p>0.05$ ),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부정/비판/반대’ 기사 비율이 각 82.4%와 74.2%로 보수신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보수신문의 비판적 기사비율은 <동아일보> 68.4%, <중앙일보> 62.5%, <조선일보> 54.8%로 나타났는데, <조선일보>는 ‘긍정/옹호/지지’ 기사 비율 19.4%로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선일보>의 당시 정윤희 문건 관련 청와대 측 옹호 보도는 미디어 비평 매체로부터도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83)</sup>.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신문사간 보도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p<0.05$ ), 담론 텍스트 구성에 있어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다른 신문들 간 논조의 차이가 확인됐다<sup>84)</sup>. <조선일보>는 ‘세월호 7시간’ 논란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규정하며 관련 10건의 기사 중 7건에서 ‘긍정/옹호/지지’ 논조를 편 것으로 나타났다<sup>85)</sup>. 반면 <동아일보>는 ‘긍정/옹호/지지’ 기사는 없고, 중립적 3건, 부정적 3건의 기사를 실었고, <중앙일보>는 ‘긍정/옹호/지지’ 1건, 중립적 2건, 부정적 2건의 보도가 있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긍정/옹호/지지’ 기사는 전혀 없고,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비판적 논조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와대 관저에서의 의료·미용행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례수( $n=32$ )는 많지 않았으나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판적 보도(동아일보 88.9%, 중앙일보

83) 미디어오늘 (2014, 12, 9). <검찰 프레임에 갇힌 조선일보, ‘짜라시’로 몰아가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08>

84) ‘세월호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된 당일 행적 관련 논란이다.

85) <조선일보>는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때에도 사실을 통하여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일보 (2016, 12, 8).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7/20161207030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7/2016120703086.html)

100%, 한겨레 85.7%, 경향신문 100%)가 주류를 이뤘다(p<0.05).

촛불집회 보도의 경우 신문사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p<0.05), ‘긍정/옹호/지지’ 보도기사의 비율은 <경향신문> 77.8%, <한겨레> 59.6%, <중앙일보> 58.1%, <동아일보> 37.5%, <조선일보> 16.7% 순을 보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특정현상을 갖고 비판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부정/비판/반대’ 논조의 기사 비율이 높았다(<표 13> 참조).

표 13. 촛불집회 보도태도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태도	언론사					총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긍정/옹호/지지	3(16.7)	6(37.5)	18(58.1)	28(59.6)	28(77.8)	83(56.1)
중립적	7(38.9)	8(50.0)	12(38.7)	19(40.4)	8(22.2)	54(36.5)
부정/비판/반대	8(44.4)	2(12.5)	1(3.2)	0(0.0)	0(0.0)	11(7.4)
<b>전체</b>	<b>18(100)</b>	<b>16(100)</b>	<b>31(100)</b>	<b>47(100)</b>	<b>36(100)</b>	<b>148(100)</b>

$\chi^2 = 52.832, df = 8, p = .000$

전경련의 대기업 자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5개 신문에서 모두 ‘전경련 해체’라는 이슈를 꺼내들며 비판적 논조의 기사비율(79.2%)이 높았다(p<0.05). 반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 검찰조사와 관련해서는 보수언론 중 <조선일보>에서 재벌 총수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기사 비율(80.0%)이 높은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비판적 기사 비율(한겨레 80.0%, 경향신문 90.0%)이 높아 대조를 보였다(p<0.05).

삼성 자금지원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있어서도 유의한 수준에서 신문사간 차이가 확인되었다(p<0.05). 보수언론에서는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긍정/옹호/지지’ 보도(조선일보 76.9%, 동아일보 47.4%, 중앙일보 40.0%)가 많은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삼성 자금지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위성을 강조하는 ‘부정/비판/반대’ 보도(한겨레 51.7%, 경향신문 59.1%)가 많았다(<표 14> 참조).

표 14. 삼성 자금지원 및 이재용 부회장 구속 보도태도<sup>86)</sup>

단위: 건수, 괄호 안은 %

태도	언론사					총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긍정/옹호/지지	20(76.9)	9(47.4)	6(40.0)	0(0.0)	0(0.0)	38(34.2)
중립적	4(15.4)	7(36.8)	6(40.0)	14(48.3)	9(40.9)	40(36.0)
부정/비판/반대	2(7.7)	3(15.8)	3(20.0)	15(51.7)	13(59.1)	33(29.7)
<b>전체</b>	<b>26(100)</b>	<b>19(100)</b>	<b>15(100)</b>	<b>29(100)</b>	<b>22(100)</b>	<b>111(100)</b>

$\chi^2 = 45.476, df = 8, p = .000$

### 3. 담론 텍스트 분석

앞에서 살펴본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 흐름 및 보도태도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주요 사건의 담론텍스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하여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이 제기되었던 2개 사건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나는 2014년 11월 말에 촉발되었던 소위 ‘정윤희 문건’의 비선실세 정윤희 국정농단 의혹, 다른 하나는 2016년 10월 말 태블릿PC 공개로 충격적 실체가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각 신문 뉴스의 제목(headline)과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론 텍스트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핵심주제어로 제시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대립 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텍스트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담론의 이항대립(二項對立) 구도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정윤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담론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한 주요 시기별 미디어 담론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가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권력 세력과 언론간의 대립구도 양태가 자주 형

86) 삼성 자금 지원 및 이재용 부회장 구속 관련 보도태도 분석은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옹호하는 등의 논조를 보였다면 ‘긍정/옹호/지지’를, 그렇지 않고 검찰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처벌을 촉구하는 논조는 ‘부정/비판/반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성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정치적 이슈 논쟁은 정당 간 정쟁이나 정치권 내부의 폭로 전에서 촉발되고 언론은 제3자적 관찰자 시점(視點)에서 상황을 중계하는 형태로 최초 보도에 뛰어든 후 논조를 통한 담론경쟁을 펼치는 수순을 보인다. 반면, 탄핵사건 관련 주요 이슈에서는 언론이 먼저 강력한 의혹제기 단독보도와 같은 형태로 논쟁에 불을 지피며 새로운 담론을 생성해 확산시켜 나가고, 여야 정치권이 2차적 논쟁 대열에 합류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논쟁 대립구도의 주체 또한 ‘언론사 vs 권력핵심’ 또는 ‘언론사 vs 대통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일반적 갈등이슈의 담론 대립구도 양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sup>87)</sup>.

본 연구의 분석기간 중 제1시기(2014. 11. 01~2016. 10. 23)에서 나타난 첫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인 소위 ‘정윤희 문건’ 파문은 언론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며 이슈를 촉발시키고 강력한 의제를 설정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정윤희(최순실의 전 남편)가 비선실세로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 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 등을 자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세계일보>의 단독보도(2014. 11. 28)를 통해 공개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청와대 작성 감찰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정윤희의 ‘국정 개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세계일보>의 뉴스담론 텍스트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고리 권력 3인방’, ‘비선세력’, ‘십상시(十常侍)’ 등의 핵심어로 자리 잡고 있다. ‘십상시’는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권력을 잡아 권력을 잡아 조정을 농락한 열 명의 중상시(환관)를 의미하는데, 청와대 비선실세들을 빗대어 이 말이 크게 회자되었다<sup>88)</sup>. 정윤희라는 인물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림자 실세 vs 억울한 야인”, “說만 무성한 미스터리맨”, “세간에 회자되는 권력 실세” 등으로 묘사했다<sup>89)</sup>.

87)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슈에서는 보통 갈등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구도를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에서는 ‘해군 vs 강정마을 주민’간 대립양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역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국토교통부와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간 대립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언론은 일정한 논조를 견지하면서도, 제3자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갈등문제를 바라보고 보도를 하게 된다.

88) 세계일보 (2014, 11, 28). <비선실세그룹 ‘십상시’…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7005387>

89) 세계일보 (2014, 11, 30). <베일 가려진 정윤희씨 실체는…>.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3003090>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5개 일간신문의 관련뉴스 담론의 텍스트 구성은 신문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진보신문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시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설정하며 대통령의 책임과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보수신문에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을 짚어내면서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윤희 문건=짜라시’ 및 범죄행위로서의 ‘문건 유출’ 사건의 수사에 주목하는 텍스트의 구성 빈도가 높았다.

### (1) 보수언론의 ‘정윤희 문건’ 담론 텍스트

먼저 보수신문에서 <조선일보>는 ‘정윤희 문건’은 ‘증권가 짜라시’에서 나도는 풍문을 취합한 동향보고 수준이라는 청와대 측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하며 옹호하는 논조를 폈다. ‘정윤희 문건’의 실체는 ‘짜라시’ 담론으로 맞불을 넣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 외부 유출’ 담론으로 텍스트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 즉, 정윤희 문건 내용의 진실성 규명 보다는 청와대 내부 문건의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 담론 텍스트를 이어가고 있다.

- ‘정윤희 동향 보고’ 文件유출에 청와대 “법적 대응하겠다” (조선일보, 2014. 11. 29. 1면)
- 泌線의혹에 문건 대량 유출까지, 靑 고장 심각하다 (조선일보, 2014. 12. 01. 사설)
- 朴대통령 “靑문건 유출, 國기 문란 행위” (조선일보, 2014. 12. 02. 1면)

이에 반해 <중앙일보>의 경우 관련 뉴스 제목의 텍스트는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건 연루 청와대 비서관과 정윤희를 ‘문고리 3인방’, ‘살아있는 권력’, ‘정보 장사꾼들’, ‘비선’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에는 ‘진상규명’, ‘비선 논란 검찰수사’, ‘문건 유출 성역 없는 수사’ 등 진상규명 및 강력한 수사촉구 담론 텍스트가 주류를 이뤘다<sup>90)</sup>.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한

90) · 정윤희 국정농단 의혹, 청와대는 진상규명에 나서라 (중앙일보, 2014. 11. 29. 사설)  
 · 검찰 수사 ‘비선 논란’ 종결자 돼야 한다 (중앙일보, 2014. 12. 01. 사설)  
 · ‘문고리 3인방’ 부터 물러나야 한다 (중앙일보, 2014. 12. 06. 사설)  
 · 문건 사건의 본질은 소통 부재와 비밀주의다 (중앙일보, 2014. 12. 09. 사설)  
 · 정보 장사꾼들 사이에 떠돌아다닌 청와대 보고서 (중앙일보, 2014. 12. 11. 사설)  
 · 검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중앙일보, 2014. 12. 12. 사설)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짜 맞추기 수사’, ‘짜라시에 집착한 수사’ 등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 담론의 텍스트 구성 빈도가 높았다<sup>91)</sup>.

<동아일보>는 ‘정윤희 문건’, ‘비선실세 정윤희’, ‘문고리 3인방’을 연계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는 텍스트 구성이 두드러졌다. <‘정윤희 국정개입’ 靑문건 유출 파문>(2014. 11. 29) 보도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짜라시’ 해명이 나온 직후에는 <“정윤희 문건은 짜라시”라는 靑 해명 석연찮다>(2014. 11. 29. 사실) 보도를 통해 ‘짜라시’라는 해명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정윤희 문건’ 성역 없이 수사하라>(2014. 12. 01. 사실), <정윤희·3인방 의혹, 대통령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2014. 12. 03. 사실), <朴 대통령, ‘문고리 권력’ 싸고돌며 민심 돌릴 수 있나>(2014. 12. 08. 사실), <‘십상시 행정관’이 되살려낸 청와대 문건 스캔들>(2015. 01. 15. 사실)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이 주도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로도 명시되었던 문체부 국장 경질(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관련해 최순실 딸 문제와 연관되었다는 의혹도 병행해 제기했다<sup>92)</sup>.

## (2) 진보언론의 ‘정윤희 문건’ 담론 텍스트

진보성향의 신문인 <경향신문>와 <한겨레>는 이 사건 파문이 이어진 기간 내내 시종 정윤희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와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책임론을 제기하였다. 텍스트 구성에 있어 매우 단호하면서 강경한 단어의 사용이 많은 점이 두 신문의 특징이다. <경향신문>은 <집권 2년…‘비선 국정농단’ 꼬리 잡혔나>(2014. 11. 29. 1면), <청와대 여당, ‘정윤희 의혹’ 본질 호도 말라>(2014. 12. 01. 사실), <‘국정농단’ 의혹을 ‘문서 유출’로… 본질 흐리는 여>(2014. 12. 01. 1면), <검찰은 ‘정윤희 의혹’ 어물쩍 덮

91) · 이러니 짜맞추기 수사 소리 듣는다 (중앙일보, 2014. 12. 15. 사실)  
· 검찰의 문건수사 과연 정성을 다했나 (중앙일보, 2015. 01. 03. 사실)  
· 짜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나 (중앙일보, 2015. 01. 06. 사실)  
92) 동아일보 (2014, 12, 05). <정윤희 딸 때문에 문체부 국장 경질된 게 사실인가>.  
<http://news.donga.com/3/04/20141205/68364502/1>  
동아일보 (2014, 12, 06). <전직 문체부 장관이 폭로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http://news.donga.com/3/04/20141206/68383821/1>

을 생각 마라>(2014. 12. 02), <‘비선 의혹’에 무조건 “루머” 라는 박 대통령>(2014. 12. 02. 사설), <‘정윤희 의혹’ 수사, 성역 두지 말고 철저히 하라>(2014. 12. 05. 사설), <박 대통령이 ‘문화부 국·과장 경질’ 진실 밝혀야>(2014. 12. 06. 사설) 등의 보도를 통하여 총체적 난국을 집중 성토했다는 담론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의 본질 규정과 관련해서도, <“짜라시에 흔들리는 나라 부끄럽다”는 대통령에게>(2014. 12. 08. 사설), <국민이 궁금한 건 유출 경위 아니라 ‘진실’이다>(2014. 12. 10) 등을 통해 대통령의 ‘짜라시 해명’ 담론을 반박하였다.

<한겨레> 역시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을 국정문란 사태로 규정하면서 청와대의 ‘짜라시’ 해명을 반박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 와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지적하는 내용의 텍스트 구성이 많았다. <악취 풍기는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2014. 11. 29. 사설), <청와대가 ‘짜라시 공장’이란 말인가>(2014. 12. 01. 사설), <박○○씨까지 거론되는 의문투성이 ‘비선 논란’>(2014. 12. 01. 사설), <박대통령 “문건은 루머, 유출은 국기문란”…수사지침 논란>(2014. 12. 02. 1면), <이래도 ‘문고리 권력’이 없다고 할 수 있나>(2014. 12. 03. 사설),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동반 퇴진이 우선>(2014. 12. 04. 사설), <‘문체부 국·과장 경질’ 사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2014. 12. 05. 사설), <여전히 ‘국정 농단’ 모르쇠 하는 대통령>(2014. 12. 08. 사설), <박대통령이 ‘국기 문란’ 자초한다>(2014. 12. 08. 1면), <대통령 ‘짜라시 지침’ 그대로…반 발짝도 만나간 검찰>(2015. 01. 06. 1면)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의 본질을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각 뉴스담론의 텍스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1시기 정윤희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 ‘문체부 국장 경질’, ‘짜라시’, ‘증권가 루머’, ‘대통령 해명’, ‘문체부 경질’, ‘국기문란’, ‘문건유출’, ‘검찰 수사’ 등의 단어가 담론 구성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정윤희 문건’이라는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과 ‘짜라시’ 담론이라는 이항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에서는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정윤희’, ‘문체부 국장 경질’, ‘십상시’ 등의 단어들이 서로 의미를 연결하며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거대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찌라시’ 담론에서는 ‘대통령 해명’, ‘증권가 루머’, ‘허위 내용’, ‘문건 유출’, ‘검찰 수사’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항대립은 결국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신문사와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권력핵심세력 간 담론 대결구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제는 2015년 1월말을 기점으로 해 신문의 주요 뉴스에서 빠졌다.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 인해 편집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태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며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발표한 후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소극적 보도 내지, 쟁점 본질을 제대로 보도 하지 않는 소위 ‘무(無) 보도 프레임’이 구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담론 대결에서 정윤희 문건 초기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던 ‘최순실’ 이름도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이 크게 불거진 2016년 9월에 다시 등장했다.

## 2)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담론

제1시기 ‘정윤희 문건’으로 촉발되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신문사와 청와대 권력핵심 간에 문건내용의 진위 등을 놓고 담론의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었다면, 제2시기(2016. 10. 24~12. 09)에서 터져나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대부분 언론에서 비판적 논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다는 점이 대비되는 부분이다. 정윤희 문건 파문 당시 대통령 및 청와대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를 폈던 <조선일보>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비판적 입장으로 전면 선회했다. 그 결정적 계기는 2016년 10월24일 보도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내용 공개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대기업 자금 모금 지원이나,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삼성의 최순실 딸 승마 지원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이권개입이나 특혜 연루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국정개입의 실체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언론의 논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시적 담론에서는 보수신문 혹은 진보신문 할 것 없이 비판적/부정적 기사를 쏟아냈다<sup>93</sup>).

(1) 보수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담론 텍스트

<조선일보>는 태블릿PC가 공개되기 이전부터 담론 텍스트 구성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전경련 해산’, ‘문화계 황태자’, ‘최순실 모녀’, ‘이화여대’ 등의 단어가 제목이나 기사본문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높았다. 또한 각 텍스트가 구성하는 의미도 단호하고 강경한 발화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특징을 보였다. 이를 테면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2016. 10. 03. 사실), <전경련 해산 결단할 때 됐다>(2016. 10. 06. 사실), <‘문화계 황태자’는 무엇이며 검찰은 수사할 의지나 있나>(2016. 10. 07. 사실), <與 미르재단 감사 봉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2016. 10. 12. 사실), <최순실씨는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나>(2016. 10. 18. 사실), <K스포츠재단 결국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用이었나>(2016. 10. 19. 사실), <梨大 총장은 사퇴, ‘최순실 스캔들’ 더 덮을 텐가>(2016. 10. 20. 사실), <朴대통령 ‘최순실 의혹 해명’ 국민이 납득 하겠나>(2016. 10. 21. 사실)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태블릿PC가 공개되던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발표한 개헌에 대해서도, “朴대통령 改憲 제안 순수하지 않다”(2016. 10. 25)면서 최순실 게이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개헌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며 비판을 가했다. 또한 태블릿 PC 국정개입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서는,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 충격 보도에 靑 침묵, 말이 안 나온다”(2016. 10. 25), “부끄럽다”(2016. 10. 26), “최순실이 정부 예산까지 짰다니 믿기지 않는다”(2016. 10. 28) 등과 같이 ‘충격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담론 텍스트 구성이 많았다. ‘1면 종합’ 기사에서도 <최순실, 入試·땅개발 靑문건도 미리 받았다>(2016. 10. 27), <최순실,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 직접 짰다>(2016. 10. 28), <장막 뒤의 여자, 분노 앞에 서다>(2016. 11. 01), <정부가 멈춰 섰다>(2016. 11. 02) 등 최순실 관련 새로운 비리사실이나 이의 파장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93)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사 중 최순실 국정개입 관련 보도는 315건이었는데, 보도태도를 보면 ‘부정/비판/반대’ 논조 기사가 전체 263건(83.5%)에 달했다. ‘중립적’ 논조는 50건(15.9%), ‘공정/옹호/지지’ 논조는 2건(0.6%)에 불과했다. 보수신문에서도 ‘옹호’ 기사가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순실 연관 각종 비리사건 보도(사례수 97건)와 관련해서는 ‘공정/옹호/지지’ 논조 기사는 단 1건도 없었다. 반면 ‘부정/비판/반대’ 논조는 72건(74.2%), ‘중립적’ 25건(25.8%)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수사는 물론 피해기업들의 진실고백 촉구, ‘친박 세력 퇴출’ 등 발화자의 호소 내지 주문을 담은 텍스트가 전면에서 등장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순실 수사, 특검이 역사에 교훈 남기라”(2016. 10. 26), “親朴, 이제 사라질 때다”(2016. 10. 27), “최순실에게 갈취당한 기업들, 숨지 말고 진실 밝히라”(2016. 10. 29), “최순실로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 있다면 폐기하라”(2016. 10. 31) 등을 이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 양태는 제1시기 ‘정윤희 문건’ 때와 비교하면 논조나 담론 텍스트 구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윤희 국정농단 파문 때에는 대통령의 해명을 옹호하거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반대 논조의 담론텍스트가 자주 등장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는 최순실 및 청와대 측근세력에 제기된 의혹을 ‘적폐’로 규정 하며 이를 척결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94)</sup>.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전경련 존재의 이유’, ‘미르 강제모금’, ‘K스포츠재단’, ‘최순실 딸 이화여대’, ‘崔-禹 블랙홀’, ‘최순실 PC’, ‘대통령 연설문’, ‘국정농단’, ‘시국선언’, ‘최순실 政府’, ‘문고리 3인방’, ‘재산 환수 특별법’ 등이 담론 텍스트 핵심어로 제시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비선실세로서 최순실 관련 비리사건 및 전경련을 통한 미르재단 모금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개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순실 정부’라는 은유적 표현까지 전면에서 사용하였다<sup>95)</sup>. 최순실 태블릿PC가 공개된 후에는 <박근혜

94) <조선일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논조가 강경 기조로 변화한 것은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충격적이라는 점, 국민적 분노가 ‘촛불’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 외에도 2016년 7월 전후해 시작된 당시 청와대 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권력실세들에 대한 집중적 의혹 제기 보도 등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조선일보>는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집중적 기사를 보도해 왔는데, 검찰이 2016년 8월9일 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일이 발생해 <조선일보>와 청와대 핵심세력 간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다음은 2016년 8월에 보도되었던 <조선일보> 주요 기사.

- 우○○ 수석 그대로 두고 改閣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2016. 08. 15)
- 검찰은 ‘우○○ 비리 의혹’ 왜 수사하지 않는가 (2016. 08. 17)
- 그래도 우 수석 감싸는 靑과 친박들 지금 제정신인가 (2016. 08. 19)
- 대통령 최측근 우○○ 수사 의뢰, ‘政權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 (2016. 08. 19)
- 靑, 우○○ 개인 비리 의혹을 정권 차원 문제로 키우나 (2016. 08. 20)
-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하는 喜劇 (2016. 08. 24)
- 기자 압수 수색은 禹 수석 처가 땅 보도에 대한 보복인가 (2016. 08. 30)

95) <동아일보>의 최순실 관련 주요 보도사례로는 <경총 회장이 밝힌 ‘미르’ 강제모금…안○○ 수석은 담하라>(2016. 10. 11. 사설), <‘미르 의혹’에 입 닫은 전경련, 黨·政·靑은 비호하는

정부 아닌 ‘최순실 政府’ 였나…국민은 참담하다(2016. 10. 26. 사설), <청와대 제 집처럼 드나든 최순실, 대통령은 왜 숨겨야 했나>(2016. 11. 02. 사설) 등 ‘충격’ 담론과 함께 대통령은 왜 그녀를 숨겨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담론을 구사하였다. 최순실 귀국 후에는 <檢, 우○○의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파헤칠 결기 있는가>(2016. 11. 07. 사설), <靑 ‘문고리 3인방’ 박 대통령 아닌 최순실에게 충성 바쳤나>(2016. 11. 08. 사설), <수천억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 특별법’ 필요하다>(2016. 11. 09. 사설) 등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텍스트 구성 빈도가 많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촉구 프레임 대부분 최순실 ‘개인’에 초점 맞춰 접근하고 있고, 박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 부분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제기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sup>96)</sup>.

<중앙일보>의 경우 보수신문 중에서는 ‘대통령 책임’ 담론을 가장 강력히 펴는 텍스트 구성의 특징을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대통령’ 공동 책임선 상으로 접근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검찰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논조가 두드러졌다.

온 나라가 너무나도 우울하고 답답하다. -중략- 대한민국의 국체가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나를 성역 없이 조사하라. 잘못이 발견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중앙일보, 2016. 10. 26)<sup>97)</sup>

최순실 게이트의 출발점과 종착역은 대통령 자신이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철저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비선 패거리도 체념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 (중앙일보, 2016. 11. 2)<sup>98)</sup>

가>(2016. 10. 13. 사설), <전경련 ‘존재의 이유’ 물음 앞에 서다>(2016. 10. 15. 1면), <“K스포츠 직원 뽑을때 靑이 인사검증“>(2016. 10. 20. 1면), <‘최순실 딸 의혹’ 梨大총장 사퇴>(2016. 10. 20. 1면), <이대총장 사퇴까지 부른 ‘최순실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야>(2016. 10. 20. 사설), <국정 삼킨 ‘崔-禹 블랙홀’철저 수사가 출구>(2016. 10. 22. 1면), <비선 실제 의혹 최순실 PC에 대통령 연설문 관련 파일 44개>(2016. 10. 25. 1면) 등을 들 수 있다.

96)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검찰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논조는 <동아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7) 중앙일보 (2014, 10, 26). <[사설] 박 대통령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하라>.

<http://news.joins.com/article/20784945>

98) 중앙일보 (2014, 11, 02). <[이하경 칼럼] “나를 수사하라”>.

<http://news.joins.com/article/20808731>

최순실 관련 각종 특혜·비리 의혹 제기 및 검찰수사 촉구에 있어서도 담론 텍스트는 ‘안 된다’ ‘받으라’ ‘직시하라’ 등과 같은 촉구형 및 의문을 제기하는 반문형 술어 사용을 통해 논조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최순실 수사, 성역도 가이드라인도 안 된다>(2016. 10. 21. 사설), <‘최순실 의혹’ 수사, 모양 갖추기에 그쳐선 안 된다>(2016. 10. 24. 사설), <박 대통령의 최순실 국기문란 해명, 납득 안 된다>(2016. 10. 26. 사설),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2016. 10. 28. 사설), <대통령은 최순실을 즉시 귀국시켜야 한다>(2016. 10. 28. 사설), <조폭 공갈을 무색게 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2016. 10. 29), <대통령, 나라 위한다면 자진해 수사 받으라>(2016. 11. 02. 사설), <누가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나>(2016. 11. 02. 사설)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화여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이화여대 ‘최순실 딸’ 특혜의혹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2016. 10. 18. 사설), <‘최순실 딸 쇼크’ 130년 이대 치욕의 날>(2016. 10. 20. 1면), <총장 사퇴까지 부른 이화여대 사태의 충격>(2016. 10. 20. 사설) 등을 통해 ‘수사 촉구’ 담론을 지배적으로 펼쳐 나갔다.

## (2) 진보언론의 ‘최순실 국정농단’ 담론 텍스트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담론 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건 실체에 접근함에 있어 ‘최순실’ 보다는 ‘대통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두 신문은 2016년 9월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의 실체를 폭로하는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등 그녀를 둘러싼 각종 비리·특혜 의혹에 대한 단독보도 뉴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왔는데,<sup>99)</sup> 두 신문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대통령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9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와대 수석의 미르재단 모금 지원 보도는 <TV조선>이 2016년 7월말 처음으로 단독 보도하였으나, 후속보도는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최초 보도시점만 하더라도 ‘최순실’의 관련성 내지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6년 9월부터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의 특혜 및 각종 의혹과 관련해 그 중심에 있는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났다.

- 최순실 게이트 아닌 박근혜 게이트 아닌가 (경향신문, 2016. 10. 22. 사설)
- 대통령의 책임이 본질이다 (경향신문, 2016. 11. 01. 사설)
- ‘최순실 비리’는 박 대통령의 공동 책임 (한겨레, 2016. 10. 20. 사설)
- ‘최순실 게이트’는 헌정 파괴가 핵심이다 (한겨레, 2016. 11. 01. 사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겨레>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을 강조하는 담론을 집중적으로 생성하고 있다. <미르·케이재단 설립 ‘몸통’ 사실상 시인한 대통령>(2016. 10. 21. 사설)<sup>100</sup>, <최순실 가린 채 “불법 있다면 처벌” 박 대통령, 미르·K 수사 가이드라인>(2016. 10. 21. 1면), <검찰이 ‘권력남용’과 ‘국정농단’ 밝힐 수 있겠는가>(2016. 10. 24. 사설), <‘대통령 조사’ 없이 될 밝히려는 건가>(2016. 10. 29. 사설) 등의 기사를 통하여 대통령을 이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위기 탈출용 ‘최순실 개헌’>(2016. 10. 25. 1면) 등으로 일축하고, <박대통령 연설 등 44개 문건 최순실, 미리보고 고친 정황>(2016. 10. 25. 1면),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모임”>(2016. 10. 26. 1면), <박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과…거짓해명 논란>(2016. 10. 26. 1면), <대통령의 몰락 방조한 안○○ 같은 간신들>(2016. 10. 27. 사설), <국정 농단 ‘벗겨진 민낯’>(2016. 11. 01. 1면), <최순실, 장관출입 ‘11문’으로 청와대 검문없이 드나들어>(2016. 11. 01. 1면) 등과 같이 국정농단의 실체 폭로를 이어갔다.

태블릿PC 내용이 공개된 직후의 대통령 긴급 해명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연설문 유출’ 사과…거짓해명 논란>(2016. 10. 26. 1면), <당신들은 아직도 국민이 우스운가>(2016. 10. 27. 사설) 등을 통해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였다. 나아가 ‘대통령 자격’ 문제까지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나라를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뜨린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박 대통령의 의식 속에는 공과 사의 구분 자체가 애당초 없었다. 국가 중요 기밀 관리의 중요

100)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와 케이(K)스포츠 재단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혹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한겨레, 2016. 10. 21)

성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한겨레, 2016. 10. 26. 사설)<sup>101)</sup>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을 최순실 개인의 일탈로 변명하거나 박 대통령도 피해자인 것처럼 해명하며 특검수사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였다.

청와대는 “최순실씨의 호가호위”나 “일부 참모들의 일탈”이니 하는 변명을 앞세우며 “박 대통령도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내심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개편 정도로 위기를 모면할 궁리도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런 미봉책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청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이것만이 박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한겨레, 2016. 10. 28. 사설)<sup>102)</sup>

<전국 휩쓰는 성난 ‘촛불’, 꿈수로 끝 수 없다>(2016. 10. 31. 사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청와대의 ‘수습책’>(2016. 11. 01. 사설) 등과 같이 본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비판 담론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담론 텍스트 구성도 <한겨레>와 비슷한 기초를 보인다. 우선 태블릿PC 공개 이전에도 <최순실 딸 의혹 해소에 실패한 이화여대의 납득 못할 변명>(2016. 10. 19. 사설), <K스포츠재단은 결국 ‘최순실 모녀 승마재단’이었나>(2016. 10. 19. 사설), <‘돈도 실력, 너희 부모 원망하라’는 최순실 딸의 금수저론>(2016. 10. 20. 사설), <최순실 딸 경고했다고 교수를 교체한 학장, 이게 대학인가>(2016. 10. 21. 사설) 등과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의혹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연설문 작성 개입 등이 확인된 후에는 <청와대 정문 무시로 출입한 최순실의 대통령 행세>(2016. 11. 02. 사설), <최씨

101) 한겨레 (2016, 10, 26).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7271.html>

102) 한겨레 (2016, 10, 28). <박 대통령, ‘피해자 코스프레’로 위기 모면 못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7674.html>

언니·동생·조카 등 최씨 일가가 이 나라를 뜯어 먹었나>(2016. 11. 02. 사설)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폭로하는 보도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는 은유적 표현의 텍스트 구성이 많았던 점이 특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도 대통령이 중심에 있는 헌정사 초유의 스캔들로 규정하며, ‘최순실=대통령 책임’ 담론이 주류를 이뤘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25일 ‘패닉(공황상태)’에 빠졌다. -중략- 대통령과 사적 인연밖에 없는 민간인 최씨가 국가 최고 권부의 국정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상상 불가’의 현실을 목도하고, 정치권부터 일반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경악과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헌정사 초유의 ‘비선 국정농단 스캔들’에 여야에선 비판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향신문, 2016. 10. 26. 1면)<sup>103)</sup>

태블릿 PC를 통해 국정개입 정황이 드러난 시점에서는 최순실과 대통령 간에 이뤄진 충격적인 국정문란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며, ‘탄핵론’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춘추관에 들러 최씨의 조언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분노하고 있다. -중략- 박 대통령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실책을 숨기고, 최씨를 비호했음이 드러났다. -중략- 최씨의 국정농단이 확인되자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며 분노하고 있다. 거짓말한 박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가. (경향신문, 2016. 10. 26. 사설)<sup>104)</sup>

대통령의 해명 담화가 3차례 연이어 이뤄지는 과정에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거짓 해명’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 시점에서 <경향신문>은 국정농단사건은 대통령 사과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sup>105)</sup>,

103) 경향신문 (2016, 10, 26). <대한민국 ‘최순실 패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115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115001)

104) 경향신문 (2016, 10, 26) <탄핵론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문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114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114005)

105) 경향신문 (2016, 10, 26).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다 거짓으로 판명됐다. 눈시울을 붉혀가며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한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스럽다. 진실을 밝혀도 민심을 돌리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중략- 이제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2016. 10. 27. 사설)<sup>106)</sup>

이처럼 태블릿PC를 통한 최순실 국정개입 정황이 드러난 직후 이뤄진 대통령의 3차례 해명 과정에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 시기 진보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하야’ 내지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경향신문>은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2016. 10. 26)는 사실을 게재한 후, 일주일 후인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제목의 통단 사실을 통해 국내 일간신문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한겨레>도 2016년 10월 25일자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게재한 후, 11월6일자 <민심은 대통령의 사퇴 그 이상을 원한다> 사실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11월 13일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2시기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서 나타난 5개 신문의 담론 텍스트 구성은 제1시기 ‘정윤희 문건’ 때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1시기에서는 정윤희라는 비선실세의 존재 확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들어 낸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소위 ‘짜라시’ 담론이 등장하며 이항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을 띤다. 또한 당시에는 언론에서 제기한 국정개입의 책임론의 담론 텍스트는 정윤희 및 일명 ‘문고리 3인방’을 겨냥하고 있었고, 대통령은 직접적 책임론의 범주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11401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252114015&code=990101)  
106) 경향신문 (2016, 10, 27).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1&artid=201610262114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1&artid=201610262114005)

반면, 제2시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관련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 되는 초반부터 파급력이 강했고, ‘최순실=대통령 책임’ 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즉,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직접 서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2시기의 담론 텍스트 구성에 있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해명 입장 등을 통하여 미르재단 대기업 모금 지원과 관련한 ‘강제 모금’ 담론은 ‘재계 주도’ 담론으로, ‘최순실=대통령’ 담론은 ‘최순실 개인 일탈’ 담론으로 각각 맞불을 넣는 형태로 반전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이항대립적 담론은 형성되지 않았다<sup>107)</sup>.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정윤희 문건’ 당시와 비교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여러 가지 비리사건 및 특혜 사건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108)</sup>. 단순한 국정개입 차원이 아니라 이화여대 입학 특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통한 특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군집된 덩어리 형태로 묶어지면서 ‘대형 게이트’와 같은 거대한 파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현실인식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이 직접적 위헌·위법 혐의를 제기받는 상황에 처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해명’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설득력 있게 작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요구하는 성난 민심의 ‘촛불’이 확산된 것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처리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이르기까지 ‘탄핵’이라는 거대담론을 고착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07)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과 같은 거대 담론에서의 이항대립 구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시적 담론에서는 이항대립 요소가 많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구속, 촛불과 태극기집회의 대립,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에서 이항대립적 담론구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108) ‘정윤희 문건’은 비선실세 정윤희의 국정개입 정황은 판단되었으나 ‘청와대 권력내부 정보’라는 점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국정에 개입해 왔는지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다. 반면, 최순실 사건에서는 태블릿 PC 및 미르재단 모금 지원이나 K스포츠재단을 통한 이권 챙기기 등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의혹 확산의 속도가 빨랐고, 파급력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제3절 탄핵사건 담론적 실천 분석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어떻게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s)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담론 간 접합 및 탈접합 되어 이루는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간 상호 침투나 상호작용, 상호 존재와 같은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고 담론적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의 상호작용을 말한다(김영욱·함승경, 2014; 류용재, 2010; 신진욱, 2011; 이오현, 2017). 본 연구에서는 탄핵사건을 둘러싼 신문사의 담론적 실천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어떤 의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홀(Hall, 1985)의 접합이론의 틀을 차용해 시기별 쟁점이 되었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탐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윤희 문건’ 국정농단 의혹의 담론적 실천

2014년 11월28일 <세계일보>의 ‘정윤희 문건’ 보도로 시작되었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담론이 형성되며 논란이 전개되었다. 하나는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공식석상 발언 내지 해명 입장 발표를 통하여 형성된 ‘짜라시(허위 문건)’ 담론이다. 담론의 발화자를 중심으로 보면, ‘언론 vs 청와대 권력’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소문으로만 나돌던 청와대 비선실세 및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에 의한 국정농단 정황이 ‘문건’을 통해 처음 드러난 일로, 당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짜라시’로 규정한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표한대로 “문건의 내용은 허위”로 결론을 내리

면서 이 이슈는 진실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묻히게 된다.

### 1)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 = 비선실세 + 문고리 3인방 + 국정농단 + 십상시 - 짜라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은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희) 동향’이라는 제목의 동향 감찰 보고서, 즉 일명 ‘정윤희 문건’을 통하여 그동안 증권가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김○○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등이 비선조직을 통해 퍼트린 루머였던 것으로 나타난데 따라 생성된 미디어 담론이다. 당시 <세계일보>는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은 정윤희씨가 자신의 비선라인을 통하여 퍼트린 루머로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세계일보, 2014. 11. 28).

이 담론은 크게 ‘정윤희 문건’을 통하여 실체가 드러난 청와대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불리는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국정개입’, 그리고 ‘십상시(十常侍)’를 접합시키고,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는 ‘짜라시 담론’을 탈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형성된 담론이다. 즉, 막강한 비선실세인 정윤희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정을 농단해 왔고, 이 비선조직의 행태는 망국과 부정한 권력을 상징하는 ‘십상시’와 같은 환관정치의 폐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담론적 실천 방향으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때 아닌 십상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민간인 신분인 정윤희씨와 청와대 비서실의 3인방 등 문고리 권력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야당에서 “문고리 권력을 넘어 환관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이 십상시로 비유됐다. 이번에는 이들이 청와대 문고리를 독차지하려고 다른 측근 세력과 암투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향신문, 2014. 11. 30. 오피니언)<sup>109)</sup>

109) 경향신문 (2014, 11, 30). <[여적] 십상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30204838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302048385)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아수라장이다. 청와대 문건 파문이 자고 일어나면 사방팔방으로 번지고 있다. ‘권력 암투’ ‘진실 게임’ ‘막장 드라마’가 골고루 섞인 궁중(宮中) 소설이 따로 없다. -중략- 이제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만 될 뿐이다. 그동안 술한 인사 실패와 비선 정치 의혹의 한복판엔 항상 이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부속실 3인방’이 아무리 오랫동안 모셔왔다 해도 이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게 박 대통령에 대한 도리다. (중앙일보, 2014. 12. 06 . 사설)<sup>110)</sup>

‘비선 실세’ 논란을 빚고 있는 정윤희 최순실 씨 부부(현재는 이혼)가 대한승마협회 감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중략- 승마 선수인 정 씨의 딸이 지난해 4월 전국승마대회에서 준우승을 해 판정 시비가 불거진 뒤 승마협회 특별감사가 이뤄졌고 협회 조사를 진행한 문체부 주무 국장과 과장이 경질됐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정 씨를 지목했다. (동아일보, 2014. 12. 05. 사설)<sup>111)</sup>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은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 신문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비슷하나 진보언론이 여러 가지 의혹의 담론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연결시키며 의혹제기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 ‘비선실세’로서 정윤희 존재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의 최고 실세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비선실세 실체 및 권력서열 등의 담론요소들이 추가로 접합된 것이다.

- “정윤희 전처 최순실, 10·26 이후 박 대통령 ‘말벗’” (한겨레, 2014. 12. 03)
- 정윤희는 ‘꼬리’, ‘몸통’은 박 대통령 말벗 최순실? (한겨레, 2014. 12. 04)
- 정윤희·최순실 실세설…아니 댐 굴뚝의 연기? (경향신문, 2014. 12. 06)
- “권력서열 1위 최순실, 2위 정윤희, 3위 박근혜” (경향신문, 2015. 01. 08)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해명입장이나 공식석상 발언을 통하여 ‘정윤희 문건’의 내용은 ‘짜라시’에 불과하고, 비선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110) 중앙일보 (2014, 12, 06). <‘문고리 3인방’ 부터 물러나야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16623454>

111) 동아일보 (2014, 12, 05). <정윤희 딸 때문에 문체부 국장 경질된 게 사실인가>.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1205/68364502/1>

후, 이 사건을 ‘국정농단’이 아닌 ‘문서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자 <경향신문>과 <한겨레>, <중앙일보>는 이를 ‘본질 흐리기’ 내지 ‘물꼬 돌리기’ 시도로 규정하며 ‘짜라시’와 ‘검찰수사’ 담론요소를 탈접합시키는 방법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켰다.

‘정윤희씨 국정농단 검찰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정씨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일보다는 엉뚱하게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쪽으로 사건의 물꼬를 돌리려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짜라시에 불과하다”고 서둘러 규정한 것이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단적인 증거다. -중략- 그렇다고 해서 정윤희씨 파문이 덮어지고, 더 이상은 비선이니 문고리 권력이니 하는 말이 사라질 것인가. 그것 또한 어림없는 일이다. (한겨레, 2014. 12. 01. 사설)<sup>112)</sup>

‘박근혜 정부 ‘숨은 실세’로 알려진 정윤희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秘線)권력의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본질보다는 공직자 기강 해이 문제로 돌리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향신문, 2014. 12. 01. 1면)<sup>113)</sup>

사건의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기도 한 청와대가 수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몰아가고 있다. 며칠 전에도 청와대는 ‘정윤희 문건’ 유출에 대한 자체 검찰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중략-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도를 넘는 월권행위이자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자칫 정윤희씨 등 비선(秘線) 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란 사건의 본질을 희석해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등이 주도한 허위 문건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중앙일보, 2014. 12. 15. 사설)<sup>114)</sup>

112) 한겨레 (2014, 12, 01). <청와대가 ‘짜라시 공장’이란 말인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6772.html>

113) 경향신문 (2014, 12, 01). <‘국정농단’ 의혹을 ‘문서 유출’로… 본질 흐리는 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30224844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302248445&)

114) 중앙일보 (2014, 12, 15). <[사설] 이러니 짜맞추기 수사 소리 듣는다>.

<http://news.joins.com/article/16695387>

## 2) 찌라시 담론

찌라시 담론 = 증권사 루머 + 문건유출 사건 + 검찰수사 - 비선실세 국정농단

<찌라시 담론>은 문건의 내용은 증권사에 나도는 루머 수준의 허위내용임을 전제로 하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을 탈접합시키고 대신 ‘문건유출 사건’ 담론과 ‘검찰수사’ 담론을 접합시킴으로써 형성된 담론이다. 즉, ‘정윤희 문건’ 과문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 사례의 문건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선실세의 존재나 문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부각시킴으로서 여론의 초점을 ‘문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로 이동시키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에서 ‘문서유출 사건’으로 물꼬를 돌리며 과문 진화에 나선 첫 발화자는 박 대통령이였다. 그는 <세계일보> 단독 보도 후 과문이 급속히 확산되자 2014년 12월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농단의혹을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으로 표현하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행위이다”면서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루머’로 규정하고, ‘비선실세’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일축하였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한 여러 사항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와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다. -종략-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秘線)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sup>115)</sup>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발언은 그해 12월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의 청와대

115) <조선일보> 아래 보도 기사에서 대통령 발언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조선일보 (2014, 12, 02). <朴대통령 “靑문건 유출, 국기 문란 행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2/2014120200329.html?rsMobile=fals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2/2014120200329.html?rsMobile=false)

오찬간담회에서 나왔다.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렸고, 문건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 골자이다. 국정농단 담론에서 형성된 ‘비선실세’ 및 ‘권력내부 갈등’, ‘국정 개입’ 등의 담론요소들을 탈접합시키고, 대신 ‘찌라시’와 ‘증권가 루머’, ‘허위’, ‘문건 유출’, ‘검찰수사’ 등의 요소를 접합시키면서 ‘찌라시’ 담론으로 통일성(unity)을 만들고 있다.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오래전에 곁을 떠난 사람(정윤희)과 청와에 얼씬도 못하는 사람이 갈등을 빚고 국정 전횡을 하는게 말이 되느냐. -중략- 실세는 없다.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sup>116)</sup>

당시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미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의혹 사례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다를 바 없어 대통령의 어긋난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sup>117)</sup>.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을 탈접합 시킨 가운데 형성된 ‘찌라시 담론’의 마지막 정점은 검찰 수사발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6일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정윤희 문건’은 풍문과 전언(傳言)을 짜깁기해 만든 허위”라고 밝히며, 문건유출 관련자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러한 수사결과에 대하여 <조선일보>를 제외한 대부분 언론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을 쏟아냈다<sup>118)</sup>. ‘찌라시에 집착

116) <경향신문> 아래 보도 기사에서 대통령 발언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경향신문 (2014, 12, 8). <박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가 흔들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80600105&cod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80600105&code)

117) 경향신문 (2014, 12, 08). <[사설] “찌라시에 흔들리는 나라 부끄럽다”는 대통령에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7204648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72046485&code=990101)

118) ‘정윤희 문건’ 관련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일부 기사에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입장 옹호 논조가 나타났다. ‘정윤희 모임’을 제보한 국세청의 전 간부가 정확한 출처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데 포커스를 맞춰 보도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진보언론을 중심으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보도가 나가고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한복까지 챙겨주었다는 얘기가 회자되자, <조선일보>는 한 취재원의 말을 인용한 제목 짓기 방식으로 사실이 아닐 것임을 역설적으로 제시하는 ‘금시초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 ‘정윤희 모임’제보한 前국세청 간부, 정확한 출처 못대 (2014. 12. 9. 3번 보도)

한 수사’,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 ‘대통령의 착각과 오만’ 등의 요소들이 추가로 접합되었고, 답론적 실천방향으로 특검 및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검찰의 문건수사 과연 정성을 다했나 (중앙일보, 2015. 01. 03. 사설)
- 짜라시에 집착한 수사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나 (중앙일보, 2015. 01. 06. 사설)
- ‘정윤희 의혹’ 특검·국정조사 불가피하다 (경향신문, 2015. 01. 06. 사설)
- ‘비선 권력’ 논란 불식시키려면 청와대 쇄신해야 (경향신문, 2015. 01. 06. 사설)
- 청와대, 또 반성·사과 없이 '개인 일탈'로 넘어가나 (경향신문, 2015. 01. 07. 사설)
- 의혹과 불신만 키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한겨레, 2015, 01. 06. 사설)
- 박 대통령의 ‘착각과 오만’ (한겨레, 2015. 01. 07. 사설)
- ‘박○○ 비선’만 밝혀내고 문 닫은 청와대 문건 수사 (동아일보, 2015. 01. 06. 사설)

## 2. 문체부 국·과장 경질 논란의 답론적 실천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논란을 불러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논란은 ‘정윤희 문건’ 과문이 터져나온 직후인 2014년 12월 3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이슈화됐던 사건이다. 2013년 8월 문체부가 비선실세로 불리던 정윤희 딸이 참가한 승마 전국대회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정씨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서 정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한겨레>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승마협회 전·현직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씨 부부는 승마 선수인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이 일자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다수의 승마협회 관계자들이 주장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승마협회 조사·감사에 직접 나섰다. 정씨 부부는 문체부 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그해 9월 조사의 주무를 맡았던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는 데 개입했고, 이 좌천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

---

· “정윤희 前부인이 박대통령 한복 챙긴다는 건 금시초문” (2014. 12. 5. 4면 보도)

다고 한다. (한겨레, 2014. 12. 03. 1면)<sup>119)</sup>

당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은 문책성 인사로 좌천되었다가 해당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유○○ 장관도 면직되었다. 문체부는 또한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이 일에 대해 언론에서는 비선실세 정윤희 딸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경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 기사를 쏟아냈다. 이 논란은 가뜩이나 ‘정윤희 문건’으로 파문이 확산되던 즈음에, 자칫 정윤희 국정개입의 직접적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던 것도 이러한 점 때문으로 풀이 된다<sup>120)</sup>. 박 대통령은 정윤희 딸의 승마대회와 관련하여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이 조작된 것”이라고 응수하며 진화에 나섰는데, 결국 이 문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올랐다.

#### 1) 문체부 인사게이트 담론

**문체부 인사게이트 담론 = 정윤희 딸 승마 + 궤뺏죄 + 대통령 지시 - 체육계 적폐**

‘문체부 인사 게이트’ 담론의 발화자는 언론으로, ‘정윤희 딸 승마’, ‘궤뺏죄’, ‘대통령 지시’를 집합시키고, ‘체육계 적폐’를 탈집합 시키며 형성된 담론이다. 즉, 문체부 체육관련 국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인사조치의 이면에 비선실세로 군림하던 정윤희의 딸 문제가 있었고, 정윤희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궤뺏죄’에 걸려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문책 인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지시한 것은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논란과 함께, 궤뺏죄 배경이 국·과장 경질 배경이 ‘정윤희 문건’으로 큰 파문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정윤희 딸과

119) 한겨레 (2014, 12, 03). <[단독] “정윤희 관련 문체부 국·과장, 박 대통령 직접 교체 지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67268.html>

120) 경향신문 (2015, 01, 13) <박 대통령 “정윤희 인사 개입 의혹은 조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장은 더욱 컸다.

<한겨레>는 첫 단독보도가 나간 다음날 사설을 통해 “문체부와 승마협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문투성이”라면서 2013년 당시 있었던 ‘정윤희 딸’과 관련한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정윤희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지난해 5월 문체부가 청와대 지시로 전례 없는 승마협회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정씨 쪽에 유리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 문체부가 ‘정윤희씨 쪽이나 반대쪽이나 다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유○○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를 담당할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의 인사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첩을 꺼내 국장과 과장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 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 2014. 12. 4. 사설)<sup>121)</sup>

<한겨레>는 정윤희의 인사 개입 의혹사례가 비선세력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를 ‘문체부 인사 게이트’로 명명했다<sup>122)</sup>. ‘정윤희 딸’, ‘승마대회’, ‘박 대통령 수첩’, ‘괘씸죄’, ‘인사조치’ 등의 담론 요소들을 연결시키면서 공무원 경질인사에 비선실세가 개입되었고 그 배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담론을 형성시켰다.

비선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희씨가 청와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 조사 압력을 넣었고 조사방향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실무 국장 경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문화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의 지시로 전례 없는 승마협회 조사·감사에 나섰고, 정씨 부부는 문화부의 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조사 주무 국장과 과장을 좌천시키는 데 개입했다고… (경향신문, 2014. 12. 04. 3면)<sup>123)</sup>

121) 한겨레 (2014, 12, 04). <[사설] ‘문체부 국·과장 경질’ 사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7522.html>

122) 한겨레 (2014, 12, 05) [사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문체부 인사게이트’.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7738.html>

123) 경향신문 (2014, 12, 04). <정윤희 청와대 통해 압력, 문화부 간부진 경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경향신문>은 또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희씨가 개입된 승마협회 내부 논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씨 편을 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을 직접 지시했다는 유○○ 전 문화부 장관의 증언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실체를 드러낸 사례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였다.

이만큼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실체를 드러내는 사례도 없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는 유 전 장관 증언이 나오자 “장관 대면보고 때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책임자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해명이라고 한 건가. 바로 그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문화부 국·과장 좌천 인사를 한 사람이다. 이제 의혹의 몸통은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조치를 지시하면서 “나쁜 사람이라더라”고 인용화법을 썼다.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은 것인지를 포함해 모든 진상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4. 12. 05. 사설)<sup>124)</sup>

<동아일보>도 <정윤희 딸 때문에 문체부 국장 경질된 게 사실인가>(2014. 12. 05. 사설), <전직 문체부 장관이 폭로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2014. 12. 06. 사설)<sup>125)</sup>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청와대로부터 승마협회를 따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문체부에 내려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 씨와 가까운 승마협회 간부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 씨와의 연관설이 불거질만했다. 이 소문은 문체부의 울타리를 넘어 퍼져 나갔다. -중략- 연말에 ‘정윤희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문체부에서 출발한 일이다. (동아일보, 2014. 01. 22. 오피니언)<sup>126)</sup>

124) 경향신문 (2014, 12, 05). <[사설]박 대통령이 ‘문화부 국·과장 경질’ 진실 밝혀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125) “유 전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정 씨가 문체부 간부 인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기존 폭로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대통령에게 승마협회 문제를 전한 사람이 정 씨 부부인지 이 비서관인지 알 수 없지만 유 전 장관의 말이 맞는다면, 대통령의 비선은 이 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권력 3인방’이며 3인방 뒤엔 정 씨가 있다는 세간의 의혹과 딱 맞아떨어진다. 박 대통령이 문체부의 공식 조사 결과 대신 비선의 말만 믿고 공직자들을 처벌한 것이 사실일 경우,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지자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 2014. 12. 06. 사설)

<중앙일보>는 국장·과장의 문책 인사뿐만 아니라 차관의 발탁, 장관의 전격 경질이라는 담론요소를 추가로 접합시키며, 그 배후에 ‘비(非) 공식 라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담론적 실천 방향으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를 받았던 국장·과장이 정씨 측에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자 보복을 당해 좌천됐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선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된다. -중략- 국민과 공직사회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를 그냥 넘기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로 설 수 없다. 청와대와 문체부, 공직 감찰기관은 인사 문란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런 의혹이야말로 묻으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2014. 12. 06. 사설)<sup>127)</sup>

<조선일보>도 문체부 국·과장 경질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뤘으나, 담론의 접합 구조는 다른 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사건의 본질에 대한 담론 요소 보다는 ‘대통령과 전직 장관의 충돌’이라는 갈등대립 프레임 요소를 접합시켰다. 이는 대통령과 전직 장관 간 갈등이라는 흥미적 요소를 통해 경질인사를 행한 원인에 대한 본질적 측면은 가려지게 하는 담론적 실천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작년 8월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및 체육정책과장의 교체 배경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당시 장관이 치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부 실무자 인사를 둘러싸고 이런 공개적 다툼이 전개되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중략- 인사 다툼은 자리 싸움이고 결국 권력 쟁탈전이다. 인사권을 휘두른 쪽이나 억울하게 당했다는 쪽이나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私的)으로 휘두르려고 했던 권력욕(權力慾)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국민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일보, 2014. 12. 06. 사설)<sup>128)</sup>

126) 동아일보 (2014, 01, 22) <[홍찬식 칼럼]박근혜 대통령과 문체부의 악연>.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096/3/70040100000096/20150122/69215458/1](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096/3/70040100000096/20150122/69215458/1)  
127) 중앙일보 (2014, 12, 06). <[사설] 장관·차관·국장·과장…문체부 총체적 인사 문란>.  
<http://news.joins.com/article/16623452>  
128) 조선일보 (2014, 12, 06). <[사설] 대통령-전직장관의 충돌, ‘국정 亂脈’ 어디까지 갈 건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5/201412050378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5/2014120503781.html)

## 2) 체육계 적폐 척결 담론

**체육계 적폐 담론 = 비리 척결 + 공무원 안이한 대처 + 조작된 주장 - 정윤희 딸 승마**

‘체육계 적폐 담론’은 ‘체육계 비리 척결’ 및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 ‘조작된 주장’을 접합시키고, ‘정윤희 딸 승마’는 탈접합 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진 담론이다. 즉, 문체부 국·과장의 경질인사가 비선실세 정윤희의 딸 승마대회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했으나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로 비리척결이 지지부진해 책임을 물은 것인데 ‘터무니없이 조작된 주장’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문체부 장관과 차관이 연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내용을 폭로한 유○○에 대한 대응까지 언급하고 나섰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자 2014년 12월 5일 민○○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문체부 국·과장 교체를 지시한 것은 맞지만, 정윤희 비선실세가 개입되어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실시한 공식 감찰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진 적법한 인사조치였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골자다.

“작년 5월 29일 한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 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체육계 비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박 대통령은 ‘체육계의 오랜 적폐(積弊)를 해소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했다. 이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 전 장관이 실태와 개선 방안을 보고했지만,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고 체육계 비리 척결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작년 8월 21일 유 전 장관 면보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sup>129)</sup>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은 비선실세 정윤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지 않아

129) <조선일보> 아래 보도 기사에서 청와대 발표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조선일보 (2014, 12, 06). <靑 “문체부 局·課長 교체는 조○○의 감찰報告 따른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6/201412060025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6/2014120600254.html)

서 패썹죄에 걸린 것이라는 유○○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고, 박 대통령도 당시 유 전 장관에게 감찰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2014. 12. 06). 그럼에도 문체부 문책인사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2015년 1월 13일 신년회견을 갖던 중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윤희의 인사개입은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단호하게 부정하였고, 문책인사를 한 이유는 앞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던 내용에 준해 설명했다.

“체육계에 자살하는 부모가 생기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제가 계속될 때까지 따지는 스타일인데 역할을 하지 않아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인데 이상하게 얘기가 나돌았다. 체육계 비리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니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인사문책) 된 건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계속 논란을 하고, 우리가 그런 여유 있는 나라인가.”<sup>130)</sup>

이처럼 문체부 경질 인사를 두고 언론에서는 정윤희 비선실세가 개입해 일어난 ‘인사 게이트’로 규정하는데 반해, 대통령은 이를 ‘조작된 허위 내용’으로 규정하며 인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뒤늦게 ‘감찰보고’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하였으나 이 내용은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 지시를 할 때 ‘감찰보고’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을 빚은 정윤희 딸 승마대회 당시 경찰이 심판들을 불러들여 조사하는 이례적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31)</sup>. 이 때문에 이 인사게이트 논란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다시 이슈로 부상하여 탄핵소추 사유에 명시되었다.

130) <경향신문> 아래 보도 기사에서 대통령 발표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경향신문 (2015, 01, 13) <박 대통령 “정윤희 인사 개입 의혹은 조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131) 동아일보 (2015, 01, 13). <朴대통령 “문체부 인사개입, 터무니없는 조작”>.

<http://news.donga.com/3/all/20150113/69051992/1>

“정윤희 씨의 딸이 출전한 상주 승마대회 판정 문제에 관한 경찰 내사 착수 배경과 문체부의 승마협회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보통 판정 시비 등이 일어나면 해당 협회에서 해결하는 게 관례지만 상주대회는 이례적으로 심판위원장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공무원 임면권 남용 부분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 했으며, 장관이던 유○○은 면직되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장과 과장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 3.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의 담론적 실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쟁점이자, 탄핵정국을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이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언론의 보도 때문이었다. <TV 조선>은 2016년 7월말부터 3번에 걸쳐 이 두 재단에 관한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 첫 번째가 2016년 7월26일 보도된 ‘청와대 수석의 500억 모금 개입 의혹’이었다. 국가브랜드를 높이자는 취지로 2015년 10월 만들어진 ‘미르’라는 민간 문화재단이 설립 두 달 만에 대기업에서 500억원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안○○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설립과 모금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뉴스의 핵심이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6개 그룹 30개 기업에서 미르 재단에 모금 지원한 총액은 486억원으로 보도되었다(TV조선, 2016. 7. 26)<sup>132)</sup>. 그리고 2016년 8월2일, 케이스포츠라는 체육재단법인에도 380억원이 넘는 돈이 모금 지원되었는데, 이 모금 창구 역시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안○○ 청와대 수석이 주도하고 전경련이 실무를 맡아 모금을 지원한 것을 확인됐다는 두 번째 단독보도가 나왔다(TV조선, 2016. 8. 2)<sup>133)</sup>. 다음 날에는 대기업의 거액 모금지원이 이뤄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두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성

132) TV조선 (2016, 07, 26). <[단독] “靑 안○○ 수석, 500억 모금 개입 의혹”>.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133) TV조선 (2016, 08, 02). <[단독] ‘케이스포츠재단’ 400억 모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90166.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90166.html)

된 것이 확인되었고, 수상한 두 재단의 배후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세 번째 단독보도가 이어졌다(TV조선, 2016. 8. 3)<sup>134</sup>).

이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대부분 중앙일간신문에서 청와대 우○○ 민정수석 등 대통령 측근 관련 각종 의혹제기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었던 때여서 청와대 안○○ 수석이 개입한 이 두 재단의 실체는 공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언론의 후속보도는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았고, 3번에 걸친 보도 후에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바로 등장하지 않았다<sup>135</sup>). 이 두 재단의 실체 및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 것은 <한겨레>의 그해 9월 20일자 단독보도였다. 이것이 일명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게이트’로도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었다. 이후 대통령 비선실세의 특혜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실체적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에서도 ‘최순실’ 관련 추가적인 의혹과 논란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상황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 1) 최순실 게이트 담론

**최순실 게이트 담론 = 대기업 강제모금 + 청와대 개입 + 전경련 해체 - 대통령 해명**

‘최순실 게이트 담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이다. 이 담론은 ‘대기업 강제모금’과 ‘청와대 개입’, ‘전경련 해체’를 접합시키고 일련의 내용에 대해 ‘비방’ 내지 인신공격성 폭로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134) TV조선 (2016, 08, 03). <[단독] 미르·K스포츠 회의록 관박이...배후는 동일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90184.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90184.html)

135) <TV조선>에서 후속보도가 없었던 이유와 관련해, <한겨레>는 ‘오피니언’ 지면의 <아침 햇살> 코너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우○○’, ‘송○○’에 이어 드디어 ‘최순실’이 등장했다. <한겨레>의 20일치 특종보도로 우○○ 민정수석 파문 이후 소문만 무성하던 의혹의 실체에 한발 다가선 느낌이다. 우○○ 비리도 그렇지만 케이(K)스포츠·미르 재단 의혹도 먼저 터뜨린 것은 조선일보 계열사들이었다. 그런데 친박 의원에 의해 주필의 비리가 폭로되고, 또 다른 ‘고위관계자’의 ○○○○ 전 회장 등 구명 로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미르 후속 보도는 끊겼다. 그리고 사주는 사보를 통해 임직원을 ‘관리’하는 사장으로서 미안하다며 독자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우○○ 비리 보도 이전 청와대와 조선일보사 사이에 뭔가 ‘밑당’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마주한 언론들> 中. (2016. 09. 20. 오피니언)

해명을 탈접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비선실세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였고,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전경련이 실무적 역할을 맡아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에 지원했다는 것으로, 이의 담론적 실천방향으로는 전경련 해체와 더불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대통령의 해명 내용은 담론 구성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 최순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2016년 9월 20일 전후한 시점이다. <한겨레>는 800억원에 가까운 재벌들의 모금 지원이 이뤄진 두 재단을 운영하는 실제적 인물은 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고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이라고 보도했다.

여기 ‘의문의 재단’ 두 곳이 있다.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K)스포츠다. 두 재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재벌들이 800억원 가까운 거금을 내 만든 것이다. -종략- 재단 설립은 신청한 지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 대놓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그나마도 서로 베낀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까닥 도장을 찍어줬다. 도대체 두 재단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 2016. 09. 20. 1면)<sup>136)</sup>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희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정윤희는 그저 데릴사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전직 청와대 관계자)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청와대 내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말벗’인 최순실씨가 케이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역할과 비중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한겨레, 2016. 09. 20. 4면)<sup>137)</sup>

두 재단에 제기되는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추가적으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모금해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전경련은 왜 이 대기업 모금에 앞장

136) 한겨레 (2016, 09, 20). <[단독]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6.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6.html)

137) 한겨레 (2016, 09, 20). <[단독] ‘권력의 뱀새’ 스텔…실세는 정윤희가 아니라 최순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2.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1792.html)

선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통상 1주일 정도 걸리는 재단설립 허가를 단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해주었는지 등이 그것이다(한겨레, 2016. 9. 20)<sup>138)</sup>. 이러한 의문들은 자연스럽게 의혹의 중심에 최순실과 더불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하게 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이외에 특별한 직책이랄 게 없는 최씨가 지난해 말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을 잇따라 설립, 순식간에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이라는 출연금까지 모았다는 게 의혹의 줄거리다. -중략- 고용창출을 하라고 해도 좀처럼 돈을 내놓지 않는 재벌이 8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중략- 대통령의 지인인 최씨가 아는 사람들을 내세워 재단을 설립하고, 권력이 뒤에서 밀어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2016. 09. 22. 사설)<sup>139)</sup>

두 재단 설립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크게 확산되자, 전경련은 그해 10월 1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재단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각 언론에서는 “꿈수이자 증거인멸을 위한 시도”, “의혹 덮기 위한 목적”, “금융계좌 등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것” 등의 의구심과 함께 비판들이 쏟아졌다<sup>140)</sup>. 이러한 가운데 최순실 관련 의혹은 최순실 딸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추가적인 의혹과 맞물리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급기야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 모녀의 뒷바라지 용도로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고,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 원망하라”는

138) 한겨레 (2016, 09, 20). <[사설] 정권 핵심과 ‘미르-케이스포츠-최순실’ 연루 의혹>.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1794.html>

139) 경향신문 (2016, 09, 22). <[사설] 최순실이 뭐라고 재벌들이 800억원을 모아줬는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1&artid=201609212048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1&artid=201609212048005)

140) 경향신문 (2016, 10, 01). <[사설] 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이라니, 의혹 덮자는 건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30203402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302034025&code=990101)

동아일보 (2016, 10, 01). <[사설]미르·K스포츠재단 합치면 靑개입 의혹 덮일 것 같는가>.

<http://news.donga.com/3/all/20160930/80573475/1>

조선일보 (2016, 10, 01). <의혹 불거진 미르·K스포츠 해산...새 통합재단 만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1/2016100100183.html?rsMobile=false](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1/2016100100183.html?rsMobile=false)

중앙일보 (2016, 10, 01) <[사설] 의혹 해소 안 된 채 해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

<http://news.joins.com/article/20666826>

한겨레 (2016, 10, 01). <“미르·K 문건 없애라” “재단 해체” 잇단 증거인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3617.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63617.html)

한겨레 (2016, 10, 01). <[사설] 청와대 의혹을 전경련이 나서 증거인멸하는 꼴>.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3609.html>

최순실 딸의 소위 ‘금수저론’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정서를 더욱 자극하였다.

- K스포츠재단 결국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用이었나 (조선일보, 2016. 10. 19. 사설)
- K스포츠재단은 결국 ‘최순실 모녀 승마재단’이었나 (경향신문, 2016. 10. 19. 사설)
- 돈도 실력, 너희 부모 원망하라’는 금수저론 (경향신문, 2016. 10. 20. 사설)
- 사리사욕 채운 최순실씨, 검찰 수사대상이다 (한겨레, 2016. 10. 19. 사설)

이화여대 입학 특혜 논란과 맞물려 최순실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언론의 담론도 많은 변화를 보인다. 최초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되던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논란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담론이 형성되어 간다. 이 사건의 본질 규정도 <최순실 게이트 아닌 박근혜 게이트 아닌가>(경향신문, 2016. 10. 22. 사설), <‘최순실 비리’는 박 대통령의 공동 책임>(한겨레, 2016. 10. 20. 사설), <미르·케이재단 설립 ‘몸통’ 사실상 시인한 대통령>(한겨레, 2016. 10. 21. 사설) 등 ‘박근혜 게이트’, ‘몸통’, ‘대통령의 공동 책임론’ 등으로 진화되어 간다. 여기에 ‘전경련 해체’와 ‘철저한 수사 촉구’, ‘대통령 책임’ 등을 실천적 담론으로 접합되어 가면서 정국 최대 이슈로 발전된다.

이러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비상시기에 비방과 확인 안 된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뒤흔들고 혼란이 가중 된다”(조선일보, 2016. 09. 23. 1면), “재단에 모금 지원은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자발적 모금”(2016. 10. 20.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으로 해명하며 언론에서 제기한 거의 모든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위기모면을 위한 강력한 대항담론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언론으로부터도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의문을 제기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급조해 설립한 목적의 모호함, 설립과정에서 전경련이 두 재단에 800억원 가까운 돈을 모금해 지원한 배경, 청와대의 적극적 지원, 두 재단이 최순실의 사적 용도로 활용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자발적 모금’ 해명은 보수언론에서조차 호의적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의혹 해명에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 하겠나”라며 대통령의 해명발언을 정면 비판했다<sup>141)</sup>.

141) 조선일보 (2016, 10, 21). <朴대통령 ‘최순실 의혹 해명’ 국민이 납득하겠나>.

## 2)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

자발적 모금 = 인신공격성 폭로, 비방 + 대기업 순수의지 + 문화 융성 - 최순실 친분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설파한 내용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항적 담론 성격이다. 이 담론은 ‘인신공격성 폭로 및 비방’, ‘대기업 순수 의지’, ‘문화 융성’ 등을 접합시키고, ‘최순실 친분’은 탈접합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즉, 언론에서 제기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들을 확인이 안 된 인신공격성 폭로이자 비방으로 규정하며, 대기업들의 거액 모금은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자발적 참여의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담론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접합시키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첫 해명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한겨레> 단독보도와 <경향신문> 등의 관련 보도가 나온 후인 9월 22일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 및 경주 지진 사태 등을 거론하며,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조선일보, 2016. 09. 23)<sup>142)</sup>.

박 대통령의 두 번째 해명은 한 달 후인 10월20일 있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해명했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모두 문화융성을 위한다는 기업들의 순수한 의지 및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었음에도 도를 넘어선 인신공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숙고해서 문화와 어려운 체육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0/201610200362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0/2016102003622.html?)  
142) 조선일보 (2016, 09, 23). <“비상 시기에 비방과 폭로…사회 뒤흔들고 혼란 가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3/2016092300303.html?related\\_al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3/2016092300303.html?related_all)

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 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주기를 바란다.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 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sup>143)</sup>

이러한 해명에 대해 보수언론에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9분에 걸쳐 미르·K스포츠 재단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최순실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조선일보, 2016. 10. 21)<sup>144)</sup>. 다음날,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아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조선일보, 2016. 1. 22). 이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최순실 ‘개인 일탈’로 선을 긋는 한편, 최순실 관련 의혹 제기가 대통령에게 불뚱이 튼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담론 구성에서 ‘최순실’의 탈접합은 태블릿PC에서 드러난 연설문 작성 등 국정개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두 재단 설립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대통령 탄핵사유에 포함되었다. 현재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안○○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를 설립하였고,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위를 남용한 것으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143) <조선일보> 아래 보도 기사에서 대통령 발언 부분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임.  
조선일보 (2016, 10, 21). <“무작정 논란 덮자는 대통령…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027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0270.html?)

144) 조선일보 (2016, 10, 21). <9분간 ‘두 재단의 활동’ 자세히 설명… 최순실 이름은 언급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015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1/2016102100156.html)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대기업 모금지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보수언론들은 이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는 ‘피해자’ 담론 및 ‘경제위기’ 담론 등을 연결하여 접합시키고 ‘뇌물 공여’ 부분은 탈접합 시키는 형태로 대기업을 옹호하는 프레임의 담론을 부상시켰다. 이는 ‘정윤희 문건’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측근비리’ 등과 같은 정치사안에서 보인 담론전략의 양태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경제 사안에 있어서는 정치사안과는 다른 또 다른 명분과 논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4절 탄핵사건 담론 경쟁 및 정파성

본 연구의 <연구문제 4>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3개 층위 중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 사회문화적 실천의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은 헤게모니와 담론 간의 관계, 그리고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와 그 이데올로기를 일상화시킨 담론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방법론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신문사별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회문화적 실천 흐름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현실 인식

비선실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수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담은 태블릿PC 내용이 처음 공개된 날(2016. 10. 24)부터,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될 때(2016. 12. 09)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3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했다. 제1차 담화는 10월 25일, 제2차 담화는 11월 4일, 제3차 담화는 11월 29일에 있었다.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 소명 입장을 담은 이 세 번의 대통령 담화는 탄핵정국에서 민심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하였다. 담화가 발표될 때마다 정국은 크게 요동쳤고,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 저항운동은 전국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의 담화와 민심을 연결하는 중간점에 언론이 있었다는 점이다. 언론의 프레임 및 담론 구성은 언론수용자의 인식 및 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즉, 담화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해 보도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사별 담론흐름을 탐색하는 것은 담론의 사회문화적 실천과정을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1) 제1차 대국민 담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각 시점별 대통령 담화 내용에 따른 언론의 담론 구성 특징을 살펴보면, 세 번의 담화 중 제1차 담화가 상황을 급속도로 악화시킨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그녀가 국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 대선 때 최순실이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역할이 있었으나, 취임 후에는 일정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을 뿐 보좌체계가 꾸려진 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 10. 2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담화문 中 )

그러나 최순실에 대한 ‘선 긋기’를 한 대통령의 이 소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큰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최순실로부터 의견을 듣는 일이 없었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등을 수시로 전달받으며 수정하였고,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정권의 대통령이 보수언론으로부터도 옹호 내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통령이 현실인식을 제대

로 못하고 임기응변식 해명으로 넘어가려다 거짓말이 탄로 난 것에 대해 보수언론, 진보언론 할 것 없이 모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우선 최순실 국정개입 실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5개 신문 모두 공통적으로 ‘국정문란’ 내지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대통령 책임’ 담론을 폈다. <중앙일보>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는 국기 문란으로, 실정법 위반이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2016. 10. 26. 사설)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말씀자료 및 국가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비선 실세가 주물럭거렸다는 것은 국기 문란보다 더한 헌정 문란 사태”(2016. 10. 26. 사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라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2016. 10. 26. 사설)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봉건시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2016. 10. 26. 사설)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탄핵론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국정문란 사건”(2016. 10. 26. 사설)이라며 ‘탄핵’이란 단어를 등장시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의 사과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언론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거짓 해명’ 때문이다. 첫 담화에서 언급한 해명내용이 오히려 화를 더 키우고 국민적 분노를 확산시키는 기제가 된 것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해명은 일방적이고 부실한 데다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난마처럼 얽힌 국정이 수습되기는 커녕 오히려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2016. 10. 26. 사설)<sup>145</sup>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 정도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95초의 사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2016. 10. 26. 사설)<sup>146</sup>라고 힐난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최씨 국정농단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마라’고 하더니 이날 자신의 국기문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하기도 했다”(2016. 10. 26. 사설)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sup>147</sup>.

145) 중앙일보 (2016, 10, 26). <[사설] 박 대통령의 최순실 국기문란 해명, 납득 안 된다>. <http://news.joins.com/article/20778915>

146) 동아일보 (2016, 10, 26). <[사설]박근혜 정부 아닌 ‘최순실 政府’였나… 국민은 참담하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61025/81003913/1>

진보신문에서는 거짓해명을 한 대통령의 도덕적 책임과 함께, 대통령 인식에 근원적 문제가 있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다 거짓으로 판명됐다. 눈시울을 붉혀가며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한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스럽다. 진실을 밝혀도 민심을 돌리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경향신문, 2016. 10. 26. 사설)<sup>148)</sup>

“박 대통령의 의식 속에는 공과 사의 구분 자체가 애당초 없었다. 국가 중요 기밀관리의 중요성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한겨레, 2016. 10. 26. 사설)<sup>149)</sup>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대통령의 첫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는 ‘대통령 현실인식’ 및 ‘거짓 해명’ 담론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1차 담론에 대한 사회문화적 실천 담론의 방향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중앙일보>는 현재 나라가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실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할 것, 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를 요구했다(2016. 10. 26. 사설). <동아일보>도 현재의 상황을 ‘안보·경제 위기에 국기마저 무너져 내린 사실상의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대통령에 대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수용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 청와대 비서관의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박 대통령에게 거국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길 것을 촉구했다<sup>150)</sup>.

147) 조선일보 (2016, 10, 26). <[사설] 부끄럽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390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3902.html)

148) 경향신문 (2016, 10, 26). <[사설]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149) 한겨레 (2016, 10, 26). <[사설]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7271.html>

150)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박 대

이처럼 보수언론의 입장을 정리하면, 부끄러운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고, 대통령이 1차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하나, 현재 경제 및 안보위기 상황인 만큼 대통령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들을 수용하도록 하고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원 사퇴시키는 정도로 매듭짓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 자격 없음’ 담론을 전면에 부상시키며 대통령의 ‘무능’과 ‘민심 회복불능’을 강조해 보수언론의 담론과는 대조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라며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다. 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문서 유출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며 별일 아닌 듯 말했다. 비선조직이 일상적으로 활동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죄씨 행위가 국정농단이나고 반문한 관계자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 사령탑의 현실인식이 이런 수준이다. 이제 더 이상 박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2016. 10. 26)

<경향신문>은 청와대 우○○ 수석 경질, 해외도피 중인 최순실 귀국 설득, 국정조사나 특검 등 진상규명, 그리고 대통령 자신부터 먼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sup>151)</sup>. <한겨레>는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및 ‘거짓해명’ 등으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고,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 중략- 그런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을 상대로 국가 안보니 경제 활성화니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은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

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조선일보, 2016. 10. 26. 사설)

151) 경향신문 (2016, 10, 26). <[사설]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겨레, 2016. 10. 26. 사설)

<한겨레>는 이어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국민 탄핵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서 특검 수사를 수용하는 것만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압박을 이어갔다<sup>152)</sup>.

결국 대통령의 1차 담화의 ‘거짓 해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진보언론은 물론 보수언론으로부터도 강력히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담론실천 방향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특검수사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보수언론에서는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들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 자격상실’, ‘탄핵대통령’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1차 담화 시기에서는 보수 언론의 ‘경제·안보 위기’ 담론과 진보언론의 ‘국정운영 불가’ 담론의 경쟁구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2) 제2차, 제3차 대국민 담화

박 대통령의 제2차 대국민 담화는 1차 담화의 연장선상이다.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은폐 내지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언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는데, 2016년 11월 4일 발표된 2차 담화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략-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152) 한겨레 (2016, 10, 28). <[사설] 박 대통령, ‘피해자 코스프레’로 위기 모면 못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7674.html>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와 시민사회, 종교계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중략- 박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국민 탄핵 대통령’이 됐다. -중략- 대통령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청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 이것만이 박 대통령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중략-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 11. 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사과 담화문 中)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내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의 본질은 ‘최순실 개인 일탈’로 정리되면서,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되었다. 제2차 담화를 기점으로 해 진보언론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두번째 사과를 했으나 사태의 본질을 ‘개인 일탈’로 호도했고, 권력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씨의 전방위적 국정 개입과 농단이다. 최순실씨가 왜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건지, 최씨가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들며 술한 정책 결정·인사에 개입했다는데 그 배경과 진상은 뭔지가 핵심이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중략- 대통령이 솔직함이 없이 변명과 꼼수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한겨레, 2016. 11. 05. 사설)<sup>153)</sup>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후 국내 언론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2016년 11월 5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통단 사설에서는 박 대통령의 통치 불능상황, 권력행사의 정당성 상실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의 사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하야 촉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sup>154)</sup>.

153) 한겨레 (2016, 11, 05). <[사설] 박 대통령, 이 정도 사과로 민심 되돌릴 수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8849.html>

154) <경향신문>의 첫 하야 촉구 사설이 게재된 후, <한겨레>는 11월 6일자 ‘민심은 대통령의 사퇴 그 이상을 원한다’ 사설을 내보냈고, 이어 11월 13일자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는 사설을 통하여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위험한 통치는 사실 취임 이후 일관된 것이었다. -중략- 그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미끼를 던져 시민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모욕적인 수법을 구사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까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을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중략- 지금 주권자인 시민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재충전하고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통치의 원천이 고갈되었고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 -중략- 박 대통령은 이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즉시 사임을 선언해야 한다. (2016. 11. 05. 사설)<sup>155)</sup>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을 맡기고 물러나 있으라는 ‘2선 후퇴론’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선 후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대통령 권력’을 넘긴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초유의 헌법 위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위와 도덕성,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은 박 대통령에게 더는 국정을 맡길 수 없어 책임총리나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sup>156)</sup>. <중앙일보>는 2차 담화가 검찰 수사를 의식한 방어적 내용으로 가득 차고, 권력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아직도 권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선 후퇴’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sup>157)</sup>.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이날 담화 내용은 미흡했으나 영수회담까지 거부하는 야당의 반응은 지나치다는 입장의 사설을 내보냈다. 국정 단절을 막기 위해 진상 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 기능은 하루속히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심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능을 최소한이나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58)</sup>. 이는 다른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2선 후퇴’와도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결국 대통령의 2차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는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155) 경향신문 (2016, 11, 05). <[사설]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

156) 동아일보 (2016, 11, 05). <[사설]국정주도 의지 내비친 박 대통령 사과, 민심 역행이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104/81177926/1>

157) 중앙일보 (2016, 11, 05). <[사설] 울먹었지만 권력 미련 못 버린 대통령 담화>.

<http://news.joins.com/article/20825205>

158) 조선일보 (2016, 11, 05). <[사설] 박 대통령 담화 미흡했고 야당 반응은 지나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261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2611.html)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하야’ 담론이, 보수언론 중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2선 후퇴’ 담론, <조선일보>는 대통령 권위를 최소한이나마 인정하고 다른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유보적 입장의 담론을 제시하였다<sup>159)</sup>.

11월 29일 발표된 박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sup>160)</sup>. 결국 1차 ‘사과’, 2차 ‘검찰수사 및 특검 수용’, 3차 ‘임기 단축 포함한 조기 퇴진’ 등 단계별 내용 자체만을 보면 파격적 수위로 볼 수도 있지만, 각 담화 내용의 진실성 문제와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 문제가 드러나면서 3번의 담화 모두 국민 설득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3차 담화를 전후한 시점에서는 ‘탄핵’ 및 ‘자진 퇴진’ 등의 국정수습 방안이 미디어 담론의 핵심의제로 부상한다.

## 2. 국정수습 담론전략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및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관한 내용이 속속 드러나 국민적 분노가 크게 확산될 즈음, 언론에서도 혼란상황 및 국가위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정수습 방안이 제시된다. 소위 ‘2선 후퇴론’, ‘즉각 퇴진론(탄핵추진)’, ‘질서 있는 퇴진론(4월 퇴진론)’<sup>161)</sup> 등이 그것으로, 그 방안을 둘러싼

159) 보수 언론 중 <동아일보>는 2차 담화 이후부터 기존 ‘2선 퇴진론’에서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는 프레임의 담론 구성으로 변화하였다.

· [사설]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2016. 11. 14)

· [사설]국회에 임기단축 맡긴 박,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2016. 11. 30)

160)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2016. 11. 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사과 담화문 中)

161) ‘질서 있는 퇴진론’은 발화자에 따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나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자진사퇴 입장을 우선 밝히고 기간을 정한 후 사태를 수습하고 물러나는 수순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정치권 내 탄핵 찬성 측에서는 ‘탄핵이 곧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주장도 크게 분출되었다.

담론경쟁은 대통령의 1차 담화가 발표(2016. 10. 25)된 직후 시작되어,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2016. 12. 09)되기 직전까지 한 달여 간 계속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사의 국정수습 담론은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크게 분출되었다. 이 시기 진보언론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고, 보수 언론에서는 ‘2선 후퇴’ 담론이 넓게 형성되는 특징이 보였다. 또한 시간적 경과 속에서 진보언론은 ‘퇴진’ 담론이 탄핵 당위성 논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견고해지는 양태를 보인 반면, 보수 언론은 신문사에 따라 담론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각 신문사의 논조도 일관성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입장 번복과 같은 담론변화가 자주 나타났다.

국정수습 담론의 흐름을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우선 진보 언론에서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모두 ‘대통령 즉각 퇴진’ 및 ‘탄핵’을 촉구하는 담론을 선제적으로 생성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확장하는 담론전략이 두드러졌다.

<경향신문>은 국내 언론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신문으로 기록되었다. 대통령의 1차 담화를 지켜본 뒤 <탄핵론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문란>(2016. 10. 26) 사설을 통해 ‘탄핵론’을 처음으로 꺼내든 <경향신문>은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2016. 10. 26),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2016. 10.27), <대통령의 책임이 본질이다>(2016. 11. 01) 등 국민적 신임을 저버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담론을 구성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2차 담화가 발표된 직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2016. 11. 05)는 제목의 통단 사설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들의 지지가 철회됐고, 통치의 원천이 고갈되었고,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대통령은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즉시 사임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이것이 국내 언론에서 신문사 입장으로 발표된 첫 대통령 퇴진 요구이다.

<한겨레>는 1차 담화 직후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2016. 10. 26)와 <박 대통령, ‘피해자 코스프레’로 위기 모면 못 한다>(2016. 10. 28) 등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의 자격문제와 현실인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차 담화 때에는 <박 대통령, 이 정도 사과로 민심 되돌릴 수 없다>(2016. 11.

05)에 이어 <민심은 ‘대통령의 사퇴 그 이상’을 원한다>(2016. 11. 07)을 통해 촛불광장의 민심은 대통령의 퇴진과 사회제도 전반의 개혁을 열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11월 14일자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는 사실을 통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회에는 대통령 퇴임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sup>162)</sup>. 이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는 <‘주범 박근혜’, 퇴진·탄핵 불가피하다>(2016. 11. 21),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2016. 11. 25) 등의 사실을 통해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이어갔다.

이에 반해 보수 언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논조변경을 통한 담론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와는 논조를 달리했다. <동아일보>는 1차 담화 때에는 <박근혜 정부 아닌 ‘최순실 政府’였다… 국민은 참담하다>(2016. 10. 26. 사실)를 통해 청와대 비서진의 총사퇴 및 특검을 요구했다. 이어 2차 담화가 발표된 후에는 <국정주도 의지 내비친 박 대통령 사과, 민심 역행이다>(2016. 11. 05) 사실을 통해 ‘2선 후퇴’를 한 방안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11월 14일자 사실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담론을 등장시켰다<sup>163)</sup>. <동아일보>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일개 사인(私人)에게 건네 사유화하도록 한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치권이 민심에 편승해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헌법에 따른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 때부터 탄핵 당위성을 강조하는 담론전략이 두드러졌다.

· 野, 영수회담 하되 탄핵 준비도 병행하라 (동아일보, 2016. 11. 18. 사실)

162) 한겨레 (2016, 11, 14).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0090.html>

“이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다. 그는 여러 차례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걸어쳤다. 끝까지 권력에 집착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진행되는 걸 막으려 했다. 이런 행동이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기대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태워버렸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마지막 예의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당장 박 대통령 퇴임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63) 동아일보 (2016, 11, 14). <[사실]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http://news.donga.com/Main/3/040109/20161114/81312433/1>

“정치권이 민심에 편승해, 아니 앞장서 하야를 외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치의 역할은 민심의 에너지를 헌정질서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다. -중략-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절차에 돌입하도록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이란 일개 사인(私人)에게 건네 사유화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의 양도’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다.”

-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朴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동아일보, 2016. 11. 21. 사설)
-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동아일보, 2016. 11. 22. 사설)
- 탄핵소추 앞둔 박 대통령, 국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 (동아일보, 2016. 11. 28. 사설)

<동아일보>와 달리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국정수습 담론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질서있는 퇴진론’으로 귀결되었다. <중앙일보>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통령 현실인식을 시종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의 2차 담화가 발표될 즈음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의 발언과 연계시키며 ‘2선 후퇴론’을 등장시켰다.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2016. 10. 28), <박 대통령, 성난 민심이 무섭지도 않은가>(2016. 10. 29), <대통령, 민심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가>(2016. 11. 03), <박 대통령, 꿈수로는 돌파할 수 없다>(2016. 11. 04), <울먹였지만 권력 미련 못 버린 대통령 담화>(2016. 11. 05) 등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퇴진’이나 ‘탄핵’ 보다는 ‘2선 후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력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아직도 권력에 미련이 남은 걸까. 박 대통령이 만사 제쳐놓고 국정 운영의 2선으로 후퇴해야 나라를 구출할 희미한 실마리라도 잡힐 것이다. (중앙일보, 2016. 11. 05. 사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시점을 전후해 ‘질서 있는 퇴진론’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중앙일보>가 언급한 질서 있는 퇴진론의 내용은 당시 국가 원로들이 제안했던 내용인 ‘대통령의 하야 선언→ 국회, 대통령 직무 대행할 책임총리 인선→ 각 정당 조기 대선 준비 돌입→ 2017년 4월 대통령 퇴진’ 등의 수순이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론’의 로드맵을 선택할 경우 국회는 탄핵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 공모자인 박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안위와 법적 방어를 위해 대통령직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럴수록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를 부끄럽게 할 뿐이다. 취임 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 박 대통령의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중략- 나라의 원로들이 권유한 대로 시한부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다. -중략- 박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 국회는 탄핵을

중단해 줘야 한다. (중앙일보, 2016. 11. 29. 사설)<sup>164)</sup>

<조선일보>의 국정수습 담론의 초반 기조는 거국 총리 인선을 통한 ‘2선 후퇴론’이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1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고,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했다고 비판하면서 거국 총리 임명을 통한 국정수습을 제안했다(2016. 10. 26)<sup>165)</sup>. 남은 임기 1년의 경제와 내정(內政)을 거국 총리에게 맡기라는 내용이다. 야권의 하야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를 둘로 쪼개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위험하고 선부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sup>166)</sup>. 대통령의 2차 담화가 발표된 후에는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미흡했으나 영수회담까지 거부하는 야당의 반응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sup>167)</sup>. 또한 “민심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능을 최소한이나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선 후퇴론을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은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 단절을 막기 위한 최소한도의 권한을 주자는 논리이다. 이어진 <朴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2016. 11. 09)는 사설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2선 후퇴론’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이 더욱 들끓고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자 11월 15일자 사설에서는 종전 거국 총리 제안을 철회하고, 헌법 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을 제안했다<sup>168)</sup>.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을 궐위 또는 사고 상황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164) 중앙일보 (2016, 11, 29). <[사설]박 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은 ‘시한부 하야’다>.  
<http://news.joins.com/article/20938336>

165) 조선일보 (2016, 10, 26). <[사설] 부끄럽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390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3902.html)

166) 조선일보 (2016, 11, 03). <[사설]야권의 대통령 下野 주장 위험하고 선부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2/20161102037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2/2016110203786.html)

167) 조선일보 (2016, 11, 05). <[사설] 박 대통령 담화 미흡했고 야당 반응은 지나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261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4/2016110402611.html)

168) 조선일보 (2016, 11, 15). <朴대통령,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하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4/201611140301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4/2016111403012.html)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사태 이후 마지못해 조금씩 물러서다가 결국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성난 시민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2선 후퇴'를 선언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중략- 도덕성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유·무죄 논란에까지 휘말린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2016. 11. 15. 사설)

이 제안을 한 일주일 후에는 <부끄러운 범죄 혐의에다 반발까지,朴대통령 理性 잃었다>(2016. 11. 21)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2016. 11. 22), <결국朴대통령 탄핵 절차로,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2016. 11. 21) 등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논조의 사설이 이어졌다.

이처럼 국정수습 담론은 진보언론에서는 시종 '대통령 퇴진론 / 탄핵론'이 유지되어 온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2선 후퇴론'과 '질서 있는 퇴진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논리적 변화가 이어져 왔고, 2차 담화 발표 후 촛불시위가 크게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즈음에는 대부분 언론이 '탄핵 담론'으로 이동하는 양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발표된 후에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논조변화가 나타났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그리고 보수언론 중 <동아일보>는 탄핵 당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담론전략이 이어졌다. 이들 신문들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시점까지 탄핵안이 가결 처리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 잔피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 (경향신문, 2016. 11. 30)
- 퇴진마저 국회에 떠넘긴 '대통령의 꼼수' (경향신문, 2016. 11. 30)
- 국회는 한 점 흔들림 없이 탄핵에 매진하라 (경향신문, 2016. 12. 01)
- 박 대통령, '간교한 술책'으로 퇴진 모면할 수 없다 (한겨레, 2016. 11. 30)
- 국민 요구는 오직 '조속한 대통령 탄핵'이다 (한겨레, 2016. 12. 01)
- 꼴불견 대통령, 시급히 '직무정지'를 (한겨레, 2016. 12. 02)

- 국회에 임기단축 말긴 朴,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동아일보, 2016. 11. 30)
- 탄핵 앞세워 ‘대통령 임기 협상’ 거부하는 野 오만하다 (동아일보, 2016. 12. 01)
- ‘탄핵-4월 퇴진’ 우왕좌왕 국회, 촛불민심 두렵지 않나 (동아일보, 2016. 12. 02)

반면 <중앙일보>는 탄핵 보다는 대통령의 자진사퇴 선언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가야함을 강조하는 담론을 펼쳤다. 대통령의 3차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의 길을 열었다고 해석하며 여야 정치권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 담론은 국회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시점까지 이어졌다.

- 조기 퇴진 담화 ‘질서 있는 퇴진’ 마지막 기회다 (중앙일보, 2016. 11. 30)
-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요구하라 (중앙일보, 2016. 12. 01)
- 야, 즉각 협상 ... 박 대통령 4월 하야 선언하길 (중앙일보, 2016. 12. 02)
- 박 대통령, 4월 하야와 관한 포기 선언만이 살길 (중앙일보, 2016. 12. 03)
- 야당, 박 대통령 퇴진 일정 밝히면 협상 응하라 (중앙일보, 2016. 12. 05)
- 탄핵 열차 떠나지만 ‘질서 있는 퇴임’ 열어줘야 (중앙일보, 2016. 12. 06)
- 오늘 당장 ‘4월 퇴임·2선 후퇴’를 욕성으로 밝히라 (중앙일보, 2016. 12. 0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제안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온 <조선일보>는 3차 담화의 임기 단축제안을 사실상의 하야 선언으로 보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질서있는 퇴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임기 단축을 결정하고 국회에 퇴진 일정을 정해 달라고 제안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중략- 실제 탄핵이 이뤄진다 해도 시기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내심 내년 4월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어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결단을 내렸다. 이 용단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 2016. 11. 30. 사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순수가 진행되자 <탄핵 표결해야 한다면 문제 시작 아닌 끝이 돼야>(2016. 12. 05), <국회 탄핵案 “대통령,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2016. 12. 05), <대통령 거취 표명 임박, 마지못해 물러서다 벼랑

끝에>(2016. 12. 06)를 통해 탄핵절차를 기정사실화 했다.

표 15. 신문사별 국정수습 담론의 변화

매체	날짜	주요 담론(사설)
경향신문	2016. 10. 26	•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2016. 10. 27	• 사과하면서도 거짓말한 박 대통령,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2016. 10. 28	• 나라 망치고 아직도 정신 못차린 청와대·최순실 패거리
	2016. 11. 05	•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2016. 11. 07	• 박 대통령, 시민의 퇴진 요구에 대답해야 한다
	2016. 11. 30	• 또 변명에 잔피 부린 박 대통령, 탄핵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
	2016. 11. 30	• 퇴진마저 국회에 떠넘긴 ‘대통령의 꼼수’
	2016. 12. 01	• 국회는 한 점 흔들림 없이 탄핵에 매진하라
한겨레	2016. 10. 26	•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2016. 11. 05	• 박 대통령, 이 정도 사과로 민심 되돌릴 수 없다
	2016. 11. 07	• 민심은 ‘대통령의 사퇴 그 이상’을 원한다
	2016. 11. 14	•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6. 11. 19	• 촛불로 ‘대통령의 망상’을 불태우자
	2016. 11. 21	• ‘주범 박근혜’, 퇴진·탄핵 불가피하다
	2016. 11. 25	• 국회의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이 필요하다
	2016. 11. 30	• 박 대통령, ‘간교한 술책’으로 퇴진 모면할 수 없다
	2016. 12. 01	• 국민 요구는 오직 ‘조속한 대통령 탄핵’이다
	2016. 12. 02	• 꼴볼견 대통령, 시급히 ‘직무정지’를
동아일보	2016. 10. 26	• 박근혜 정부 아닌 ‘최순실 政府’였나…국민은 참담하다
	2016. 11. 05	• 국정주도 의지 내비친 박 대통령 사과, 민심 역행이다
	2016. 11. 07	• 30만 촛불 민심…靑·친박은 대통령 탈당·2선 후퇴 밝혀야
	2016. 11. 14	• 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
	2016. 11. 18	• 野, 영수회담 하되 탄핵 준비도 병행하라
	2016. 11. 21	• 檢이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朴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2016. 11. 30	• 국회에 임기단축 말긴 朴, 탄핵이 ‘질서 있는 퇴진’이다
	2016. 12. 01	• 탄핵 앞세워 ‘대통령 임기 협상’ 거부하는 野 오만하다
	2016. 12. 02	• ‘탄핵-4월 퇴진’ 우왕좌왕 국회, 촛불민심 두렵지 않나
중앙일보	2016. 10. 28	•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
	2016. 11. 04	• 박 대통령, 꼼수로는 돌파할 수 없다
	2016. 11. 05	• 울먹였지만 권력 미련 못 버린 대통령 담화
	2016. 11. 07	• 박 대통령, 권력 미련 버리고 결단해야
	2016. 11. 08	• 대통령, ‘2선 후퇴’ 분명히 밝혀야만 살 수 있다

	2016. 11. 27	• ‘시민 혁명’ 앞에 선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결단하라
	2016. 11. 28	• 박 대통령의 마지막 애국은 ‘시한부 하야’다
	2016. 11. 30	•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요구하라
	2016. 11. 30	• 조기 퇴진 담화 ‘질서 있는 퇴진’ 마지막 기회다
	2016. 12. 01	•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하야’ 요구하라
	2016. 12. 02	• 야, 즉각 협상…박 대통령 4월 하야 선언하길
	2016. 12. 03	• 박 대통령, 4월 하야와 권한 포기 선언만이 살길
	2016. 12. 06	• 탄핵 열차 떠나지만 ‘질서 있는 퇴임’ 열어줘야
	2016. 12. 07	• 오늘 당장 ‘4월 퇴임·2선 후퇴’를 욕성으로 밝히라
조선일보	2016. 10. 26	• 부끄럽다
	2016. 11. 03	• 야권의 대통령 下野 주장 위험하고 선부르다
	2016. 11. 05	• 대통령 담화 미흡했고 야당 반응은 지나치다
	2016. 11. 09	•朴대통령 ‘다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게 낫다
	2016. 11. 15	•朴대통령, 헌법 71조 ‘대통령 권한대행’ 수용하길
	2016. 11. 20	•朴 대통령, 親朴의 ‘조기 퇴진 건의’ 조건 없이 수용하길
	2016. 11. 21	• 부끄러운 범죄 혐의에다 반발까지, 朴대통령 理性 잃었다
	2016. 11. 22	•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2016. 11. 30	•朴 대통령 임기 단축 제안, 실현돼야 용단이다
	2016. 12. 05	• 탄핵 표결 해야 한다면 문제 시작 아닌 끝이 돼야
	2016. 12. 05	• 국회 탄핵案 “대통령,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
	2016. 12. 06	• 대통령 거취 표명 임박, 마지막해 물러서다 벼랑 끝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수습 관련 담론전략에서 진보언론은 ‘탄핵 촉구’ 담론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탄핵 당위성의 논리를 더욱 확장해 온 반면, 보수 언론은 ‘2선 후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절차 불가피’ 등으로 담론전략이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표 15> 참조). 이는 진보언론의 탄핵 담론은 촛불민심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담론의 구조가 더욱 탄탄하게 강화된 반면, 보수 언론은 촛불민심과의 간극이 큰데다 본래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정체성에서 오는 내적충돌 내지 딜레마, 자기모순 등과 같은 형태의 혼란으로 인해 담론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풀이할 수 있다.

### 3. ‘세월호 7시간’ 의혹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에 명시되었던 쟁점 중 하나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할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관저에 머물러 있던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한 논란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는데, 관저에서 미용 및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세월호 7시간’ 논란에 관한 담론 구성 내지 논조는 이념적 성향 보다는 개별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 논쟁 흐름을 보면 크게 ‘7시간 행적 의혹’ 담론과 ‘무분별 의혹제기’ 담론의 경쟁구도를 이룬다. 전자의 담론 그룹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대표적이고, <중앙일보>는 다소 소극적 보도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논조는 전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자의 담론은 <조선일보>에서 주로 생성되었다.

우선 ‘7시간 행적의혹’ 담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의료시술’과 ‘머리 손질’(올림머리)을 비롯한 미용으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회문화적 실천 방향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한겨레>는 국정농단 사건 의혹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비선실세 최순실 등이 드러났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대통령이 관련성을 제기하며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수면 마취가 수반되는 노화방지 시술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이 대면보고도 받지 않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던 ‘7시간’ 동안 마취가 수반되는 노화방지 시술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 때문이다. 사실이면 14차례의 서면보고에도 대통령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오후 늦게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횡 횡설수설한 이유 등 풀리지 않던 퍼즐이 맞춰진다. 상상하기도 싫은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다. (한겨레, 2016. 11. 11. 사설)<sup>169)</sup>

이러한 의혹제기에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형 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으며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한겨레, 2016. 11. 12), <한겨레>는 참사당일 7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밝힐 것을 거듭 요구하며 ‘7시간 미스터리’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다.

청와대의 발표는 의혹을 풀기는커녕 궁금증을 더욱 키웠을 뿐이다. 청와대는 “성형수술과 곳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7시간의 미스터리는 결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한겨레, 2016. 11. 12. 사설)<sup>170)</sup>

<한겨레>는 보건복지부가 박 대통령의 자문의가 최순실 자매 명의로 처방받은 영양제 등을 청와대에 갖고 들어가 대통령에게 주사해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영양제 주사라면 비선에 맡길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또 다른 차원의 의혹을 제기했다<sup>171)</sup>.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약물주사를 맞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sup>172)</sup>.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 청와대가 현재에 제출한 ‘7시간 행적’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돼 제출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세월호 때 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조차 몰랐다니… (한겨레, 2016. 12. 15. 사설)
- 현재에 ‘퇴짜’ 맞은 거짓투성이 ‘7시간 행적’ 설명 (한겨레, 2017. 01. 11. 사설)

<경향신문>도 세월호 참사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7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

169) 한겨레 (2016, 11, 11). <[사설]‘대통령과 성형외과’ 화제 되는 이유 뭐겠는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9746.html>

170) <한겨레> (2016, 11, 12). <[사설] ‘7시간 미스터리’ 의혹만 더 키운 청와대 해명>.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69922.html>

171) 한겨레 (2016, 11, 17). <영양제 주사라면 ‘비선’에 맡길 필요 있었을까>.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0586.html>

172) 한겨레 (2016, 11, 28).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 약물주사 맞았는지 밝혀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2174.html>

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는 의혹제기 담론을 집중적으로 구사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라진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당일 관저에서 상황보고를 받으며 근무를 했다고 밝혔으나 <경향신문>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를 해야 할 정확한 상황적 이유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른 채 서면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전히 장막에 덮인 의혹이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30분 전화로 구조 지시를 했고,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사이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를 놓고 굿, 성형수술 등 억측이 제기돼왔다. -중략- 행정부 수반이자, 시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참사가 난 평일 근무시간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것은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경향신문, 2016. 11. 14. 사설)<sup>173)</sup>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며 해명을 하던 즈음, 참사당일 박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90분 이상 머리 손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세월호 현장은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하면서 상당 시간을 허비하고 7시간 후에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컸다. 언론은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당일 행적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한 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느라 90분 이상 걸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중략- 설사 20분이라 해도 300명 넘는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할 여유가 있느냐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중략-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따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동아일보, 2016. 12. 08. 사설)<sup>174)</sup>

173) 경향신문 (2016, 12, 15). <세월호 7시간 밝혀야 할 이유 더 분명해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203300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42033005&code=990101)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간에 '90분'간 머리 손질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꽃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때 대통령이 '탄전'을 피웠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과 화장을 맡긴 바로 그 순간은 해경이 선체에 남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 작업에 나선 때이다. -중략- 박 대통령 당시 행태를 보면, 어린 생명보다 자신의 머리 모양을 더 중시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중을 가릴 줄 모르는, 이성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일이다. (경향신문, 2016. 12. 08. 사설)<sup>175)</sup>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315명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 손질을 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중략- 박 대통령이 직접 그 7시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는 게 도리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사생활'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더 큰 비난과 혼란만 자초할 뿐이다. 더 이상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불필요한 국력 소모는 막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중앙일보, 2016. 12. 08. 사설)

<동아일보>는 '머리손질' 논란 외에도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엄중 조사해야>(2016. 11. 14), <'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2016. 12. 02), <현재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근무도 답변도 불성실하다>(2017. 01. 11),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엄중 조사해야>(2016-11-14) 등의 보도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한 엄중 조사를 촉구하는 담론을 구사하였다. <중앙일보>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논란과 연계해 청와대 관저를 일반인들이 '보안 손님' 형태로 별 제재없이 드나들었던 사실이 밝혀진데 대해 허술한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했다<sup>176)</sup>.

174) 동아일보 (2016, 12, 08). <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

<http://news.donga.com/home/3/all/20161207/81727882/1>

175) 경향신문 (2016, 12, 08). <아이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은 머리 손질로 시간 보냈다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7204800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72048005&code=990101)

176) 중앙일보 (2016, 12, 15). <'보안 손님'과 '무분별 시술'로 붕괴된 청와대 시스템>.

<http://news.joins.com/article/21003470>

“사인들의 자유로운 관저출입을 방치한 경호실의 무책임과 문란함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다. 김○○·김○○ 의사는 의무동이 아닌 청와대 관저를 '보안 손님' 형태로 별 제재 없이 드나들었다고 증언했다. -중략- 일반인들이 대통령의 사적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방치하며 비선정치를 키우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처럼 ‘세월호 7시간’ 이슈가 정치권에서도 쟁점화되며 참사당일 대통령의 미용과 의료 비판적 논조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안에서도 대통령의 위법사항에 이 문제가 포함되었다.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맡은 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들이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의 내용을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무분별 의혹제기’ 담론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는 여객선 불법 증·개축과 화물 과적, 평형수 부족, 부실 고박(화물 고정), 운항 미숙 때문이었다.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을 때는 이미 짧은 구조 골든타임이 지나간 뒤였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각 바다 현장에 있었어도 달라질 것이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잘못해 승객들이 희생된 것처럼 하는 주장은 비난을 위한 공격일 뿐이다. -중략- 지금 상태로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 발상이다. (조선일보, 2016. 12. 08. 사설)<sup>177)</sup>

세월호 7시간 관련 국회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언론에서는 청와대 보안 시스템 문제나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위치 파악 못하고 있었던 문제를 집중 다뤘으나, <조선일보>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건 없다”면서 청문회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농단과 아무 관계없는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불러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하느냐”면서 국회를 질타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그간 ‘청와대 굿판’, ‘성형 수술’ 같은 소문들이 떠돌아다녔지만 증거가 아니라 단서도 없다. 그 와중에 대통령 머리 손질 시간이 20분이나 90분이나를 놓고 논쟁도 벌어졌다.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만큼 ‘세월호 7시간’ 문제는 특검 수사로 규명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과 아무 관계없는 이 문제로 의사·간호사들까지 불러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국회가 지금 이럴 때인지 의문을 지을 수 없다. (조선일보, 2016. 12. 15. 사설)<sup>178)</sup>

177) 조선일보 (2016, 12, 08). <‘세월호 7시간’ 탄핵 소추안 포함은 초법적 발상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7/201612070308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7/2016120703086.html)

178) 조선일보 (2016, 12, 15). <대통령 성형 의혹 따진 청문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sup>179)</sup>.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의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히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는 ‘세월호 7시간’ 논란에서 박 대통령이 다수의 생명이 위태로운 긴박한 상황에서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행위는 비록 파면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책 성실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명확히 짚은 것이다<sup>180)</sup>.

#### 4.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서 신문사의 이념적 정파성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재벌기업 수사’ 관련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 원 가까이 모금을 해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탄핵정국에서 재벌기업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또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딸 승마지원’ 등 대가성 자금지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청문회 및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의 담론 구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모금을 주도한 전경련에 대한 문제, 재벌기업 총수들의 청문회 및 수사, 삼성 이재용 부

179) 현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80) 이 보충의견과 관련해 현재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 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회장 구속 등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 1) 전경련 및 재벌기업 자금 모금 논란

우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금 받아 재단법인 미르 설립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 설립에 288억 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전경련 문제에 대해서는 5개 신문 모두 사회문화적 실천의 담론적 화두로 ‘전경련 해체’를 꺼내 들었다. 전경련의 자금 모금 배경에는 청와대의 개입,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sup>181)</sup>,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전경련 조직 자체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무용론’ 및 ‘전경련 해체’ 담론이 크게 형성되었다<sup>182)</sup>.

- 전경련 해산 결단할 때 됐다 (조선일보, 2016. 10. 06. 사설)
- 정경유착, 금권정치의 사령탑 전경련을 해체하라 (경향신문, 2016. 09. 27. 사설)
- 전경련 고쳐 쓸 게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6. 12. 29. 사설)
- ‘정경유착 망령’ 불러내는 전경련, 문 달아야 (한겨레, 2016. 09. 27. 사설)
- ‘해산 요구’ 쓰나미 자초한 전경련의 일탈 (한겨레, 2016. 10. 05. 사설)

<경향신문>은 전경련을 정권의 하수인이자 기업에 대해서는 상진 노릇을 하는 ‘괴물’로 비유하면서, 선택의 여지없이 조속히 해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sup>183)</sup>. <한겨레>는 정경유착을 부정부패를 낳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회악이자 ‘5·16 쿠데타의 산물’로 꼽으며 전경련의 존재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sup>184)</sup>. <조선일보>도 전경련 무용론이 제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대기업

181)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대기업 자금 출연 지원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점이 명시되었다(2017. 3. 10 선고, 2016헌나 1 결정).

182)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사 중 전경련 관련 뉴스는 48건인데 이중 79.2%인 38건이 ‘부정/비판/반대’ 논조의 기사로 나타났다. ‘중립적’ 내용의 보도는 10건(20.8%), ‘긍정적’ 보도는 단 1건도 없었다.

183) “고도성장기에 역할을 했던 전경련의 소임은 끝났다. 전경련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총대를 멘 사실이 드러났다.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나섰고 기업에 대해서는 상진 노릇을 하는 괴물로 변한 지 오래다. 전경련은 하루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경향신문, 2016. 12. 29)

184) “사실 전경련이 없어도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 재벌뿐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대한상회가 존재한다. 외국에서도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상의이다. 또

회원사들도 등을 돌린 전경련은 용도가 끝났다고 일갈하며 해체를 주장하였다<sup>185</sup>).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이 전경련의 해체 주장에 함께 동조하고 나선 것은 전경련 자체의 ‘무용론’ 내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지원 문제 등이 재벌기업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와 전경련이 주도한 것이고, 재벌기업은 한낱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담론적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어진 재벌기업 수사 관련해서는 보수언론에서는 ‘재벌기업=피해자’라는 담론적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sup>186</sup>). 자금지원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담론은 극명한 대립적 구도를 보였는데, 보수언론들은 ‘피해자’ 담론 및 ‘경제위기’ 담론을 통해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보도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석 달 전 대기업 총수 7명과 청와대에서 연쇄적으로 독대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보수언론에서는 정경유착 의혹과 함께 박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자금 출연을 압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출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했다면 안○○ 전 정책조정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 남용죄의 주범(主犯)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어떤 혜택이나 대가 제공을 암시했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 가능성이 커진다. -중략-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과 탄핵 요건 성립 여부까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조선일보, 2016. 11. 09. 사설)<sup>187</sup>)

노동계의 파트너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있다. 5·16 쿠데타의 산물인 전경련도 이제 경단련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됐다.” (한겨레, 2016. 09. 27)

185)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에서 촉발된 파문이 전경련의 존재 의미를 묻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략- 좌파 진영이나 정치권의 전경련 해체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재계 내부에서조차 “이런 전경련이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이 나오는 점이다. -중략- 전경련의 주인인 대기업 회원사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전경련은 용도가 끝난 것이다. 개발 시대의 소임을 다한 전경련은 이제 발전적 해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 2016. 10. 06)

186) 앞의 제4장 제2절의 ‘보도태도’ 분석에서도 보수언론의 대기업 수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관련 보도는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공정·옹호/지지’ 기사가 많았음이 확인되었다.

187) 조선일보 (2016, 11, 09). <[사설] 대통령 독대 재벌 총수들, 진상 밝혀 유착 고리 끊으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8/201611080346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8/2016110803467.html)

<동아일보>도 대통령과 재벌총수 7명의 독대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적폐를 끊어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sup>188)</sup>. <중앙일보>는 한발 더 나아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자금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청와대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범행에 대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 재벌기업 총수들은 돈을 뜯긴 ‘피해자’라는 프레임의 담론을 구사하였다.

이번 사태는 기업엔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권력에 더 이상 돈을 갈취당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모든 걸 털고 가야 한다. 특히 재단 설립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던 7대 기업은 고해성사를 하는 심정으로 당시의 상황을 검찰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대통령을 앞세운 무속인에게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수십억원씩 돈을 뜯겨서야 되겠는가. (중앙일보, 2016. 11. 09. 사설)<sup>189)</sup>

그러나 얼마 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의 청문회에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확정되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고해성사’를 촉구하던 보수언론은 이번에는 청문회장에 재벌총수를 출석시킨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과 함께, 재벌 총수들을 옹호하는 담론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이번 청문회에 총수가 소환된 9개 대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그런 기업 총수들이 죄인처럼 청문회장에 서 있는 TV 장면은 경쟁 기업들엔 호재가 될 것이다.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상처 입는 것은 해당 임직원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득 될 것이 없다. 연말 인사나 내년도 투자계획 같은 중요한 기업 활동이 마비되다시피한 상태다.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불가피했다 해도 청문회는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게이트는 지나가지만 경제는 영원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6. 11. 23. 사설)<sup>190)</sup>

188) 동아일보 (2016, 11, 04). <[사설] 재벌총수 7명 독대說...박 대통령은 ‘모금’에 개입했다>.

<http://news.donga.com/3/04/20161103/81161218/1>

189) 중앙일보 (2016, 11, 09). <[사설] 정치권력 갈취 없애려면 기업도 수사 협조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0843470>

190) 조선일보 (2016, 11, 23). <[사설] 주범들 놔두고 총수부터 TV 앞에 세우는 청문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03207.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2/2016112203207.html)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자금모금을 지원한 것도 청와대 지시에 의해 했고, 기업 역시 권력의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피해자인데, 죄인처럼 청문회장에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청문회가 TV를 통해 생중계 될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회사 업무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재벌총수를 한꺼번에 출석시키는 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지원 진실규명 요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재벌총수 옹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 언론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재벌총수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수언론의 ‘피해자’ 담론의 대립적 구도로 ‘재벌 개혁’ 담론을 부상시켰다. <경향신문>은 ‘최순실이 뭐라고 재벌들이 800억원을 모아줬는가’(2016. 09. 22), ‘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이다’(2016. 11. 22) 등의 보도를 통해 대기업 자금 지원을 정경유착의 적폐로 규정하면서, 기업들은 ‘강제 모금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기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댄 재벌 기업들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압박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은 ‘강제 모금의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에 협조한 뒤 반대급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해 특혜를 받은 ‘자발적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경향신문, 2016. 11. 14. 사설)<sup>191)</sup>

<한겨레>도 ‘재벌 총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은 당연하다’(2016. 11. 23) 등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 및 비선실세 자금지원에 연루된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 및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수언론의 재벌총수 옹호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재벌 총수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언론이 재벌 감싸기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기업은 피해자인데 검찰 조사, 국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가 이어져 골병이 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어이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특위 의원들에게 촉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언론이 몰타기를 하고 있다. 아무리 재벌이

191) 경향신문 (2016, 11, 14). <[사설] 이재용·정몽구 등 재벌총수 소환,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3210701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32107015&code=990101)

최대 광고주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서 편드는 건 도를 넘는 일이다. 언론이 재벌보다 더 재벌 총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겨레, 2016. 12. 06. 사설)<sup>192)</sup>

청문회가 열린 후 진보언론에서는 출석한 재벌총수들이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뻔뻔함을 보이고 변명과 ‘동문서답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을 하며 재벌 개혁 촉구하는 담론전략을 이어갔다<sup>193)</sup>. 반면 <조선일보>는 재벌총수들을 집단으로 불러 모아 청문회를 하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조를 가져나갔다<sup>194)</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및 청문회를 둘러싼 미디어 담론은 보수언론의 경우 ‘피해자’ 담론을 중심으로 해 ‘경제위기’ 담론 및 ‘청와대의 압박’ 담론을 생성했던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거시적 담론으로 ‘재벌 개혁’ 담론을, 미시적으로는 ‘자발적 공범’ 담론 등을 구사했다.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 2)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었는데, 대기업 수사의 초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지원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보고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보수언론에서는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진보언론에서는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담론을 펴며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보수언론의 담론 구성을 보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이재용=피해자’, ‘구속수사 부당’ 담론을 구사했다. 그의 뇌물사건은 대통령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지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192) 한겨레 (2016, 12, 06). <[사설] 재벌보다 더 재벌 총수 걱정해주는 언론>.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3361.html>

193) · 반성 없이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한 재벌총수들 (한겨레, 2016. 12. 07)

· 재벌총수들의 반성 없는 변명, 뻔뻔한 동문서답 모르쇠 (경향신문, 2016. 12. 07)

194) · 재벌 집단 청문회, 제도 안 바꾸면 또 하는 날 올 것 (조선일보, 2016. 12. 07)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이들 신문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시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점, 영장 재청구 시점 및 구속영장 발부시점 등 각각의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는 ‘사설’을 연이어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된 시점을 전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의 원칙은 ‘증거’가 되어야 하고, 억지로 읊아매서는 안 된다면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피해 막대’ 등의 텍스트 구성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을 옹호하거나 두둔했다<sup>195)</sup>.

- 이재용 뇌물 혐의 소환, 수사 원칙은 ‘증거’가 돼야 (조선일보, 2017. 01. 12. 사설)
- 이재용이라고 봐줘서도, 억지로 읊아매서도 안 돼 (조선일보, 2017. 01. 14. 사설)
-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조선일보, 2017. 01. 17. 사설)

<중앙일보>도 ‘국정 농단 수사, 이재용 영장 청구가 본류인가’(2017. 01. 16) 사설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특검이 본류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수사에 앞서, 지류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혹만 집중적 파헤쳐 오면서 본말이 전도되었다면서 특검을 비판했다. 법원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법원이 범치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하며 이재용 부회장 측을 옹호했다<sup>196)</sup>.

<동아일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지원을 두고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하여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이다<sup>197)</sup>.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월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함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검찰에 대한 비판

195)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삼성의 최고 책임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피해는 막대하다. 특검은 철저하게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를 해야 하고 이 부회장은 진솔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조선일보, 2017. 01. 12)

196) 중앙일보 (2017, 01, 20). <범치주의 지켜낸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 존중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1148501>

197) 동아일보 (2017, 01, 17). <[사설]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http://news.donga.com/List/ColumnSasul/3/040109/20170116/82418793/1>

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이 부회장을 뇌물을 준 범피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 ‘피해자’로 규정하며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무리한 수사’, ‘깜깜이 영장’, ‘오기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의 텍스트 구성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한 특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이재용 再소환, 정상 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 (조선일보, 2017. 02. 13. 사설)
- 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 (조선일보, 2017. 02. 15. 사설)
- 대통령 조사도 못하고 삼성에만 집착하는 특검 (동아일보, 2017. 02. 14. 사설)
- 이재용 영장 재심사…외압에 흔들림 없이 판단하라 (동아일보, 2017. 02. 16. 사설)
- 이재용 재소환, 무리한 ‘역기 수사’ 아닌가 (중앙일보, 2017. 02. 14. 사설)
- 특검의 무리수…이제 ‘깜깜이 영장’까지 치는가 (중앙일보, 2017. 02. 15. 사설)

이에 반해 진보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담론적 전략을 구사했다. <경향신문>은 <재벌 개혁 시급성 확인한 이재용 뇌물죄 소환>(2017. 01. 12), <구속 위기에 처한 글로벌 기업의 이재용>(2017. 01. 16), <이재용 구속이 의미하는 것>(2017. 02. 17) 등의 사설을 통하여 삼성이 지원한 자금은 뇌물죄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꼽으면서, 재벌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겨레>도 대통령에 자금지원이 ‘경영승계’ 목적으로 해석하며, 권력과 재벌 간 결탁으로 점철된 낡은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재벌 개혁론’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문제를 두고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이재용 구하기’를 위해 ‘경제 위기론’과 ‘특검 변질론’ 등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sup>198)</sup>.

- ‘승계 도움’과 ‘금전 지원’ 주고받은 대통령과 삼성 (한겨레, 2017. 01. 03. 사설)
- ‘뇌물공여’ 뚜렷해진 삼성, 처벌 피할 수 없다 (한겨레, 2017. 01. 10. 사설)

198) 한겨레 (2017, 01, 18). <‘이재용 구하기’ 위해 또 흘러간 노래 들고 있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9142.htm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문제를 두고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삼성뿐 아니라,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경제 위기론’과 ‘특검 변질론’ 등을 내세워 ‘이재용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 ‘피해자’라는 태도로는 삼성의 앞날도 어둡다 (한겨레, 2017. 01. 16. 사설)
- ‘이재용 구하기’ 위해 또 흘러간 노래 틀고 있나 (한겨레, 2017. 01. 18. 사설)
- ‘특검 탕’이 아니라 ‘삼성 탕’이다 (한겨레, 2017. 02. 16. 사설)
- ‘사상 첫 총수 구속’ 삼성이 직시해야 할 것들 (한겨레, 2017. 01. 18. 사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 또한 앞선 재벌 총수 수사 담론과 마찬가지로 보수언론은 ‘피해자’ 담론 및 ‘무리한 수사’ 담론을, 진보언론은 ‘뇌물 공여자’ 담론과 ‘재벌개혁’ 담론을 펴며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 5. 탄핵심판 선고와 대통령 구속

### 1) 승복 프레임과 현재 결정 입장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을 전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성난 촛불 민심, 그리고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소위 ‘태극기 집회’ 간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 70년 전 ‘左·右 따로 삼일절’이 지금 재연된다니 (조선일보, 2017. 03. 01. 사설)
- 탄핵 찬반 선동이 3·1절 정신과 무슨 관계있나 (중앙일보, 2017. 03. 01. 사설)
- 탄핵 앞둔 3·1절, 태극기 욱되지 않는 집회 만들자 (한겨레, 2017. 03. 01. 사설)
- 탄핵 찬반 극심한 대치…“3·1절이 구한말 같다” (중앙일보, 2017. 03. 02. 1면)
- 낮엔 태극기, 밤엔 촛불 (동아일보, 2017. 03. 02. 1면)
- 3·1절 광장의 촛불과 태극기, 그 걱정과 희망 (경향신문, 2017. 03. 02. 사설)

일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인 백색테러를 위협하는 양태들도 나타났고, 현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선동도 이어졌다. 이 시기 보수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촛불 vs 태극기’ 대립구도의 갈등문제로 접근하며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및 국정 대혼란을 우려하는 ‘대립갈등’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 진보언론에

서는 이를 ‘국정농단 세력의 반동’으로 규정하며 ‘무차별 백색테러’, ‘현재 위협하는 선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였다<sup>199)</sup>. 진보언론에서는 광장의 두 집회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대립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촛불민심의 탄핵 열망과, 이를 막으려는 수구 기득권세력이 광장에서 만났을 뿐 대등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장의 두 집회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이념이나 진영의 대결이 아니다. 촛불이 이뤄낸 탄핵을 사회개혁, 국가개조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이 광장에서 만났을 뿐이다. 가치의 충돌도 아니다. -중략- 보수세력이 기계적 중립이란 허울 아래 탄핵 촉구와 반대, 촛불과 태극기가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정한 태도가 아니다.” (경향신문, 2017. 03. 02. 사설)

이러한 가운데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해서는 ‘승복 프레임’이 전면에서 부상하였다. 보수언론에서는 <조선일보>가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상황을 끝내자”고 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현재 탄핵심판 선고를 기점으로 분열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를 찍자”고 당부했다. 진보언론에서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모두 박 대통령이 ‘승복’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sup>200)</sup>.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내용의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직후 일부 보수우익 세력의 격렬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 보수언론이 탄핵결정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정국 수습방안을 제시하는 사설을 게재한 것은 이러한 ‘승복’ 프레임의 책임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9)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극우세력들의 현재 위협행위는 노골화되었다.

- 현재 위협하는 선동 멈추자 (중앙일보, 2017. 02. 11)
- 헌법기관 위협하고 유혈사태 선동하는 ‘태극기 집회’ (한겨레, 2017. 02. 27)
- 재판관 집 주소까지 공개하는 비열한 ‘테러 선동’ (한겨레, 2017. 03. 02)
- 무차별 백색테러 위협하는 극우, 지금이 무정부 상태인가 (경향신문, 2017. 03. 03)

200) ·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내자 (조선일보, 2017. 03. 10)

- 3월 10일, 분열과 갈등의 끝이어야 한다 (중앙일보, 2017. 03. 09)
- 오늘,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동아일보, 2017. 02. 28)
- 현재 선고 승복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박 대통령 (경향신문, 2017. 03. 10)
- 탄핵 이후 국민 통합, 박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다 (한겨레, 2017. 03. 10)

<중앙일보>는 현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으로, 이 판결에 모두가 승복해 법치의 새 역사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애국의 방법으로 박 대통령부터 승복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안타까운 국가적 비극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로 남게 됐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현재의 판결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지지한다. 이 판결에 모두 승복해 법치의 새 역사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중략- 대한민국은 어제 한 사람의 대통령을 잃었지만 흔들리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힘을 모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2017. 03. 11. 사설)<sup>201)</sup>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고,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되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평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역사다. 2017년 3월 10일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파면을 요구하는 민의는 평화적이었으며, 절차는 헌법질서에 따랐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됐다.-중략- ‘조국 근대화’의 시대는 지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버지 시대를 살았다. 달라진 민주화 세대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그의 비극이자, 나라의 불운이었다. (동아일보, 2017. 03. 11. 사설)<sup>202)</sup>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 후 법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첫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비록 갈등은 컸으나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 난제를 매듭지었다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에 달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데 나서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측의

201) 중앙일보 (2017, 03, 11). <현재의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명령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1359964>

202) 동아일보 (2017, 03, 11). <초유의 대통령 파면...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섰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310/83273634/1>

지나친 축제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촛불 시위건 태극기 시위건 일부 극렬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는 충정(忠情)이었다.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커다란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이들 대다수는 맹목적인 개인 추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상황에서 탄핵 찬성 측이 축제를 열어 안보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의 충심을 폄훼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탄핵 찬성 측의 ‘승복’이다. (조선일보, 2017. 03. 11. 사설)<sup>203)</sup>

<한겨레>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로 평가하면서, 3월10일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혁명의 값진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역사적 측면에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현재결정 승복이 민주주의 출발점”이라며 박 대통령의 승복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에게 수치이자 자랑이다. 조작된 신화와 허상에 속아 오만무도한 자격 미달자를 국가 최고지도자로 뽑은 것은 돌이키기 힘든 실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잘못을 스스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저력을 발휘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옛 선현의 말을 운몽으로 증명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 2017년 3월10일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혁명의 값진 승리의 날로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다. (한겨레, 2017. 03. 11. 사설)<sup>204)</sup>

<경향신문>은 현재의 탄핵결정을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정의의 승리이고,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현재의 탄핵 결정은 안개처럼 자욱했던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는 차기 대통

203) 조선일보 (2017, 03, 11). <분열 대립 멈추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295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0/2017031002959.html)

204) 한겨레 (2017, 03, 11). <민주주의 이정표 새로 세운 시민혁명의 승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6026.html>

령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새 장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다. -중략- 돌맹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최고 권력자의 헌법 위반이란 비정상적인 상황을 헌법 질서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줬다. 민주주의의 승리고, 정의의 승리고,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 (경향신문, 2017. 03. 11. 사설)<sup>20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미디어 담론은 ‘시민혁명의 승리’, ‘국민의 명령’, ‘민주주의의 이정표’ 등으로 구성되는 역사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신문사의 정파성을 초월해 ‘승복 프레임’에 기반한 향후 국정수습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미시적 담론에서는 대척점을 두고 담론경쟁을 펴 왔으나 ‘탄핵’이라는 거시적 담론은 현재의 헌재선고 이전부터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2) 대통령 구속수사

탄핵정국의 최대 난제였던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상황은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얼마 후 검찰수사를 받게 된 박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다. 박 대통령의 검찰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구속수사 찬반을 놓고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정면 대립한다. 진보언론은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상응한 구속수사를 촉구하였고, 보수언론은 신문사별로 조금씩 입장을 달리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사실상 불구속 수사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진보언론은 ‘법과 원칙’, ‘법 앞의 평등’ 프레임을 구사하며 구속수사 당

205) 경향신문 (2017, 03, 11). <새로운 나라를 향해 대장정을 시작하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2108005&code=9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2108005&code=990101)

위성 담론전략을 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모두 박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결정되기 전부터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란 원칙을 제시하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 박근혜 수사, 신속·무관용 원칙으로 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7. 03. 15. 사설)<sup>206)</sup>
-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한겨레, 2017. 03. 21. 사설)

박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진 후에는 두 신문 모두 구속수사 촉구 프레임의 담론전략으로 전환했다. <경향신문>은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범죄혐의를 열거하며 구속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면서 검찰의 조속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범죄 증거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중략- 현재의 파면 결정도 승복하지 않고 지금껏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중략-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경향신문, 2017. 03. 25. 사설)<sup>207)</sup>

<한겨레> 역시 대통령의 13가지 범죄혐의가 이미 충분히 소명할 만큼 물증과 증언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들며,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를 충분히 소명할 만큼의 물증과 증언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중형이

206)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굳이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며 동정론에 기대려는 무원칙한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현재의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았고 누우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다. -중략- 그런 이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엄정함이다.” (경향신문, 2017. 03. 15)

207) 경향신문 (2017, 03, 25).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21270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42127025)

예상된다. -중략- 혐의가 이렇게 중대하면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하기 마련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구속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다. -중략- 형사소송법의 어느 기준과 원칙으로도 박 전 대통령 구속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겨레, 2017. 03. 23. 사설)<sup>208)</sup>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불구속 수사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집중 어필했다. 사상 처음으로 탄핵결정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대통령에게 다시 사법적 책임을 물으며 구속수사를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폈다. <조선일보>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것을 들며 구속수사 만큼은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원래 구속은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포승에 묶여 재판정을 드나드는 걸 봐야 하는 국민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2017. 03. 28. 사설)<sup>209)</sup>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처리방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하자는 것이다.

통상 구속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검찰은 줄줄이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과의 형평성, 전직 국가원수라는 특수 신분, 여론도 함께 고심할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여론조사에선 구속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정치권이 앞장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을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의 신병 처리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208) 한겨레 (2017, 03, 23). <‘박근혜 구속’, 망설일 필요 없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7575.html>

209) 조선일보 (2017, 03, 28). <朴 前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350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7/2017032703504.html)

조사의 성실성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 할 것으로 믿는다. (중앙일보, 2017. 03. 22. 사설)<sup>210)</sup>

보수언론에서는 가장 먼저 대통령 탄핵 불가피성을 설파해 온 <동아일보>도 현재의 탄핵심판이 끝난 후에는 ‘최소한의 예우’를 강조하며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성실한 조사를 전제로 해 불구속 수사를 제안했다. <동아일보>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 수의를 입은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 등을 세세하게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현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 후 신문사 내부적으로 입장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성심껏 응하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어디로 도주하겠으며 이제 와서 더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나.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한 명은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번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같이 불행한 헌정사가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종락-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본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도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또 무엇이 되겠는가. (동아일보, 2017. 03. 11. 사설)<sup>211)</sup>

이처럼 대통령 탄핵 후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 담론적 대립이 다시 이뤄졌는데, 진보언론에서는 ‘법과 원칙’, ‘법 앞의 평등’,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들며 구속수사를 촉구한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가혹함’,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와 함께 ‘성실한 조사’ 등을 전제로 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되었다.

210) 중앙일보 (2017, 03, 22). <박근혜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결정해야>.

<http://news.joins.com/article/21392216>

211) 동아일보 (2017, 03, 11). <박 전대통령 진상규명 적극 협조하고 檢 불구속수사를>.

<http://news.donga.com/more1/3/all/20170310/83273648/1#!p=13&>

##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미디어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정농단 및 헌정질서 문란, 촛불 공론장의 국민적 저항이라는 상황 변수 속에서 언론이 구사한 담론전략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의 대혼란 상황에서 작동되는 언론사의 뉴스담론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담론의 분석방법으로 페어클라우(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틀을 차용하여 텍스트(text) 분석,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 분석 등 3개 층위 차원으로 질적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담론분석의 방법론적인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사 유형, 뉴스담론 유형 및 세부 주제, 보도태도 등에 대한 계량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병행하였다. 분석기간은 소위 ‘정윤희 문건’ 파문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제기되었던 2014년 11월 1일부터 현재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된 박 대통령의 구속 수감일인 2017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를 4시기로 구분해 설정하였다. 분석대상 신문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5개 신문이고, ‘1면’ 뉴스, 사설, ‘오피니언’의 내부칼럼과 외부칼럼을 분석대상 기사 유형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사자료는 조선일보 527건, 동아일보 548건, 중앙일보 502건, 한겨레 503건, 경향신문 562건 등 총 2,642건이다. 기사 유형별로는 ‘1면 종합’ 기사가 876건(33.1%), ‘사설’ 1069건(40.4%), ‘오피니언(내부칼럼)’ 350건(13.2%), ‘오피니언(외부칼럼)’ 347건(13.1%)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4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의 전반적 흐름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의 유형 및 담론주제에 대한 계량적 내용분석을 병행하여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구성의 특징 및 차이점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2>에서는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 분석의 방법론 중 ‘담론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흐름 및 보도태도 등을 고찰하고 주요 시점별 담론 텍스트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페어클라우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홀(Hall)의 접합이론을 차용해 주요 이슈의 담론적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문제 4>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서 사회적실천의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한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담론경쟁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뉴스담론의 구성은 신문사 정파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의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의 전반적 흐름과 특성을 살피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구성의 특징 및 차이점 등이 확인되었다.

첫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슈는 최초 ‘정윤희 문건’ 파문이 일었던 2014년 11월말부터 2015년 1월 사이 크게 분출되었으나, 이후 2년 가까이 휴면기 상태에 있다가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폭발적 이슈로 부상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정농단 및 대통령 탄핵관련 보도기사를 시기별로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고 대통령 하야축구 촛불집회가 크게 확산됐던 제2시기에 보도 기사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최순실 국정개입 정황을 담은 태블릿PC 내용이 공개된 후 대통령 하야 축구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2016년 11월이 최고조에 달했다.

둘째, 탄핵사건 관련 보도에서 사용된 담론 구성의 내용적 유형(대주제)을 보면 ‘대통령 의혹/책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측근비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대립 갈등’, ‘탄핵’, ‘대기업/재벌 책임’, ‘국정수습’, ‘촛불/시국선언’, ‘위기 극복’순으로 나타났다. 제1시기에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가장 많은 반면 ‘대통령 의혹/책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됐다. 이 시기 쟁점인 ‘정윤희 문건’의 파문에 대해 언론이 대통령 책임 보다는 ‘정윤희 비선실세’라는데 더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 제2시기에 도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부터는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 구성이 급격히 많아졌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 처리된 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된 제3시기에서도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이 가장 많았는데, 탄핵결정이 이뤄지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제4시기에는 ‘대립 갈등’ 담론이 크게 늘었다.

셋째, 신문사별 담론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확인됐는데, ‘대통령 의혹/책임’과 ‘대기업/재벌 책임’은 진보신문에서, ‘대립 갈등’은 보수신문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신문에서는 3개 신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담론 유형이 모두 달랐는데, <조선일보>는 ‘대통령 의혹/책임’과 ‘대립갈등’, <동아일보>는 ‘측근비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중앙일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통령 의혹/책임’ 담론의 빈도가 높았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담론 주제는 각 ‘대통령 의혹/책임’과 ‘측근비리’, ‘비선실세 국정농단’ 순으로 많았다.

<연구문제 2>에서는 ‘담론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의 텍스트 구성이 시기별, 신문사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탄핵사건 관련 담론 유형(대주제)을 31개의 세부주제로 유목화 해 계량적 내용분석과 함께 질적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어는 ‘최순실 국정개입(태블릿PC 연설문 작성 등)’이고, 다음으로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측근에 제기된 의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윤희 문건’, ‘촛불집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핵사건 관련 뉴스 텍스트에서 ‘최순실’과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시기별로 보면, 제1시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어는 ‘정윤희 문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와대 측근 의혹’,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국정개입’,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2시기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촛불집회’, ‘국회 탄핵소추’, ‘대통령 위헌·위법행위’, ‘청와대 측근 의혹’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3시기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순실 국정개입’,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 ‘삼성 자금지원/이재용 부회장 구속’, ‘촛불집회’, ‘태극기 vs 촛불 대립’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 제4시기에서는 ‘대통령 구속 찬반’, ‘사회 통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 ‘대통령 위헌·위법행위’, ‘태극기 vs 촛불 대립’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신문사별 주제어 빈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최순실 국정개입’, ‘청와대 측근 의혹’ 순으로, <동아일보>는 ‘최순실 국정개입’, ‘청와대 측근 의혹’,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순으로, <중앙일보>는 ‘최순실 국정개입’, ‘대통령의 현실인식/책임’, ‘정윤희 문건’ 순으로 각각 높은 주제어 빈도를 보였다. <한겨레>는 ‘대통령 현실인식/책임’, ‘최순실 국정개입’, ‘촛불집회’, ‘대통령 위헌·위법행위’, <경향신문>은 ‘대통령 현실인식’, ‘촛불집회’, ‘검찰 수사’, ‘정윤희 문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어 분석대상 기사 2,642건의 텍스트 내용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 논조에서는 ‘부정/비판/반대’가 54.7%로 가장 높았고, ‘중립적’ 26.7%, ‘긍정/옹호/지지’ 18.6%의 비율을 보였다. 5개 신문사 모두 비판적 논조가 많았는데, ‘부정/비판/반대’ 기사의 비율은 <조선일보> 49.9%, <동아일보> 63.0%, <중앙일보> 46.8%, <한겨레> 58.1%, <경향신문> 55.2%로 나타났다.

각 주요 담론 주제별로 보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 논조의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다. 우선 최초 국정개입 사건으로 불리는 ‘정윤희 문건’ 파문 관련 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부정/비판/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보수신문에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비판적 기사 빈도가 높았으나, <조선일보>는 ‘긍정/옹호/지지’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보도에서도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다른 신문들 간 담론 텍스트 구성에 있어 논조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세월호 7시

간' 논란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규정하며 옹호적 논조의 기사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중립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비판적 논조의 기사가 많았다.

청와대 관저에서의 의료·미용행위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판적 보도가 주류를 이뤘다. 반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논란을 비롯해, 최순실 관련 각종 비리사건 등에 대해서는 5개 신문 모두 긍정적 보도 전혀 없이 부정/비판적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 등 대통령 측근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보신문과 더불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에서도 시종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보도가 많았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일부 현상을 갖고 비판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논란이 제기되었던 두 개의 사건, 즉, 2014년 소위 '정윤희 문건'의 비선실세 정윤희 국정농단, 그리고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여 이항대립(二項對立) 구도를 중심으로 한 담론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첫 번째 제1시기의 '정윤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뉴스담론 텍스트 구성은 신문사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다. 진보신문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시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설정하며 대통령의 책임과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보수신문에서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부분을 짚어내면서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윤희 문건=짜라시' 및 범죄행위로서의 '문건 유출' 사건의 수사에 주목하는 텍스트의 구성 빈도가 높았다. 담론 텍스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윤희 문건'이라는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과 '짜라시' 담론이라는 이항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에서는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 정윤희회', '문체부 국장 경질', '십상시' 등의 단어들이 서로 의미를 연결하며 국정농단의 의혹이라는 거대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짜라시' 담론에서는 '대통령 해명', '증권가 루머', '허위 내용', '문건 유출', '검찰 수사'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의제는 실제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2015년 1월말을 기점으로 해

신문의 주요 뉴스에서 빠졌다.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 인해 편집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태됐을 가능성도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며 “짜라시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발표한 후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소극적 보도 내지, 쟁점 본질을 제대로 보도 하지 않는 소위 ‘무(無) 보도 프레임’이 구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제2시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뉴스담론 텍스트는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대부분 언론에서 강렬한 비판적 논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특징을 보였다. 최순실 관련 비리·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초반부터 과급력이 강했고, ‘최순실=대통령 책임’ 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담론 텍스트 구성에 있어,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해명 입장 등을 통하여 미르재단 대기업 모금 지원과 관련한 ‘강제 모금’ 담론은 ‘재계 주도’ 담론으로, ‘최순실=대통령’ 담론은 ‘최순실 개인 일탈’ 담론으로 각각 맞불을 넣었으나, 실제 이항대립적 담론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정윤희 문건’ 당시와 비교해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여러 가지 비리 및 특혜 사건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성, 그리고 ‘촛불’로 상징되는 성난 민심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문제 3>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어떻게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s)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담론 간 접합 및 탈접합 되어 이루는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 결과 첫째, 2014년 11월 ‘정윤희 문건’ 보도로 시작되었던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서는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공식석상 발언 내지 해명 입장 발표를 통하여 형성된 ‘짜라시(허위 문건)’ 담론 두 가지 축으로 담론이 형성되어 대립적 논쟁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 크게 ‘정윤희 문건’을 통하여 실체가 드러난 청와대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불리는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 ‘국정개입’, ‘십상시(十常侍)’를 접합시키고, 문건의 내용을 허위로 규정하는 ‘짜라시 담론’을 탈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막강한 비선실세인

정윤희가 ‘문고리 권력 3인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정을 농단하여 왔고, 이 비선조직의 행태는 망국과 부정권력을 상징하는 ‘십상시’와 같은 환관정치의 폐단을 보이고 있어 담론적 실천방향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짜라시 담론>은 문건의 내용은 증권사에 나도는 루머 수준의 허위내용임을 전제로 하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담론을 탈접합 시키고 대신 ‘문건유출 사건’ 담론과 ‘검찰수사’ 담론을 접합시킴으로써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 사건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 사례의 문건유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선실세의 존재나 문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부각시킴으로서 여론의 초점을 ‘문건 유출’이라는 범죄행위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논란을 불러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논란은 ‘정윤희 문건’ 파문이 일었던 2014년 12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이슈화됐던 사건으로, 이 의제는 ‘문체부 인사 게이트’ 담론과 ‘체육계 적폐’ 담론 두개 축으로 형성되었다. ‘문체부 인사 게이트’ 담론의 발화자는 언론으로, ‘정윤희 딸 승마’, ‘괘씸죄’, ‘대통령 지시’를 접합시키고, ‘체육계 적폐’를 탈접합시키며 형성된 담론이다. 문체부 체육관련 국장과 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인사조치의 이면에 비선실세로 군림하던 정윤희의 딸 문제가 있었고, 정윤희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문책 인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대통령이 문책인사를 지시한 것은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논란과 함께, 괘씸죄 배경이 국·과장 경질 배경이 ‘정윤희 문건’으로 큰 파문을 빚고 있는 당사자인 정윤희 딸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컸다.

반면 ‘체육계 적폐 담론’은 ‘체육계 비리 척결’ 및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 ‘조작된 주장’을 접합시키고, ‘정윤희 딸 승마’는 탈접합 시키는 방식으로 생성된 담론이다. 문체부 국·과장의 경질인사가 비선실세 정윤희의 딸 승마대회 문제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했으나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로 비리척결이 지지부진해 책임을 물은 것인데 ‘터무니없이 조작된 주장’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셋째,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의 담론적 실천은 ‘최순실 게이트 담론’과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최순실 게이트 담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담론으로, ‘대기업 강제모금’과 ‘청와대 개입’, ‘전경련 해체’를 접합시키고 일련의 내용에 대해 ‘비방’ 내지 인신공격성 폭로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해명을 탈접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였고,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전경련이 실무적 역할을 맡아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에 지원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의 담론적 실천방향으로는 전경련 해체와 더불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실과한 내용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항적 성격이다. 이 담론은 ‘인신공격성 폭로 및 비방’ ‘대기업 순수 의지’, ‘문화 융성’ 등을 접합시키고, ‘최순실 친분’은 탈접합 시키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언론에서 제기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들을 확인이 안 된 인신공격성 폭로이자 비방으로 규정하며, 대기업들의 거액 모금은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자발적 참여의지로 이뤄졌다는 것이 핵심적 주장이다. 그러나 이 ‘자발적 모금’ 담론은 의도적으로 배척시키며 탈접합을 했던 ‘최순실’이 실질적인 주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모금의 방식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개입 내지 압력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연구문제 4>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3개 층위 중 ‘사회문화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신문사별 담론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회문화적 실천 흐름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 정파성에 따른 담론전략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이 3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사과는 1차 담화에서부터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역효과만 크게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짓 해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진보언론은 물론 보수언론으로부터도 강력히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하는 원

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사회문화적 담론실천 방향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특검수사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보수언론에서는 경제·안보 위기상황을 들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 자격상실’, ‘탄핵 대통령’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의 내용을 종합하면, 1차 담화 시기에서는 보수 언론의 ‘경제·안보 위기’ 담론과 진보언론의 ‘국정운영 불가’ 담론의 경쟁구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특검을 수용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제2차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는 진보언론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하야’ 담론이, 보수언론 중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2선 후퇴’ 담론, <조선일보>는 대통령 권위를 최소한이나마 인정하고 다른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유보적 입장의 담론이 각각 제시되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3차 담화에 대해서도 신문사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꼼수’로 규정하며 탄핵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퇴진’ 담론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담화는 1차 ‘사과’, 2차 ‘검찰수사 및 특검 수용’, 3차 ‘임기 단축 포함한 조기 퇴진’ 등 단계별 내용 자체만을 보면 파격적 수위로 볼 수도 있지만, 진실성 문제와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 문제가 드러나면서 3번의 담화 모두 언론과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정수습 방안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은 크게 ‘2선 후퇴론’, ‘즉각 퇴진론(탄핵 추진)’, ‘질서 있는 퇴진론(4월 퇴진론)’ 등으로 제시되었는데, 담론전략에 있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차이가 드러났다. 대통령의 2차 담화 발표를 기점으로 해 진보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였고, 보수언론은 ‘2선 후퇴’ 담론이 넓게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시간적 경과 속에서 진보언론의 ‘퇴진’ 담론은 탄핵 당위성 논리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견고해지는 양태를 보인 반면, 보수언론은 신문사에 따라 담론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였고, 각 신문사의 논조도 일관성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입장 번복과 같은 담론변화가 자주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

될 때까지 ‘질서 있는 퇴진론’을 주창하였고, <동아일보>는 최초 ‘2선 후퇴론’을 제시하였다가 2차 담화 발표 이후부터는 ‘탄핵’ 담론으로 완전히 선회했다.

종합해 보면, 국정수습 관련 담론전략에서 진보언론은 ‘탄핵 촉구’ 담론이라는 하나의 기조로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견고함을 보인 반면, 보수 언론은 ‘2선 후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절차 불가피’ 등으로 담론전략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제기 및 비판까지는 진보언론과 더불어 공세적 입장을 취해 온 보수언론이 막상 대통령의 거취문제와 관련된 ‘하야’ 내지 ‘탄핵’이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자 딜레마 내지 자기모순 등과 같은 내적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담론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가 발생할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언론의 담론 구성 내지 논조는 이념적 성향 보다는 개별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 담론 흐름은 크게 ‘7시간 행적 의혹’ 담론과 ‘무분별 의혹제기’ 담론의 경쟁구도를 이룬다. 전자의 담론 그룹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대표적이고, <중앙일보>는 다소 소극적 보도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논조는 전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언론의 ‘7시간 행적의혹’ 담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의료시술’과 ‘머리 손질’을 비롯한 미용으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적 실천 방향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들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이를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무분별 의혹제기’ 담론을 폈다.

넷째,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관련한 이슈에서는 신문사의 정파성에 따라 논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금받아 재단법인 미르 설립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 설립에 288억 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전경련 문제에 대해서는 5개 신문 모두 ‘전경련 해체’라는 공통의 요구를 제시하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모금지원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나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보수언론 대부분이 ‘피해자’ 및 ‘경제위기’ 담론을 통해 재벌 총수들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로 돌아섰다.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확인돼 형사적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보수언론들은 ‘피해자’ 담론으로 재벌들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반면 진보언론에서는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정경유착의 적폐로 규정하면서, 재벌들은 ‘강제 모금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도 보수언론에서는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진보언론에서는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담론을 펴며 정면 대립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재용=피해자’, ‘구속수사 부당’ 담론을 구사했다. 그의 뇌물사건은 대통령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지 자발적 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이들 신문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시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점, 영장 재청구 시점 및 구속영장 발부시점 등 각각의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는 ‘사설’을 연이어 게재했다. 이에 반해 진보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담론적 전략을 구사했다. 일부 경제단체와 언론이 ‘이재용 구하기’를 위해 ‘경제 위기론’과 ‘특검 변질론’ 등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가했다.

다섯째, 현재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담론에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승복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가 이뤄진 후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를 전후해서는 구속여부를 놓고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진보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과 원칙’, ‘법 앞의 평등’,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의 프레임을 구사하며 구속수사 당위성을 강조하는 담론전략을 이어나갔다. 이에 반해 보수언론들은 구속수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불구속의 신병처리를 유도하는 뉴스담론이 주류를 이뤘다. 탄핵결정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으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논리였다. <조선일보>는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국민적 정서를 감안할 것을 들며 구속수사 만큼은 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고,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다면’을 전제로 해 불구속

수사를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성실한 조사’ 여부로 신병 처리방안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성난 촛불민심 앞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무겁게 제기했던 보수언론들이 탄핵결정이 내려진 후 다시 보수진영의 눈치를 살피며 감성적 논리로 전환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2절 결론 및 함의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 및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의 전반적 흐름을 고찰한 결과 주요 시점마다 터져 나온 언론의 ‘단독 보도’와 같은 뉴스들이 담론 구성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윤희 문건’(세계일보, 2014. 11)을 시작으로, ‘미르·K스포츠재단’(TV조선, 2016 7~8월), ‘최순실 비선실세’(한겨레, 2016. 9), ‘태블릿PC 공개’(JTBC, 2016. 10) 등이 그 대표적 사례로, 이들 뉴스를 중심으로 거대 담론과 미시적 담론들이 생성되고 경쟁하는 과정의 흐름 속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거시적 담론지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탄핵사건 관련 기사의 보도량 자체가 단일 주제로는 이례적으로 평가될 만큼 많았는데<sup>212)</sup>, 탄핵관련 새로운 이슈가 도출될 때마다 각 신문들의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논조가 이어지면서 담론 흐름은 매우 빠르고 급박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일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담화, 대통령 하야촉구 촛불집회,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등이 이어진 2016년 11월은 새로운 이슈의 계속된 등장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논조 변경을 포함한 담론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sup>213)</sup>. 이른바 정국의 대혼란 속에 언론의 담론 구성도 격변기의 중대한 상황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미시적 담론에서는 사안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양태를 보이면서도, ‘탄핵’이라는 거시적 담론에서는 방향성을 거의 비슷하게 펼친 점도 이번 탄핵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이 ‘탄핵’ 담론에 최소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12)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뉴스 선정을 위해 탄핵사건 관련 뉴스를 게재 지면 구분없이 1차 추출한 결과 중복기사를 걸러내더라도 <조선일보> 4,679건, <동아일보> 5,109건, <중앙일보> 4,274건, <한겨레> 5,258건, <경향신문> 5,368건 등 총 2만 4,688건이 수집되었다.

213) 2016년 11월 한달간 5개 일간신문에 게재된 사설 373건을 분석한 결과 81.8%가 탄핵사건 관련 사설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철수·김경호 2017).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태블릿PC 내용이 공개된 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사과 담화 발표일(2016. 11. 04)을 전후한 시점에서 보수 언론에서도 ‘2선 후퇴론’이나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론’ 등을 꺼내들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음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 측면의 이견(異見), 즉, 2선 후퇴냐, 자진퇴진이나, 탄핵이나 등의 차이가 있을 뿐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뉴스담론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대립적 논조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214)</sup>. 국내 일간신문들이 그동안 선거나 정치현안 등에 있어 이념적 정파성을 드러내며 대립적 논조를 펴온 점을 감안하면, 탄핵사건 담론구성에서 정파성 경계가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셋째,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명명된 두 사건, 즉, 2014년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난 이항대립(二項對立) 구도의 담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담론 조작’의 변수가 확인됐다. 제1시기의 정윤희 사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조직이 검찰을 통해 작위적으로 대립적 담론을 생성시키는 ‘역공’을 통해 ‘본질 은폐’ 내지 ‘여론 호도’ 등과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건의 내용은 증권사 짜라시 수준의 허위”라는 담론을 생성하게 하고, 문건 유출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시함으로써 공중의 관심을 ‘문건의 내용’에서 ‘문건 유출’로 전환시키는 담론전략이 행해졌다. 이 결과 진보언론의 강력한 의혹제기 및 진실규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vs ‘짜라시’, ‘정윤희 문건’ vs ‘문건유출 범죄행위’ 등과 같은 이항대립 구도가 설정되었다. 여기에 <조선일보>의 노골적 청와대 입장 옹호가 있었고, 시기별 담론유형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 언론은 ‘대통령 책임’ 보다는 ‘정윤희’ 및 일명 ‘문고리 3인방’을 더 주목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직접적 책임론의 범주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다.

반면 제2시기의 최순실 사건에서는 ‘최순실=대통령 책임’ 담론이 크게 확산되

214)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압도적 찬성 의결,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의견의 탄핵인용 결정도 언론의 이러한 분위기가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면서 제1시기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청와대는 미르재단 대기업 모금 지원과 관련한 ‘강제 모금’은 ‘재계 주도’로, ‘최순실=대통령’은 ‘최순실 개인 일탈’로 각각 해명하며 ‘정윤희 문건’ 때와 같은 반전을 시도했으나 실제 이항대립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번째로 최순실 사건의 경우 정윤희 논란 때와 비교해 사안이 중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정윤희 논란 때는 문건의 내용을 통해 권력 내부 ‘십상시’와 같은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정도였지만, 최순실 사건은 이러한 국정개입 행세뿐만 아니라 미르·K스포츠재단 게이트를 비롯해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성 승마지원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동시에 연관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군집된 덩어리와 같은 ‘대형 게이트’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윤희 사건 때에는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축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 있었으나 최순실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받는 직접 당사자였다는 점도 1시기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시기에서는 담론 조작과 같은 방법의 작위적 ‘이항대립 구도’ 설정이 가능했으나, 2시기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히려 대국민 사과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이 거짓 논란에 휩싸이며 더 큰 곤경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들이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을 거치며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접합 이론을 통해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탐색한 결과 현재 탄핵심판 사유로 올랐던 쟁점 중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 대응은 오히려 박 대통령측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의 담론적 실천은 ‘최순실 게이트 담론’과 ‘대기업 자발적 모금 담론’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최순실 게이트 담론’은 ‘대기업 강제모금’과 ‘청와대 개입’, ‘전경련 해체’를 접합시키고 이 의혹에 대해 인신공격성 폭로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해명을 탈접합시키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주도적으로 두 재단을 설립하였고, 설립과정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전경련이 실무적 역할을 맡아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강제 모금하여 재단에 지원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측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확인이 안된 인신공격성 폭로이자 비방으로 규정하며, 대기업들의 모금은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자발적 참여의지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측의 담론전략은 현재의 탄핵심

판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무리한 시도를 한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접합이론을 통한 언론의 담론적 변화 탐색에서는 보수신문이 정치적 사안과 경제적 사안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는 담론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정윤희 문건’이나 ‘문체부 공무원 경질인사’, ‘최순실 국정농단’ 등의 정치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진보언론과 비슷한 방향으로 담론요소 접합이 이뤄지며 비판적 논조의 색채가 강했다. 반면 대기업 총수 청문회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경제적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 담론이나 ‘경제위기’ 담론 등을 연결시킨 대기업 옹호 프레임의 담론전략이 두드러졌다.

다섯째, 탄핵정국에 있어 미시적 담론들의 경우 정파성 또는 신문사의 입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로도 포함된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가 발생할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의료시술’과 ‘머리 손질’로 시간을 보내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념적 성향 보다는 개별 신문사의 입장에 따라 담론경쟁의 구도가 형성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해서는 ‘7시간 행적 의혹’ 담론을 편 반면, <조선일보>는 국회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무분별한 의혹제기’ 담론을 폈다.

전반적 담론 흐름은 크게 ‘7시간 행적 의혹’ 담론과 ‘무분별 의혹제기’ 담론의 경쟁구도를 이룬다. 전자의 담론 그룹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동아일보>가 대표적이고, <중앙일보>는 다소 소극적 보도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논조는 전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언론의 ‘7시간 행적의혹’ 담론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의료시술’과 ‘머리 손질’을 비롯한 미용으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회문화적 실천 방향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들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이를 탄핵소추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무분별 의혹제기’ 담론을 폈다.

대기업 자금모금 지원 관련 이슈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 모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재벌기업 청문회와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보수언론

은 ‘피해자 담론’을 펴며 재벌기업 편들기가 노골적이었고, 진보언론은 ‘재벌개혁’을 화두로 꺼내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논란에 있어서도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피해자 담론’을 펴며 구속반대 입장을 편 반면, 진보언론은 ‘자발적 공범자’ 담론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대통령의 거취문제를 포함하는 국정수습 담론에서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 담론전략의 차이가 일부 확인됐다. 진보언론의 경우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하였고, 이후 ‘탄핵’ 당위성으로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담론전략이 두드러졌던 반면 보수언론은 ‘2선 후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절차 불가피’ 등을 놓고 논조 변화가 많았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이 중국에는 탄핵 불가피성으로 담론이 귀착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은 일정한 방향의 흐름을 유지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역동적이고 변동성이 강한 형태로 급박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정농단 및 헌정질서 문란,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적 저항이라는 상황 변수는 언론의 담론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탄핵’이라는 거시적 담론에 진보언론과 더불어 보수언론이 묵시적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언론의 정파성이라는 것 또한 국가적 위기의 대혼란 상황에서는 결국 민심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시적 담론에 있어서도 최순실 관련 각종 비리나 특혜의혹,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은 진보언론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에서도 매우 적극적 의혹 제기나 비판보도가 이뤄졌던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제2시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언론사의 뉴스담론 메커니즘은 제1시기와는 확연히 달랐다. 1시기에서는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며 진보언론의 의혹제기 프레임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2시기 대통령 측근 비리나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보수 언론 또한 적극적이고 공세적 논조의 보도가 이어졌다. 최순실 게이트의 미르재단 대기업 모금 지원이 첫 보도되기 직전인 2016년 7월은 <조선일보>를 비

못한 대부분 언론에서 당시 청와대 우○○ 정무수석 등 대통령 측근관련 비리나 각종 의혹제기 보도를 쏟아내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시점이었다. 바로 이 무렵 조선일보 자회사인 <TV조선>이 ‘청와대, 문화재단 미르에 500억 원 모금 지원 의혹’을 첫 단독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가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정윤희 문건’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연관된 측근비리의 경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옹호하고 방어하는 담론전략이 일부 나타났으나, 2016년 최순실 사건에서는 보수언론이 먼저 ‘의혹 파헤치기’에 동참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현직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매우 크게 나타났던 것은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물론 탄핵정국에서 재벌기업 총수 청문회나 검찰수사,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탄핵 후 구속여부의 신병처리 문제 등과 같은 미시적 담론에서는 신문의 정파성에 따라 입장이 갈리기는 했으나 이는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정체성에서 오는 내적 충돌 내지 딜레마와 같은 혼란으로 인한 담론적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탄핵정국의 미디어 담론은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 속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종전 언론사의 일반적 뉴스담론 메커니즘과는 다른 차원을 보였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현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을 이용해 각 신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뉴스담론을 생성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사건과 같은 초대형 사건, 그리고 국가적 위기의 대혼란 상황에서 나타난 언론의 뉴스담론 메커니즘을 규명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분석방법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방법론적 엄밀성을 강화한 것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구성요소인 텍스트 분석, 담론적 실천 분석,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등 3개 층위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계하면서, 각각의 층위에서 방법론적인 보완을 기하였다. 이를 테면 텍스트 분석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 뉴스담론 자체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복잡한 의미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계량적 내용분석을 통해 텍스트 유형 및 내용을 살펴본 후 ‘이항대립’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의 생성 및 변화과정의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담론적 실천’ 분석에서는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담론들이 접합과 탈접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페어클라우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of text)’ 개념을 홀의 접합이론을 차용해 분석하였다. 담론의 탈·접합 분석은 시기별 주요 쟁점 이슈를 선정해 진행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다원적으로 넓혔다. 기존 연구에서 보통 단일 담론주제를 갖고 분석을 시도하던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사회문화적 실천’은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해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쟁점이슈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담론들은 무엇이고, 담론구성에 있어 신문의 정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른 점이 있다면 쟁점이슈를 시기별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이는 각각의 분석결과를 단절적으로 해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미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는 차원과 함께, 각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거시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함이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적 분석틀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성격에 맞게 재설계하여 진행하면서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축적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 성과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방법론을 체계화시키고, 담론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전후 시기에 나타난 미디어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을 차용해 탄핵사건을 둘러싼 담론의 텍스트 구성은 시기별, 신문사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이러한 뉴스담론들은 담론적 실천과정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 쟁점이슈에 있어 담론 경쟁과 신문사의 정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이번 연구의 성과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 내지 한계가 있었다.

우선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었던 ‘비판적 담론분석’의 3개 층위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틀은 ‘담론 텍스트’, 텍스트 간 상호작용성에 초점을 맞춘 ‘담론적 실천’, 그리고 텍스트담론의 사회적 의미를 말하는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 등 3가지 층위에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론 텍스트 분석의 방법론적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항대립적 담론텍스트’ 질적 분석에 앞서 시기별, 신문사별 담론텍스트의 유형 및 내용, 보도태도 등에 대한 계량적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담론적 실천’ 분석에 있어서는 홀(Hall)의 접합이론의 틀을 차용하여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담론들이 접합과 탈접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담론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탐색하였다. 세 번째 ‘사회문화적 실천’에서는 텍스트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사회구조나 사회권력 등의 거시적 차원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체계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담론경쟁 및 정파성 차원의 분석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각각의 분석과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3개 층위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고, 내용적 기술에서도 층위 간 구분이 쉽지 않은 문제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텍스트 담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하면서도, 담론적 실천이나 사회문화적 실천의 내용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점이 일부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들에서도 한계로 많이 지적되었던 3개 층위 중 ‘담론적 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비판적 담론분석은 방법론에서 공통된 방법적 규칙이나 기술, 원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아직까지는 방법론이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의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3개 층위 간 경계점 구분 등 방법론적 엄밀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강국진 (2016). <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8.
- 강진숙 (2006).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호, 7~52.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 대통령 친인척 비리보도의 뉴스프레임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156~196.
- 고영철 (2012). 한·미 지역일간지 1면 기사의 보도방식 비교 : 기사의 길이, 리드 및 인용구 서술방법, 인용구의 수, 제목의 표현방식 등.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37~78.
- \_\_\_\_\_ (2013). 캠페인 관련 뉴스 프레임 및 뉴스정보의 출처에 관한 연구 : 국내 5대 일간지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0호, 187~250.
- 곽정래·이준웅 (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 <조선일보>·<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196~214.
- 김경용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기호의 우리, 우리의 기호>, 서울: 민음사.
- 김경호 (2011). 명예훼손 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권 1호, 235~279.
- 김광우 (2010). <방송보도의 의제형성과 내부 의사결정의 연계성 연구: 제주지역의 2010년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과성 지형 : 공

- 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75~122.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권 1호, 5~67.
- 김성해 (2013). 동아시아 공동체와 담론 전쟁 : 한국 언론의 동북공정과 독도분쟁 재구성. <언론과 사회>, 21권 3호, 64~106.
- 김성해·강희민·이진 (2007). 한국의 구조적 전환과 미디어 담론 :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주주중심 모델의 수용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5권 4호, 39~85.
- 김수정·정연구 (2010). 프레임 분석에 있어서 무보도 현상의 적용 효과 연구 :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판결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2호, 382~404.
- \_\_\_\_\_ (2011). 무(無)보도 현상과 언론윤리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 국정원, 기무사 민간사찰 관련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3호. 5~27.
- 김영욱 (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 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107~236. 서울. 한국언론재단.
- \_\_\_\_\_ (2012). 담론 경쟁으로서 PR커뮤니케이션 :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방향성 설정. <커뮤니케이션 이론>, 8권 1호, 352~386.
- 김영욱·임유진 (2009). 언론의 정부-언론 관계와 언론 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보도 이데올로기 차원 비교 평가,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94~115.
- 김영욱·함승경 (2014). 금연과 흡연의 담론 경쟁: 비판적 담론 분석(CDA)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333~361.
- \_\_\_\_\_ (2015).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경쟁, <홍보학연구>, 19권 4호, 83~115.
- 김영욱·함승경·김영지 (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DA)과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합,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3호, 7~38.
- 김영은·김성민 (2008). KBS 사장 해임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 연구 : 미셀 페쇠

- (M. Pêcheux)의 담론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2008년 10월), 441~466.
- 김영지 (2008). 촛불집회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 대안 공론장 개념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2008년 10월), 359~377.
- 김원용·이동훈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해연·강진숙 (2016).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283~312.
- 김현태 (2011). 온라인 내부고발 저널리즘으로서의 위키리크스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CDA).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권 1호, 127~155.
- 노현주·윤영철 (2016). 신문, 방송, 포털매체의 의견 다양성 비교분석 : ‘통진당 해산 선고’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6호, 68~99.
- 류용재 (2010). 담론분석과 정치경제학의 조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커뮤니케이션 질적 연구방법론의 몇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권 4호, 37~73.
- 류용재·최진호 (2016).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한국사회의 위기 징후: 교황 방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133~164.
- 류희림 (2013). <한국 방송뉴스의 경제보도와 위기담론의 상관성 연구 : KBS, SBS, YTN의 경제위기보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철수 (2009). 정부PR 요소가 내재된 ‘이명박 정부’ 정책의 정치적 상징성 연구 : 국내 주요 신문 사실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5호, 147~186.
- 박경숙 (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310~340.
- 박선미 (2008).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유기적 지식인’의 재해석 : 2008 촛불집회 관련 온라인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2008년 10월). 205~248.
- 박영흠·김균 (2016).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언론학보>, 60권 1호, 202~228.

- 박옥규 (2015). <공영방송 정책 주체들의 담론 특성에 관한 연구 :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천웅 (2013). <‘혼종적 담론비판분석’으로 본 한국의 다문화담론 비판>.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식·김성해 (2014).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언론 보도 연구.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75~112.
- 방희경·유수미 (2015). 한국 언론과 세대론 전쟁(실크세대에서 삼포세대까지) : ‘위기론’과 ‘희망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37~61.
- 백선기 (1997). <한국 선거보도의 기호학>.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6). 인터넷 미디어의 ‘미국·이라크’ 전쟁 보도 경향과 담론구조 : 《오마이뉴스》 보도의 시간구조와 담론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3, 115~167.
- \_\_\_\_\_ (2015). <미디어 담론>.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백선기·김소라 (1998).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동성애에 대한 ‘매스 미디어’와 ‘게이커뮤니티’의 담론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6집, 78~114.
- 백선기·이경락 (2009). UCC의 정치 활용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의미 : 17대 대통령선거 시의 담론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5호, 187~237.
-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권 2호, 55~89.
- 설양환 (2017). <국내 신문 기사에 나타난 영재교육 및 영재에 대한 담론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석준 (2017). ‘보수·진보 프레임’의 한계와 미디어 비평의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2호, 7~28.
- 송용희 (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1호, 229~251.
- 송은지·이건호 (2014).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 보도 : 김영삼~이명박 대통령 시기 신문과 정권의 정파성에 따른 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228~250.

- 송인덕 (2014). 언론사의 정파성 인식과 수용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향적 매체 지각 : 신문사설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권 3호, 222~257.
- 송현주 (2015a). 정파성의 강도와 정책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정파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221~245.
- \_\_\_\_\_ (2015b). 정파성 개념의 정교화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의 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176~211.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통권 89호, 10~45.
- 양은경 (2012). 스포츠 선수의 초국적 이동과 유연한 민족정체성의 형성: '국가경쟁력으로서의 박지성'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학보>, 56권 4호, 80~104.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오수민·이하나·장기선·김영욱 (2012). 비판적 PR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담론경쟁 분석: TV토론 프로그램 비판적 담론분석 중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0권 2호, 73~103.
- 유승관 (2010). 방송설립 초기의 방송개혁 운동에 대한 담론분석 : 미국신문의 보도프레임과 정치적인 함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7호, 213~248.
- 유용민 (2016). <사법 보도의 뉴스 특성에 관한 연구 : 통합진보당 및 간통죄 사건 헌법재판 보도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재홍·방운현·장경수 (2009). 고위공직자 재산검증보도에 대한 매체 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 KBS와 조선일보의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2호, 199~243.
- 윤철수·김경호 (2017).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관련 미디어 담론 분석 : 5개 일간신문 사설의 프레임 구성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45호, 69~101.
- 이기형 (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
- 이봉현·김성욱 (2011). 미디어 담론분석을 통해 본 리비아전쟁 : 언론에 의한 카

- 다피 악마화 과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7권 2호, 105~143.
- 이서현·고영철 (2013).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관련 지역일간지의 뉴스 프레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3호, 26~52.
- 이서현·김성해 (2017). 규범적 시대정신과 현실적 이해관계의 충돌 : ‘김영란법’ 보도를 통해 살펴본 한국 언론의 담론정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44호, 85~120.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23권 4호, 5~66.
- 이소윤·김희정 (2012). 언론보도 프레임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조치 논란을 중심으로. <홍보학 연구>, 16권 4호, 51~90.
- 이오현 (2017). 언론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이명박 정권 이후 대학 정책에 대한 주요 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82호, 29~71.
- 이정민·이상기 (2014). 민생 없는 민생 담론 : 한국 종합일간지 사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7호, 88~118.
- 이정훈·이상기 (2016).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7호, 9~35.
-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통권 29호, 85~153.
- \_\_\_\_\_ (2005).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과 언론에 대한 공정성 요구: 공정한 담론 규범 형성을 위하여. <방송문화연구>, 17권 2호, 139~172.
- 이진규 (2012). 정치권력 변동과 언론보도의 함수관계: 6개 정치권력과 7개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24호, 81~131.
- 이철한 (2013). 정치담론의 기능적 분석연구 : 2011년 서울시장 선거 텔레비전 토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0호, 159~185.
-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PR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과 편향적 언론 보도 : 원자력 이슈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6호, 233~261.
- 이효성 (2016). 철도노조의 민영화 파업과 언론보도 :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43호, 295~321.
- 정재철 (2001).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7호, 112~144.
- \_\_\_\_\_ (2002). 한국언론과 이념담론.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314~348.
- \_\_\_\_\_ (2011). 한국 신문과 복지 포퓰리즘 담론 :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372~399.
- \_\_\_\_\_ (2012).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 분석.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427~454.
- 조종혁 (2011). 비판적 담론분석(CDA) 방법의 탐구 : 기딘스, 부르드외, 하버마스의 분석모형.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9권 1호, 157~173.
- 조희연 (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 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서울: 함께하는 책.
- 채영길 (2012).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 : 한국 언론의 한미 외교관계 논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권 4호, 533~574.
- 최낙진 (2015). 한국신문에 나타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담론. <언론학연구>, 19권 3호, 247~279.
- 최윤선 (2014). <비판적 담화분석: 담화와 담론이 만나는 장>. 서울: 한국문화사.
- 최은희 (2014). 한국과 독일의 방송뉴스 담론 비교 연구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도에 대한 푸코적 담론질서 중심의 시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2권 2호, 145~179.
- 최종환·김성해 (2014). 민주주의, 언론 그리고 담론정치 : 파업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7호, 152~176.
- 최진호·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 1987년 이후 13~17대 대선 캠페인 기간의 주요일간지 사설 분석.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
- 함승경·김영욱 (2014). 담론경쟁을 통한 PR커뮤니케이션 사호적 차원 확대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8권 1호, 276~319.
- 허윤철·강승화·박효주·채백 (2012). 한국 언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담론: <동아일보>의 보도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호,

130~153.

허윤철·박홍원 (2010). 한국언론과 세계화 담론 :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계화 보도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10권 4호. 562~602.

홍성현·류용재 (2013).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글로벌 인재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9권 4호, 4~57.

황인성 (2011). 미셸 푸코 재고찰: 담론 이론이 영상문화연구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5권 4호, 123~137.

Bell, A., & Garrett, P. (Eds.).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백선기 역 (2004). <미디어 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Crossley, N. (2005). *Key concepts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Sage.

Entman, R.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Fairclough, N. (1989). *Language and power*. 김지홍 역 (2011). <언어와 권력>. 서울: 경진.

\_\_\_\_\_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UK: Polity Press.

\_\_\_\_\_ (1995). *Media Discourse*, 이원표 역 (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서울 : 한국문화사.

\_\_\_\_\_ (2001). *Language and Power(2nd ed.)*, 김지홍 역 (2011). <언어와 권력>. 서울: 도서출판 경진.

\_\_\_\_\_ (2010).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critical study of language*. Harlow, UK: Pearson.

Fairclough, I., & Fairclough, N. (2012).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a method for advanced students. 김현강·신유리 역 (2015). <정치담화분석>. 서울: 박이정.

Foucault, M. (1966). *The Order of Things*. 이규현 역 (2012). <말과 사물>.

- 서울: 민음사.
- \_\_\_\_\_ (1971).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역 (2012).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_\_\_\_\_ (1975). *Surveiller et punir*. 오생근 역 (2016).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
- Gamson, W. A., & Lasch, K. E. (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 Spiro and E. Yuchtman-Year(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7). The changing culture of affirmative action. In R. G. Braugard (Ed.), *Research in political sociology*. Greenwich, Conn: JAI.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I.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ll, S. (1985).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 Althusser and the post-structuralist debat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2(2).
- \_\_\_\_\_ (1986). *Cultural Studies*. 임영호 역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서울: 한나래.
- Macdo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Blackwell.
- \_\_\_\_\_ (1987). *Theories of Discourse : An Introduction*. Basil : Blackwell Ltd. 임상훈 역 (2008). <담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 Said, E. (2003). *Orientalism*. 3rd ed. London: Penguin.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van Dijk, T.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_\_\_\_\_ (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

## 2. 인터넷판 뉴스

기자협회보 (2015, 1, 14). <도 넘은 정파성에 떠나는 독자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5469>

미디어오늘 (2014, 11, 12). <손석춘 칼럼 : 정파주의 저널리즘의 정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26>

미디어오늘 (2015, 1, 21). <조선일보·한겨레, 20년간 보수·진보 정파보도 늘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22>

세계일보 (2014, 11, 28). <[단독] 정윤희 ‘국정 개입’은 사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7005381>

세계일보 (2014, 11, 28). <비선실세그룹 ‘십상시’…국정 정보 교류·고위직 인사 간여>.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7005387>

세계일보 (2014, 11, 30). <베일 가려진 정윤희씨 실체는…>.

TV조선 (2016, 07, 26). <[단독] “靑 안○○ 수석, 500억 모금 개입 의혹”>.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26/2016072690265.html)

TV조선 (2016, 08, 02). <[단독] ‘케이스포츠재단’ 400억 모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90166.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90166.html)

TV조선 (2016, 08, 03). <[단독] 미르·K스포츠 회의록 판박이…배후는 동일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90184.html](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3/2016080390184.html)

## 부록 - 내용분석 코딩 유목

1. 코딩번호 ( )

2. 언론사

1) 조선일보 2) 동아일보 3) 중앙일보 4) 한겨레 5) 경향신문

3. 보도 시기별

1) 제1시기(2014. 11. 01 ~ 2016. 10. 23)

2) 제2시기(2016. 10. 24 ~ 12. 09)

3) 제3시기(2016. 12. 10 ~ 2017. 03. 10)

4) 제4시기(2017. 03. 11 ~ 03. 31)

4. 기사 유형

1) 1면 종합 2) 오피니언-내부 칼럼 3) 오피니언-외부 칼럼 4) 사실 5) 기타

5. 뉴스담론 유형

1) 대통령 의혹/책임 2) 측근 비리 3) 비선실세 국정농단 4) 국정수습 5) 탄핵

6) 촛불/시국선언 7) 대립갈등 8) 대기업/재벌 책임 9) 위기 극복

6. 뉴스담론 세부 주제

(대통령 의혹/책임)

1-1 세월호 7시간

1-2 청와대 관저 의료·미용행위

1-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4 위헌/위법 행위

1-5 언론자유 침해 / 문체부 공무원 임면권 남용

1-6 대통령 입장 / 현실 인식

(측근 비리)

2-1 미르·K스포츠재단

2-2 최순실 연관 비리사건(정유라 승마 / 이화여대 부정입학 / 특혜·이권개입 등)

2-3 청와대 등 공조직 라인 측근에 제기된 의혹

2-4 검찰 수사결과, 특검수사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3-1 정윤희 문건

3-2 최순실 국정개입(태블릿PC 연설문 작성 등)

(국정수습)

- 4-1 즉각 퇴진론 / 탄핵 추진
- 4-2 질서있는 퇴진론(4월 퇴진론) / 2선 후퇴
- 4-3 거국내각 구성 / 영수회담 / 총리 지명
- 4-4 개헌
- 4-5 조기 대선

(탄핵)

- 5-1 국회 탄핵소추
- 5-2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촛불)

- 6-1 촛불집회
- 6-2 시국선언

(대립갈등)

- 7-1 태극기 vs 촛불
- 7-2 대통령 구속 찬반
- 7-3 보수정당 분열 / 보수진영 책임론
- 7-4 야당 책임 / 야권 대선주자 등 비판

(대기업/재벌 책임)

- 8-1 삼성 자금 지원 / 이재용 부회장 구속
- 8-2 전경련 모금 지원
- 8-3 대기업 조사

(위기 극복)

- 9-1 사회통합(분열 극복, 혼란수습, 촛불정신 계승 등)
- 9-2 경제 위기
- 9-3 안보 위기

7. 보도태도

- ① 긍정/옹호/지지    ② 중립적    ③ 부정/비판/반대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Critical Discourse of Media Coverage ab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 Focusing on Partisanship and Discourse Competition of 5 Daily Newspapers

Yun, Cheol-soo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features of media discourse about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formally impeached the incumbent president on March 10, 2017, a first in the nation's history. Articles on the first page, editorials and opinion pieces of the Kyunghyang Shinmun, Donga Ilbo, Chosun Ilbo, Jungang Ilbo and Hankyoreh were analyzed in the frame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discourse ab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showed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discourse over time and by individual news paper company. "Suspicion/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opic in the news discourse. "Close allies' corruption",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discord, confrontation", "impeachment", "responsibilities of conglomerate and chaebol", "normalization of state affairs" and "candlelight vigil and declaration on the deplorable state of affairs" followed. "Suspicion/responsibility of the president" and "responsibilities of conglomerate and chaebol" frequently appeared in the progressive news paper while "discord, confrontation" repeatedly appeared in

the conservative news paper.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text composition of the discourse about the impeachment, “masterminding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by the president’s confidant, Choi Soon-sil”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opic. “President’s awareness of the reality and responsibilities”, “suspicion raised concerning president’s close allies”, “impeach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hung Yoon-hoi’s dossier” and “candlelight vigil” followed.

When examined by the passage of time, at the first phase, “Chung Yoon-hoi’s dossier”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key word. “Masterminding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by Choi Soon-sil”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and “president’s awareness of the reality and responsibilities” and “candlelight vigil” followed during the second phase. “Impeach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at the third phase and “imprisonment of the president” was frequently used at the fourth phase.

Discourse text analysis was made on the allegation of the masterminding governmental policy and decision making by Chung Yoon-hoi in 2014 and by Choi Soon-sil” in 2016 in the frame of the binary opposition. In the Chung Yoon-hoi’s case, the discourse about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conflicted with the “gossip” discourse in the parameter of “Chung Yoon-hoi’s dossier.” The progressive newspapers defined the case as the “criminal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 by civilians” and stressed the president’s responsibilities and asked for strong punishment. Meanwhile, Chosun Ilbo, one of the conservative newspapers, highlighted the “leaking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as a criminal act. On the contrary, both of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criticized Choi Soon-sil’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The discourse about

the president's fault for Choi's acts was extensively spread.

Third, changes of the discourse were examined within the theory of articulation to see how the discourse about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was restructured into the discourse practice.

Results show that the case of the "Chung Yoon-hoi's dossier" in November, 2014 had two main discourses: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and "gossip." The discourse about the "secret commander's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articulated with the "president's close three allies" and "intervention in state affairs." Meanwhile, the "gossip discourse" tried to turn readers' attention to the leaking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not to the improper influence on governmental affairs by articulating with the "leaking of the confidential document" and "prosecution-led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tervention in the personnel affair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two major discourses about the "personnel affairs gate scandal" and the "deep-rooted bad practices in sports circle" articulated with discourse factors to fortify logicity. And regarding the allegation against the Mir, K-Sports Foundation, the discourse about the "Choi Soon-sil gate" and the "voluntary funding by conglomerates" conflicted.

Fourth, the discourse competition structure surrounding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related issues and differences in partisanship were analyzed. The statements of the three rounds of apologies about Choi Soon-sil's wrong influence on governmental decisions released by the president brought a reverse effect amid controversy over the truth of the statement.

Regarding the plans to normalize the state affairs, differences in discourse strategies by partisanship were observed. The progressive newspapers consistently urge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Meanwhile, the conservative newspapers constantly changed their discourse strategies from "fence-sitting

president”, “switching to acting president system”, and “orderly resignation” to “impeachment, inevitable.”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secret seven-hour meeting after the sinking of Sewol Ferry, the progressive newspapers wrote that the president failed to perform her duties even if she was in the presidential residence on the day the ferry sank. Meanwhile, the conservative Chosun Ilbo argued that the progressive newspapers imprudently cast doubts on the president.

Regard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hearings of conglomerate leaders and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the overall tone of a newspaper differs based on partisanship.

Regarding the hearings and prosecution investigation of heads of conglomerates who were involved in the illegal funding, most of the conservative newspapers strongly defended the conglomerates arguing that they were “victims” and discoursing “economic crisis.” Meanwhile, the progressive newspapers urged reformation of the conglomerates saying the funding was a part of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In the discourse about the impeachment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both of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newspapers used “acceptance frame.” However, the two sides disagreed on the timing of summons of the president for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While the progressive newspapers emphasized that custody investigation of the president was justified, the conservative newspapers stressed that the presidential investigation should be made without deten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the mechanism of news discourses about the unprecedented presidential impeachment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was revealed in the frame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various methodological attempts for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ere

made to produce meaningful results. Results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codification of methodology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discourse theory.

**Key words:** impeachment of presiden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media discourse, theory of articulation, partisanship, discourse competition